

2025년 대선 평가와 전망

191

연남동에서

특집

쟁점분석

사회운동사

역사읽기

누가 정치권력의 견제자가 될 것인가

만성화된 헌정 위기와 국민주권정부의 위험성

이재명 정부, 쟁점과 전망

주류가 된 유럽 포퓰리즘

사회진보연대의 반핵평화운동과 한일연대

프롤레타리아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본 10월혁명

2025년

여름호

계간 사회진보연대 • 2025년 여름호 • 통권 191호

2025년 대선, 평가와 전망

계간 사회진보연대 • 2025년 여름호 • 통권 191호

2025년 대선, 평가와 전망

발행일 | 2025년 6월 20일

편집 | 임필수, 김영진, 김진영, 임지섭, 정성진

표지 | 상호정

발행인 | 임필수

발행기관 | 사회진보연대

등록일 | 2019년 6월 4일

등록번호 | 용산, 바00067

주소 | 서울 마포구 동교로29길 14-1 거산빌딩 3층

전화 | 02-778-4001

팩스 | 02-778-4006

ISSN | 1599-2284

납권 | 1만 5천 원

정기구독 | 연 6만 원 [기업은행 208-155464-04-026 사회진보연대]

구독문의 |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http://www.pssp.org>

계간 사회진보연대 • 2025년 여름호 • 통권 191호

2025년 대선, 평가와 전망

연남동에서	누가 정치권력의 견제자가 될 것인가	5
특집	만성화된 헌정 위기와 국민주권정부의 위험성	10
	이재명 정부, 쟁점과 전망	39
쟁점분석	주류가 된 유럽 포퓰리즘	72
사회운동사	사회진보연대의 반핵평화운동과 한일연대	122
역사읽기	프롤레타리아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본 10월혁명	164

연남동에서

누가 정치권력의 견제자가 될 것인가

편집진은 이번 여름호를 6월 3일 대통령 선거 후에 평가와 전망을 담아서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여름호는 6월 초에 나가야 하지만, 대통령선거 결과를 담아서 내는 게 더 쓸모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집 주제도 ‘2025년 대선, 평가와 전망’이다.

특집의 첫 번째 글, 임지섭의 「만성화된 헌정 위기와 국민주권정부의 위험성: 21대 대선 분석과 평가」는 이번 21대 대선을 거치며 한국의 헌정 위기가 만성화되었다고 평가한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치러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권심판과 정권교체를 넘어 유례없이 심각해진 헌정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어야 했다. 그러나 탄핵 국면은 물론이고 대선 국면에서도 헌정 위기 해소를 위한 ‘정치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양대 정당이 더 이상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을 유지하지 못하고, 공적 자산을 둘러싼 과당 간의 내전에 몰입하면서 사실상 반헌정세력으로 전락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진보당과 민주노총 집행부가 민주당의 정권교체론에 노골적으로 편승함으로써, 독립성과 비판력을 상실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는 점 역시 지적한다. 필자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내란세력 척결’과 ‘압도적 정권교체’를 내세우며 대선 국면을 주도했지만, 그들도 과거 다수당으로서 권한을 남용하

고 법치주의를 위협한 주체였다는 점에서, 정권교체 자체가 곧 헌정 위기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민주권정부가 국가재정과 검찰/사법부 개혁을 명분으로 권력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제도와 관행을 해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민주정과 헌정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이야말로 독립적 비판세력으로 민주당의 인민주의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가운데, 만성적 헌정 위기와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글, 임필수의 「이재명 정부 쟁점과 전망: 누가 정치권력의 견제자가 될 것인가」는 앞의 글을 보충한다. 필자는 과거 문재인 정부를 보며 그 위험스러운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검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명분으로 독립성을 위협하고 그럼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통한 법의 지배의 실현이라는 현대 정치의 원리를 부정했다. 둘째, ‘부두 경제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경제학적 근거가 없는 경제정책을 도입하고자 했다. 이 역시 정부의 경제정책은 확립된 경제이론을 전제로 한다는 현대 경제정책의 원리를 부정하는 행동이었다. 셋째, 반일민족주의를 선동하면서 외교 사안까지 정치화하는 극히 위험스러운 시도를 밀어붙였다. 필자는 이를 포퓰리즘(인민주의)의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한층 더 나쁜 방향으로 밀고 나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정치권력을 내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사법부의 권위와 역량을 해체 또는 축소하려 한다. 또한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반기를 들 수 있는 국가의 경제장치 중에서 핵심부문인 예산기능을 떼어내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고 한

다. 이는 마치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과 기획재정부가 ‘정부 내 야당’ 역할을 했던 악몽을 이번에는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도 한다. 필자는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고, 법치나 경제정책의 원리를 무시한다면 이는 사실 현대국가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집중분석’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눈을 돌려 유럽의 정치 상황을 살펴본다. 김영진의 「주류가 된 유럽 포퓰리즘: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는가?」는 최근 유럽 각국에서 주류 정당이 된 포퓰리즘 세력의 행태를 분석한다. 먼저, 포퓰리즘과 헌정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분석한 우르비나티 교수의 설명을 소개한다. 그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정당, 언론, 사법부를 비롯한 현대 민주주의의 매개조직을 훼손한다. 포퓰리스트들은 매개조직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되, 과당적으로 활용하고 사유화하고자 한다. 그 결과 정치체제 전반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은 헌정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다. 필자는 이러한 틀에 따라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포퓰리즘 정당과 정치인의 최근 행태를 살펴본다. 최근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거나 기존 의회의 정당 지형을 바꾼 국가이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구체 맥락은 다르지만, 포퓰리즘 정치세력은 대체로 매개조직에 공격적이며, 특정 정치인 혹은 분파가 정당을 장악하고 실용적 수사와 정책을 바탕으로 집권에 성공한 뒤, 권력을 활용해 매개조직을 적극적으로 손상시키는 권위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나아가, 유럽통합의 위기로 부상한 포퓰리즘 정당들은 국가 간 매개조직도 적대시한다. 필자는 주류가 된 유럽 포퓰리즘 정치세력이 각국의 헌정과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극단적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유럽정치의 복원과 재건은 이들 포퓰리즘 세력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렸다고 주장한다.

「사회운동사로 읽는 김진영의 『사회진보연대의 반핵평화운동과 한일연대: 1998~2025년』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80년, 한반도 해방 80년을 맞아, 1998년 출범한 사회진보연대가 펼친 반핵평화운동과 한일연대의 역사를 정리한다. ‘모든 핵무기에 대한 반대’를 원칙으로 ‘반핵평화’를 강조하는 기조와 실천은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회진보연대의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를 발본적으로 평가하면서, 소련의 핵무장은 ‘사회주의를 방어하는 핵’이 아니라 세계를 위협하는 절멸적인 미소 핵 경쟁의 한 축이자, 세계 반핵평화운동을 분열시키고 인민에 대한 국가주의적 억압으로 귀결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진보연대가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은 ‘모든 핵무기 반대’를 원칙으로 삼고자 했다. 더구나 탈냉전 시대에도 끝나지 않은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해소할 길은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는 대중적 반핵평화운동밖에 없었다. 2003년 이후 북한의 핵무장 시도가 본격화하면서, 사회진보연대는 북핵이 한반도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심화하는 요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회운동세력, 특히 일본의 반핵평화운동과 연대했다. “냉전 이후 핵 감축의 시대”가 끝나고 강대국들의 핵 경쟁이 다시 개시될 조짐을 보이며,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개발에 매진하는 현 상황에서, 필자는 모든 핵무기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한다.

「사회주의 역사 읽기」는 샤를 베틀렘의 『소련에서의 계급투쟁』 1권 전반부를 다룬 정성진의 「프롤레타리아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본 10월 혁명」을 수록했다. 이 글은 베틀렘의 분석을 통해 소련의 실패를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그 교훈을 되살릴 필요성을 제기한다. 연재의 서론 격인 이번 글은, 사회관계와 계급투쟁의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분석하며 실천의 성격을 판단하는 베틀렘의 역사관을 해설한다. 이어서 1917년 2월 혁명에서 10월 혁명까지의 사회관계 변화를 베틀렘의 분석에 따라 정리한다. 세계대전으로 인한 초유의 경제위기와 대공세 실패 속에서 볼셰비키의 이데올로기 투쟁은 도시 프롤레타리아 형성을 가능케 했고, 이들이 농민운동과 결합해 10월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나 10월 혁명 이후에도 경제난과 혁명 지속을 둘러싸고 당·정부·노동자·농민 간의 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베틀렘은 이를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의 결합'이라는 과제로 정리했다. 다음 글부터 내전기와 신경제정책에 대한 베틀렘의 분석을 살펴보고,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선포로 시작된 계엄-탄핵 정세가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일단락되며 한국의 정치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독자 모두 숨 가쁜 6개월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도착한 이 국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분히 돌아볼 때다. 이번 기관지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5년 6월 20일

임필수

만성화된 헌정 위기와 국민주권정부의 위험성

21대 대선 분석과 평가

임지섭(정책교육국장)

1. 이번 대선은 무엇이었나

이번 21대 대선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여당 민주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귀결되었다. 돌이켜보면, 이번 대선은 문민화 이후 초유의 헌정위기 사태로 인해 치러졌다. 3년 만에 치러진 조기 대선의 직접적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였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야당과의 갈등으로 인한 교착상태를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고 군경을 동원해 주요 정치인과 전직 법관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지난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화 이후 한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였다. 게다가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반성 없이 지지자를 선동하며, 선거불복의 정치문화를 사법불복과 물리적 폭력에 의한 법치 파괴로까지 악화시켰다. 이렇게 헌정 파괴의 우두머리가 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사필귀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 3년간 한국 사회에서 극단화된 정치적 양극화와 각 정치세력의 자제 없는 권한 행사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우려했다. 지난 3년간 민주당의 대선불복과 윤 전 대통령의 총선불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국회(야당) 간의 극렬한 갈등 속에서 심화한 헌정 위기가, 앞으로 도 만성화될 수 있음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렇게 민주정의 퇴보와 붕괴가 우려되는 현 정세에서,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헌정 위기를 종식할 방안을 모색하는 ‘정치의 시간’을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¹

그러나 탄핵 이후 전개된 대선 국면에서도 ‘정치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 대선 국면에서 핵심 화두는 ‘헌정 위기 해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세력 척결과 압도적 정권교체’였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의 핵심은 극단적 헌정 위기를 초래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심판과 정권교체였지만, 동시에 그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역시 그간 다수당 지위를 남용해 헌정을 위협해 온 데다 이제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국민의 뜻’을 내세워 폭주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강하게 작용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사회진보연대는 반(反)경제학과 법치 파괴라는 측면에서 민주정을 인민정으로 타락시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포퓰리즘(인민주의)이 갖는 위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운동이야말로 민주당 비판과 심판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왜 정치의 시간은 오지 않는가”, 《사회운동포커스》, 2025년 1월 22일.

다.²

그러나 지난 3년간 한국 정치와 민주정의 위기는 더욱 심화했다. 이는 무엇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양당의 정당 민주주의가 돌이킬 수 없이 붕괴하는 가운데, 두 정치세력이 대통령직과 국가권력을 놓고 더 이상 '적대적 공생'조차 아닌, 적대적 내전과 헌정 파괴를 무릅쓰는 데까지 치달았기 때문이다. 즉, 양대 정당이 정치적 경쟁을 통해 입법부를 구성하는 민주정의 축이 아니라, 공직을 비롯한 공적 자산을 경쟁적으로 약탈하는 반헌정세력의 핵심 축이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진보당과 노동운동 일각 역시 민주당의 압도적 정권교체론에 편승해 내전의 한 축을 자임하며, 헌정 위기를 심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요컨대, 이번 대선은 문민화 이후 유례없는 헌정 위기에서 비롯되었지만, 정작 그러한 위기를 초래한 양대 세력이 다시금 서로를 핑계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헌정 위기를 만성화하는 길로 나아가리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대선 국면을 전후로 양대 정당 내부에서 나타난 정당 민주주의의 붕괴를 중심으로 만성적 헌정위기의 단면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집권에 성공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을 내세워 법치와 재정을 중심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고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오히려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한다. 이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지지를 노골화하며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 운동을 파산시킨 진보당과 민주노총 집행부의 행보를 지적하면서,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인민주의를 비판하는

2 “2022년 대통령선거에 대한 사회진보연대의 현재 인식”, 《사회운동포커스》, 2021년 11월 11일.



사회진보연대는 대선후보 TV 토론 기간에 경제, 정치, 노동·사회, 외교에 대한 각 후보의 공약과 입장에 대한 논평을 《사회운동포커스》 시리즈로 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말하지 않는 대선”(5월 23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겠다 말하지 않는 대선”(5월 29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축소를 말하지 않는 노동·사회 공약”(5월 30일), “트럼프 주위에 편승하려는 양당 외교정책의 위험성”(6월 2일). (사진출처: 《경향신문》)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만성적 헌정 위기를 해소하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역량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대선 이후 사회운동의 과제를 도출해본다.

2. 만성적 헌정 위기를 초래하는 정당 체계의 타락

1) 팬덤 당원이 주도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2024년 총선을 거치며 오히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전략했다.³ 그는 대선 패배 직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해 승리하고 8월에

3 “민주당의 혁신=이재명 대표의 일인지배?”, 《사회운동포커스》, 2023년 8월 16일. “민주당 공천 파동, 이재명당의 완성인가”, 《사회운동포커스》, 2024년 3월 6일.

는 당대표로 선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이 짧은 시기에 신규 당원이 14만 명 증가했는데, 대부분 중앙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입당한 ‘팬덤 당원’이었다.⁴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은 이들 당원의 권한을 강화했다.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투표 비중은 낮추고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은 높이는 한편,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의원에 대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당헌 개정을 의결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의 권력을 강화하여 당내 경쟁자를 배제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이어진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비명횡사’라는 말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비명계 인사 다수를 경선 없이 탈락시키고, 친명계 인사를 전략공천으로 대거 투입하면서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격렬한 갈등과 논란이 불거졌다. 극심한 공천갈등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팬덤 당원과 친명계 일색의 의원이 주도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되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의 압도적인 당내 지위를 재확인하는 과정이자, 이른바 ‘팬덤 당원’이 민주당을 주도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리였다. 4월 14일부터 시작된 경선에는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나섰다. 이후 세 차례 토론회와 지역별 순회 연설회를 거쳐, 4월 27일 이재명 후보가 89.77%의 압도적 득표율로 선출되었다. 불과 4년 전인 2021년 11월 치러진 20대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와의 격렬한 경쟁과 대장동 비리 논란 속에서

4 박상훈 외,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67호, 2023년 5월 1일.

50.29% 득표율로 승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총선을 거치며 이재명 전 대표가 당내를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다만 후보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원 중심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차례 반복됐다. 민주당이 2012년 18대 대선 경선부터 시행된 완전국민경선제(당원 외에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를 폐지하고, 권리당원(6개월 이상 당원이면서 1년 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안심번호로 추출한 100만 명) 여론조사 50%로 선출하도록 결정하자, 김두관 후보가 이를 비판하며 경선 불참을 선언했고, 김동연 후보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 추대 경선’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완전국민경선제를 폐지하는 이유로 당원 중심 민주주의 강화와 역선택 방지를 들었다. 본래 완전국민경선제는 정당의 대선 후보자를 결정하는 예비선거를 대중에게 개방하는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를 모델로 하는 것으로, 3김 정치 시대에 제왕적 당 총재나 일부 상층 핵심 정치인이 마음대로 당내 공천권을 행사하던 정당의 비민주성 문제를 개혁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넓힐 방안으로 2000년대부터 주목받았다. 물론 지역 기반이 취약한 민주당에 완전국민경선제가 도입되면, 정당이 여론에 좌우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컸다.

문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강화하는 당원 중심주의가 정당의 민주주의를 더욱 타락시키는 방향이라는 점이다. 『협오하는 민주주의』의 저자 박상훈은 대권을 지향하는 지도자 1인이 팬덤 당원과 직접 결합하여 당내 권력구조를 수직화하는 현상이 정당의 대표 기능과 정책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르면, 본래 정당의 핵심 구조는 지역

을 기초로 오랫동안 활동하는 당원이 아래로부터 위로 대표성을 쌓아가는 대의원 제도다. 정당은 이러한 대의원 제도를 바탕으로 이념과 정책에 기반한 안정적 정체성과 정치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반대로 지역 기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팬덤 당원은 기존의 지역과 대의원 기반의 정당 구조를 해체하고, 당원과 당대표를 직접 연결하는 정당 구조를 지향한다. 또한, 이들은 당의 활동 전반을 자신의 지도자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해 의원이나 당직자의 일상 활동에 직접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이를 통제하고자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통치구조에서, 팬덤 리더와 당원이 지배하는 정당은 당직과 공직, 결정적으로 대통령직을 장악하기 위한 게임의 수단으로 전략하고 만다.

결국 민주당은 김대중이라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사당(私黨)에서 출발하여, 전국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참여’ 정당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지도자 1인과 그를 지지하는 팬덤 당원이 직접 결합하는 인민주의적 정당으로 완전히 귀결된 셈이다. 박상훈은 이를 “정당은 사라지고, 팬덤만 남는 현상”이라 표현한다. 그러면서 대의제의 핵심 제도인 정당의 민주주의가 파괴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에 대한 대표성과 책임성 모두가 상실된 정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2) 보수주의에도 미달하는 기생정당 국민의힘

민주당이 이재명과 팬덤 당원이 지배하는 인민주의로 완전히 타락했다면, 국민의힘은 보수주의에도 미달하는 기회주의적 당권파가 당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돌이켜보면, 국민의힘은 2020년 총선 대패 이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결집한 극우 태극기세력과 거리를 두고, 탄핵 이후 분열했던 바른미래당 세력을 재규합하며 탄생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에 힘입어,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데 이어 202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에 국민의힘은 박근혜 정부 시기의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제왕적 대통령을 중심으로 계파를 형성하고 당권과 공천권을 장악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기생적인 집권여당의 면모를 반복했다. 2022년 하반기 이준석 당대표를 축출하고 이듬해 3월 김기현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논란과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논란이 터져 나왔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비슷하게 친윤계 지도부가 당대표 선출을 위한 3차 전당대회 규칙을 기존 ‘당원투표 70%와 여론조사 30%’에서 ‘당원투표 100%’로 바꾸기로 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비윤계 의원이 크게 반발했다. 이후 친윤계 일색의 김기현 당대표 체제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작동한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 대패로 좌초했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서 2024년 총선 대패로 무너졌다.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행한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무능을 넘어 극단으로 치달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새누리당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친윤계를 비롯한 상당수 의원이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거나 대통령 탄핵 반대에 몰두했다.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 해제에는 앞장섰지만 이내 대통령 탄핵과 정국 수습 방안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고 권영세 비대위 체제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섰다. 심지어 1월에 이르러 극

우세력을 중심으로 한 탄핵 반대 집회가 최고조에 이르고 윤석열 지지자가 서부지법을 침탈하는 사태마저 일어났는데도 이들과 전혀 선을 긋지 않으면서, 극우에 잠식된 ‘내란의힘’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이후에도, 권성동과 권영세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당 지도부는 오직 당권 장악에만 몰두했다. 대선후보 예비경선으로 압축된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4인 구도는 국민의힘 내에 존재하는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 구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런데 예비경선을 거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2인 구도로 결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 대망론이 급부상했다. 한 전 총리 본인은 이재명 집권을 저지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이루기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향후 선출될 대선 후보에게 (특히 한동훈 후보에게) 당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당권파의 술책과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데 결선에서 최종 승리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소극적으로 나서자, 권영세·권성동 지도부는 경선을 거쳐 전 당대회에서 선출된 대선후보를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긴급 의결로 강제 교체하려고 시도하는 초유의 ‘당내 쿠데타’를 감행했다. 이는 당헌 제74조 2항에 따라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비대위 의결로 대선후보 선출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인데, 당원 여론조사 결과 당원 대다수가 원하는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가 거부하므로 그의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5월 10일 새벽 2시 반에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3시에 새 예비후보 등록을 공고한 뒤, 4시에 한덕수 입당과 후보 등록 완료로 이어진 한밤중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담판이 성과 없이 끝나자, 국민의힘 당권파는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등록하는 초유의 '당내 쿠데타'를 감행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사태는, 국민의힘 당권파가 당권을 위해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놀랍게도, 김문수 대선 캠프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당권파와 탄핵 반대 세력을 모두 아우르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김문수 후보 자체가 2020년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보수통합이 '광장 세력을 도외시킨다며' 탈당한 뒤 전광훈 목사 등과 함께 자유통합당을 창당한 이력이 있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과정에서 역시 탄핵 반대 집회 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었기 때문일 것이다. 뒤늦게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내세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당 차원

의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내세웠지만, 만시지탄이었다.

게다가 김문수 캠프는 반이재명 외에 전통적인 보수주의라 할 만한 정책조차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은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용도일 따름이었고, 경제 부문 공약 역시 규제 혁파 (이재명 후보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재정 지출에 의존하는 것뿐이었다. 외교 역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다자간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상황에서 구호뿐인 한미동맹 강화만을 제기할 따름이었다. 선거 기간 내 내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를 지적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한편,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당권을 거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논란만 나올 뿐이었다.

『보수주의: 전통을 위한 싸움』의 저자 에드먼드 포셋은 유럽과 영미의 보수주의를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하며, 큰 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는지를 기준으로 보수주의를 자유보수주의와 비자유보수주의로 구분한다.⁵ 그에 따르면, 자유보수주의는 19세기에 선거민주주의를 수용한 데 이어, 20세기에는 전후 케인즈주의와 경제민주주의를 일부 수용하고 탈냉전 시기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 금융세계화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자유주의와 타협하며 주류화했다.

다만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보수주의 역시 방향을 잃고 분열했는데, 특히 2007~09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기존의 주류 자유보수주의가 표류하는 가운데 인민주의적 '강경우파'가 대변하는 비자유보수주의가 새로운 주류로 부상했다. 이들은 △

5 포셋의 『보수주의』에 대한 자세한 평가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박상현 외, 『자유주의의 역사: 인민주의 비판을 위하여』, 공감, 2024.

배타적 자국민주의 △ 교조적 초자유주의 △ 문화적 전통주의 △ 인민주권에 대한 호소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 이기적인 엘리트와 좌파라는 내부의 적에게 희생된 선량한 다수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며 직접행동과 단일한 인민의 의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인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한국 정치에 대입해 보면,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을 겪으며 주류 보수주의가 붕괴하고 영남 지역당으로 퇴보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강경우파가 확산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 내외에서 발호하는 이러한 ‘강경우파’와 명확히 절연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반대와 지역주의 정서에 의존해 당권 장악을 위한 내부 갈등과 경쟁에 몰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은 이러한 기회주의적 보수세력의 위기와 극단주의의 위협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즉, 한국의 보수세력은 덕성과 능력에 기초한 정치문화를 강조하며 현대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보존하는 보수주의의 이상과는 전혀 관련 없이, 인민주의적 강경우파와 당권을 둘러싼 기회주의의 사이에서 표류하며 반(反)헌정세력으로 기우는 가운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더욱 확보하는 거름만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⁶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6 이렇게 볼 때,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주장하는 ‘보수 혁신’ 역시, 정당 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한 관점이나 역량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보수세력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강경우파와 명확히 절연할 것을 올바르게 요구하지만, 이는 한국 민주정의 위기를 직시하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선 직전 당권을 둘러싼 낮 뜨거운 내용이 벌어진 데서 볼 수 있듯, 개혁신당 역시 지역 기반과 정당 체계가 취약하다. 또한, 이준석 의원은 아주 적극적으로 팬덤 정치를 지향한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보수정당의 제도와 문화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그의 지지자들에서 팬덤 정치의 면모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은 당권을 둘러싼 내부 경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보수 혁신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

3) 소결: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체계 타락의 악순환

제왕적 대통령제의 결함과 결합한 정당체계의 타락이 한국 민주정에 미치는 위협은 더 이상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다툼’이나 ‘적대적 공생’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 수위에 달했다. 한쪽에서는 대선 불복을 위해 다수당의 권한을 최대한 남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두둔하거나 옹호하며 정치과정과 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데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화하는 가운데, 두 정당 모두 당내 민주주의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정당의 지역 기반과 대의원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거대 양당은 팬덤 당원이나 검증되지 않은 ‘반짝 스타’에 취약한 정당이자 권력 쟁취를 위해 상쟁하는 파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3년을 거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원주권과 국민주권을 더욱 강조하면서, 대의제 붕괴와 인민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거대 양당이 오히려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선 직후, 강준만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우리가 정작 무서워해야 할 것은 ‘극우’라기보다는 ‘정치의 이권화’”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치에서 가시화된 극우와 날로 극심해지는 진영주의의 토양에 ‘정치의 이권화’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우’보다 무서운 ‘정치의 이권화’”, 《경향신문》, 2025년 6월 4일.) 막강한 임명권과 재정권을 갖는 대통령 직을 차지하기 위한 승자독식 체제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

한다면, 한국 민주정의 위기는 반복해서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의 역사이기도 한 한국헌정사에서, 한국의 정당정치 역시 제왕적 대통령을 둘러싼 경쟁에 매몰되었다는 평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2020년대에 이르러 정당이 팬덤 정치에 잠식되고, 당직과 공직을 장악하려는 파당 간의 '내전'으로 정당체계가 악화하면서 만성적 헌정 위기를 초래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3.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목해야 할 쟁점

6월 6일, 대통령실은 새 정부를 부를 때 '이재명 정부'라는 공식 명칭과 함께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주권'은 극우세력과 민주당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구호였다. 극우세력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며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심판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역시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유력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며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강조하는 국민주권론은 현대 민주정의 핵심 원리를 부정하고 파괴하며 이를 인민주의로 대체하려 한다는 점에서, 헌정 위기를 영속화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기 사법부와 국가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내세워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제한 장치를 약화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1) 국민주권의 변형을 지향하는 정치이념으로서 인민주의

윤종희 교수는 포퓰리즘을 ‘국민주권’ 원리를 변형하며 대표제 민주주의를 내부로부터 전복하려는 정치이념으로 규정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 인민: 포퓰리즘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변형시키는가?』의 저자 우르비나티 교수 역시 정치지도자와 ‘진정한’ 인민 사이의 신앙적 신뢰에 기초해 정당, 언론, 국가기관, 독립된 사법부와 같은 매개조직을 약화하거나 수단화하면서 지도자를 책임성으로부터 면제하는 ‘직접 대표제’를 추구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고 설명한다.⁷

대표제 민주주의에 기반한 현대 민주정에서 국민주권 원리는, 구체적인 현실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인민과 구별되는 추상적 집합체로서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이, 대의제를 통해 간접통치를 확립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선출된 부분으로서 대표는 전체를 대표하기 위한 정치적 과정과 정당, 언론, 독립된 사법부와 같은 여러 매개조직을 거치며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대중의 의견과 의지 사이에 시공간적 거리감을 유지한다.

그런데 인민주의는 구체적인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민을 인위적 집합체인 주권자로서 인민, 특히 특정한 지도자나 대표자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진정한 인민’과 일치시키려 한다. 그러면서 권력자와 인민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매개조직을 약화하거나 파당적으로 소유하며, 인민의 의견과 의지를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나아가, 인민주의는 다원주의와 다수의 지배를 결합하는 현대 민주

7 윤종희, 「포퓰리즘, ‘국민주권’의 변형을 지향하는 정치이념」, 《사회와역사》, 2022. 우르비나티 교수가 규정하는 포퓰리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논문과 이번호에 실린 김영진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정의 다수결 원리 역시 다원주의를 제거한 다수의 지배로 변형시킨다. 이들에게 선거는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이 아니라, 다수파로서 정당성을 확인하는 의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선출된 권력을 제어하고 견제하는 제도나 정치적 관행은, 다수의 ‘진정한 인민’의 의지를 가로막는 소수의 기득권 엘리트의 방해물일 따름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원주권’을 내세워 인민주의적 정당으로 완전히 귀결된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국민주권’을 내세워 권력에 대한 제한과 견제를 무력화하며 민주정을 인민정으로 타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입법권 독주에 앞장선 민주당이 대통령직을 장악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법치주의, 재정건전성, 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 (“법치 위에 정치가 서지 않도록”, 《경향신문》, 2025년 5월 25일.) 즉, “재정 지출이 인기영합적으로 확대될 경우 국가 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고, 형사사법 제도의 설계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변동되면 권력형 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선 과정과 집권 직후 나타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보를 볼 때, 사법부와 국가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앞세운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가 앞으로 국민주권정부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2) 법치와 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국민주권정부’의 위험성

먼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살펴보자. 대선을 한 달여 앞둔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소 이례적인 절차와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극렬히 대법원과 사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예를 들어, 한민수 의원은 SNS에 ‘사법쿠데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 출연해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국민주권을 침해했다면서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 아닌가”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의 격앙된 반응은 사법부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활용해 피선거권을 박탈하여 대선에 개입할 수 있다는 공포에서 출발하여,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국민주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달린 중대한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물이라든가 국민 다수가 지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대해 판결하려는 사법부가 국민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전형적인 인민주의적 민주주의관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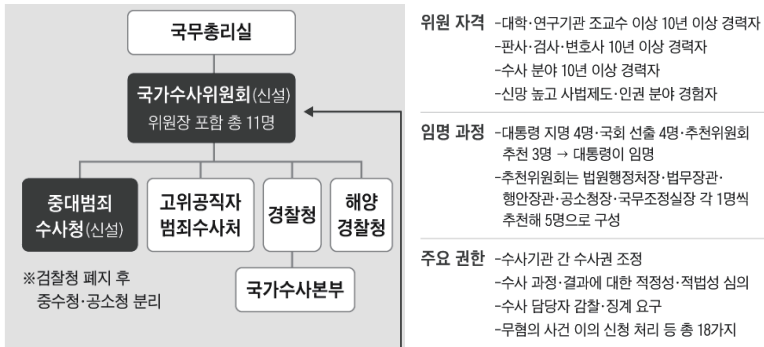
이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청문회를 거론하면서, △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을 일부 임명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을 재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의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쏟아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이재명 1인을 위한 입법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도층 민심 이반마저 감지되자, 이 후보는 곧바로 자기 뜻이 아니라며 발을 뺐다.⁸

그러나 사법부 개혁은 대선 공약집에 명시되었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인 4일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적용해 공판기일을 추후지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직접 나서 법원 개혁의 속도를 조절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당장의 입법 드라이브는 멈췄지만, 언제든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가 재발할 수 있다.

한편, 다음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함께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의만 수용하고 민정수석실 산하에 사법제도비서관을 신설한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내란 세력 척결'에 검사를 대규모로 동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장악력을 높이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과 기소를 제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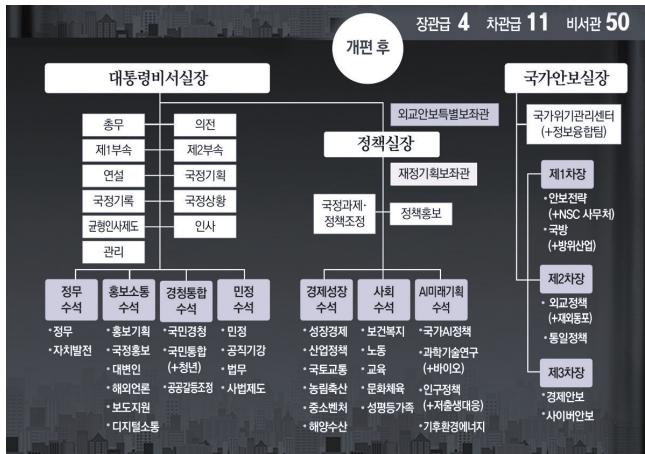
8 민주당의 권영국 후보 역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와 법사위 가결에 대해 "특정인 구제를 위한 신속 입법"이라고 지적하며, "의회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특정 목적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권력 남용을 질타했던 시간을 되새기는 일이다. 이러한 입법 행위는 보편적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권력 남용을 질타했던 시간을 기억하라', 2025년 5월 10일.



나아가, 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 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6월 11일에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바뀌어, 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의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다. 한편,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가 모든 수사기관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수위원 11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조인 외에 비법조인도 위원이 될 수 있다. 검찰청을 헌법 개정 없이 해체하는 입법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러한 안은 수사와 기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실상은 살아 있는 정치권력이 수사권을 더욱 통제하고 장악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⁹

9 본래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살아 있는 권력’의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있지 않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유착한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개혁의 핵심 방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과 함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선출된) 대통령의 수사과 기소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한다는 점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검찰개혁 방향에 완전히 역행할 따름이다.

다음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살펴보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불황과의 일전’을 치를 것이라며 경제성장과 재정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이은 두 번째 인선으로 대통령실 경제팀을 우선하여 발표했다. 먼저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고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으며, 정책실장 산하에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하고 역시 확장 재정 필요성을 지지하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이러한 인선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해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실은 정부 부처 위에 군림하며 정책결정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핵심 병폐 중 하나로 지적된다. 『청와대 정부』의 저자 박상훈은 “제어되지 않는 ‘강한 청와대’는 ‘민주적 책임 정부’와 양립할 수 없는 형용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역대 정부는 모두 청와대와 대통령실 권력 축소를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통령실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초기 인선을 발표했다. 특히 정책실장 산하에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하고 민정수석 산하에 사법제도비서관을 신설하여, 국가재정과 사법부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동아일보》)

한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예산처로 독립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이전부터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특히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왕 노릇”을 하고 있으므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쪽지 예산’ 논란이 잘 보여주듯 입법부인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의결이 실질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 편성권을 정부 부처에서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더욱 소수의 권력자 손에 쥐여주어 재정의 정치화를 심화하는 방향일 뿐이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정지출 확대의 내용과 재원조달 수단도 문제다.¹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형태의 전국민 지원금을 핵심으로 하는 약 21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자를 공약했다. 당선 직후 이 대통령이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공약은 곧장 추경안과 2026년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일정한 재정지출은 물론 필요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적 부조의 영역일 뿐이고, 소득 지원 정책으

10 이재명 후보의 경제 부문 공약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말하지 않는 대선”, 《사회운동포커스》, 2025년 5월 23일.

로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건 언감생심이다. (민주당은 2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을 1%p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산업에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산업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 역시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도외시한 터무니없는 기대일 따름이다. 실제로 첨단산업 육성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논외로 하더라도, 생산성 한계와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수출 재벌체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대규모 재정지출을 위한 재원 마련 수단으로 적극적인 국채 발행만을 강조한다. 윤석열 정부 시기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알 수 있듯, 장기저성장이 고착하고 경기침체가 심화하며 정부 재정 여력에도 제약이 크다. 이런 조건에서 조세 기반을 확대하는 증세 없이 국채 발행에 의존할 경우, 부채위기가 가속될 것이고 그로 인한 금리와 물가 상승 압력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무겁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간 윤 정부와의 정략적 대결에 몰두하며 정부 재정지출에만 의존해 온 민주당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재정정책에도 미달하는 산업정책과 선심성 소득지원 정책은 경제성장은커녕 일시적 경기부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스태그플레이션과 부채위기가 결합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심화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약화할 따름이다.

요컨대,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심각한 조건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강력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독선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위기를 해결하는 좁은 길을 성공적으로 걸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재정 지출 확대를 만병통치약으로 삼기 위한 기획재정부 해편

과, 이재명 정권에 대한 사법적 견제를 무력화 하기 위한 검찰과 사법부 개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악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국의 민주정을 위협하는 핵심은 ‘우클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내세워 권력에 대한 제한과 견제를 약화하고 구조적 위기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국민주권정부’ 그 자체에 있다.

3) 사회운동은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더욱 큰 문제는 문민화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것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할 세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수세력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함께 다시 한번 자멸한 가운데, 진보당과 민주노총이 민주당의 내란세력 청산과 압도적 정권교체에 부화뇌동하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노골화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헌정 위기를 심화하는 인민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위협하다는 문제의식을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 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거대 양당 사이의 정치적 경쟁이 만성적 헌정 위기를 초래하는 과당 간의 내전으로 악화하는 가운데, 진보당과 노동운동 일각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세력 척결에 부화뇌동하며 노골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에 이르렀다. 진보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반윤 범야권연대가 필요하며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에 참여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는 야5당 원탁회의(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

당, 진보당)를 통해 민주당과 적극적인 연대연합을 추구했다.¹¹

4월 19일 진보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재연 상임대표는 5월 9일 ‘광장연합의 힘을 통한 압도적 대선 승리’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광장대선 후보’로 지지한다며 사퇴했다. 이후 김 대표는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 되었고,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간부들은 각지에서 이 후보 선대위와 선거 유세에 적극 참여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이를 두고 “과거 정의당처럼 후보를 내고 단일화를 조건으로 정책연합이라도 추진한다면 모르지만, 후보도 안 내면서 연합한다는 것이 어디 있나”라며 “소수정당이나 다양성에 기초한 연합이 아니라 위성정당을 포함한 지배연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헌정수호합의 민주당 등 야5당, 교섭단체 논란 왜?”, 《경향신문》, 2025년 4월 27일.)

진보당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해 비례 순번 15번을 받고 계속해서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던 손솔 전 수석대변인이 이재명 정부 안보실장에 발탁된 민주당 위성락 의원 궐원을 승계함으로써, 국회 의석을 4석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실리에 취한 진보당은 앞으로도 내란세력 척결과 사회대개혁을 명분으로 민주당의 지배연합에 편승하는 데 더욱 앞장서면서, 과당 간의 퇴행적 경쟁으로 헌정 위기를 만성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11 2020년대 야권연대의 흐름에서 소수정당을 흡수하는 새로운 무기가 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비판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임필수, 「2020년대 야권연대의 흐름과 쟁점」,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4년 봄호. 또한, 진보당이 민주진보연합노선을 내세워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고 민주노총 총선방침을 무력화 하며 분열시킨 것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박준도,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4·10 총선」,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4년 여름호. 이번 대선에서 진보당과 민주노총 집행부가 보인 맹목적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에 대한 사회진보연대의 비판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민주노총 간부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를 비판한다”, 《사회운동포커스》, 2025년 5월 20일.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대선후보 사퇴 이후 5월 14일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에 참석해 “진보당은 민주수호 광장의 시민사회, 제 정당들과 함께 극우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광장대선후보’로 선언했습니다. 빛의 광장, 그 뜨겁고 간절한 힘으로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사진출처: 진보당)

또한, 진보당은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에 편승해 자당의 정치적 복권을 이루기 위해 지난해 총선에 이어 다시 한번 민주노총을 정치적 분열로 내몰고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 지난 총선에서 양경수 집행부는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위성정당 참여 금지를 규정한 민주노총 총선방침 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정파의 이해를 앞세워 민주노총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이번 대선에서도, 양경수 집행부는 진보당의 노선을 따라 민주노총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선방침을 통과시키려 시도했다. 4월 29일 중집에서 ‘진보정당 후보’뿐만 아니라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후보방침을 제안한 것인데, 사실상

이재명 후보 지지를 열어두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격렬한 반발이 잇따르면서 이러한 대선방침을 확정짓지 못했음에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는 5월 15일 중집에서 논란 끝에 중단되었다) 한편, 유일하게 남은 진보정당 후보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지지로 대선방침을 세우자는 중집성원의 의견도 있었으나, 양경수 집행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양경수 집행부는 이번 대선에서도 진보당의 과당적 이해를 앞세우며 대선방침을 형해화함으로써, 민주노총을 정치적으로 분열시키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파산시켰다.

이렇게 진보당과 민주노총 집행부가 노골적으로 민주당의 하위파트너를 자처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포섭되지 않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존재와 독자 완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 진보당과 민주노총 집행부의 행보에 비판적인 진보 3당(정의당, 노동당, 녹색당)과 노동운동·사회운동 세력은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경선을 통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선출했다. (정의당은 대선 공동대응을 위해 당원총투표를 거쳐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변경하였다) 권영국 후보는 민주당의 압도적 정권교체론과 선을 그으면서, 극단화된 정치적 양극화의 배경에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있음을 지적하고 노동권과 사회권의 확대를 대안으로 제기한 유일한 후보였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과제도 남았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대선방침이 양경수 집행부로 인해 형해화된 조건 속에서 진보당의 맹목적인 민주당 지지를 비판하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이 주요 산별을 비롯한 노조 단위를 중심으로 모였으나, 조합원의 광범위한 참여보다는 노동조합 상층 간부와 일부 활동가 중심의 선

거운동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민주노총 내에서 반진보당을 중심으로 정파 간 연합 전선을 시도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층에서부터 더 많은 조합원과 함께 정치 정세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역사를 돌아보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제가 남은 셈이다.

또한, (진보당의 구호와 동일한)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내세우며 민주당의 ‘외부’이자 ‘왼쪽’에서 이를 견인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전략은,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과 분별정립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적이었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야권연대를 추진하고자 했던 정의당이 보인 한계를 반복하는 것이기도 했다.¹² 결국 정당 체계와 민주정의 질적 타락을 주도하는 민주당의 인민주의를 분명하게 비판하는 데에서 출발해야만, 민주당이나 진보당과 구별되는 정치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제는 민주노동당만의 과제가 아니라, 독자적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의 재건을 모색하는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 전체의 과제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남긴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지난 야권연대 실패의 역사를 직시하며 민주당에 포섭되지 않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 운동의 새로운 길을 찾는 계기를 계속해서 모색해야 한다.

12 지난 총선에서 사회진보연대는 “독색정의당이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단은 ‘민주당 이종대를 벗어나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에 비추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으나, 그와 함께 동반된 결정이나 발언은 그 의미를 스스로 희석하는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평가했다. 임필수, 「2020년대 야권연대의 흐름과 쟁점」,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4년 봄호.

4. 결론

이번 대선은 한국 민주정과 헌정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문민화 이후 초유의 ‘셀프 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를 두둔하는 데 앞장선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집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와 그로 인한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도 거대 양당은 헌정질서 회복보다는 권력 쟁취에 몰두했다는 점에서 헌정 위기 해소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이번 대선은 향후에도 정치적 양극화와 제도적 파행이 심화하며 헌정 위기가 고착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지난 3년을 거치며 한국의 정당체계가 한층 더 타락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팬덤 당원이 직접 지배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하며 완전한 인민주의적 정당이 되었고, 국민의힘은 보수주의에도 미달하는 기회주의와 극우가 혼재된 무원칙 정당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거대 양당은 제왕적 대통령직을 장악하기 위한 극단적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당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정치제도와 관행을 파괴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2020년대에 이르러 기존의 정당이 점차 팬덤 정치에 잠식되고, 정당체계 역시 당직과 공직을 장악하려는 파당 간의 ‘내전’으로 악화하면서, 앞으로도 헌정 위기가 만성화될 우려가 크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주권’은 인민주의적 통치 이념으로서 권력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제도와 관행을 해체할 위험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원인을 기획재정부와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데서 찾으면서, ‘민주적 통제’

라는 명분을 앞세워 실제로는 선출된 권력자가 법치와 재정을 더욱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형하고자 한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인민주의와 권위주의의 전형적 특성과 일치한다. 이들은 인민주권을 절대화하며, 자신을 지지하는 ‘진정한 인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당이나 사법부와 같은 매개조직을 기득권과 부패세력으로 지목하고 약화시키려 한다.

사회운동과 노동자운동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국민주권정부’가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우클릭’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즉, 신자유주의를 적극 수용하면서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 노무현 정부나 이른바 ‘촛불민심’을 배반했다는 문재인 정부와도 질적으로 다른, 국민주권을 내세워 민주정과 헌정을 구성하는 제도와 관행을 파괴하고자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당체계가 돌이킬 수 없이 붕괴하고 보수세력이 자멸한 가운데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일각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더욱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에서, 문민화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할 세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사회운동이야말로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민주정의 제도를 파괴하고 자의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것에 대한 적극적 비판세력을 자임하는 가운데, 노동권과 사회권의 확장을 모색해야 한다. ●

이재명 정부, 쟁점과 전망

누가 정치권력의 견제자가 될 것인가

임필수(정책교육실장)

필자는 과거 문재인 정부를 보며 그 위험스러운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검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명분으로 독립성을 위협하고 그림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통한 법의 지배의 실현’이라는 현대 정치의 원리를 부정했다. 둘째, ‘부두 경제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경제학적 근거가 없는 경제정책을 도입하고자 했다. 이 역시 정부의 경제정책은 확립된 경제이론을 전제로 한다는 현대 경제정책의 원리를 부정하는 행동였다. 셋째, 반일민족주의를 선동하면서 외교사안까지 정치화하는 극히 위험스러운 시도를 밀어붙였다.¹ 필자는 이를 포퓰리즘(인민주의)의 위험으로 규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한층 더 나쁜 방향으로 밀고 나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정치권력을 내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사법부의 권위와 역량을 해체 또는 축소하려 한다. 또한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반기를 들 수 있는 국가의 경제장치 중에서 핵심부문인 예산기능을 떼어내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고 한다.

1 임필수, 「현 정세와 사회운동의 상황에 대한 인식」,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3년 겨울호.

이는 마치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내 야당’ 역할을 했던 악몽을 이번에는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도 한다. 필자는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고, 법치나 경제정책의 원리를 무시한다면 이는 사실 현대국가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었고, 아직 위낙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될 정부 정책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핵심 쟁점과 전망과 정리해보고자 한다. 앞의 특집 글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므로, 추가 설명인 셈이다.

1. ‘내란청산’과 3대 특검

1) 내란죄 재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다수의 군인, 경찰이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일정이 12월 말 30차 공판까지 확정됐다. (5월 3회, 6월 3회, 7월 4회, 8월 3회, 9월 4회, 10월 4회, 11월 4회, 12월 3회.) 지귀연 재판부는 열 차례 정도 공판을 더 할 수도 있다고 했다. 1심 선고는 올해를 훌쩍 넘기게 됐는데, 기소 시점(1월26일)부터 따지면 1심에만 1년 넘게 걸리는 셈이다.

5월에 열린 재판만 보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다수

(직책은 12·3 쿠데타 당시 기준)

C



나왔다. 예를 들어 5월 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직속 부하인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아직도 못 들어갔냐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 접근할 수 없다’고 하니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쏘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앞서 군검찰의 1차 조사에선 해당 통화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내용의 윤 전 대통령 측 기자회견을 보고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며 2차 조사에서 통화 내용을 진술하기로 한 이유를 밝혔다.

아직 예단하기 이르지만,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과 같은 맥락에서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은 한때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듯하기도 했으나,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2) 3대 특검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6월 5일 ‘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완전한 명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재석 198명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으나, 조정태·안철수·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했고, 김소희 의원은 기권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두 번째 특검법에는 빠졌던 ‘외환유치 혐의’가 다시 들어왔다.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시도한 행위도 새로 넣었다.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반발했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되었다. 가장 강도 높은 내란 특검법이 통과된 셈이다.²

특별검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 즉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보는 특검이 6명을 추천해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과건 검사는 60명, 과건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은 100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면 최장 150일이다. 특별검사는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군검사가 계속 공소를 수행할 수 있으나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2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한편 같은 날 김건희 특검(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2 특검의 수사대상은 △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권력 배제 및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 △ 국회 통제 및 봉쇄, 인적 피해 및 국회 기물 파손, △ 군경 등의 물리력과 기타 방법을 이용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 정치인·법조인·언론인 체포 및 감금 시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정당 당사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행위 △ 비상계엄 선포 건의와 구금시설 마련 및 내란 목적의 살인·예비·음모 및 내란 선전 선동 △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하는 방식으로 내란 시도 △ 수사 및 재판 지연 행위 △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모두 11개다.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되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보는 특검이 4명을 추천해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파견 검사는 4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은 각각 80명이고,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20일)을 빼면 최장 150일이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특검은 파견검사 최대 20명으로 꾸려지며, 준비기간 포함 80일, 연장 시 최장 140일간 수사한다.

3대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되는 파견검사만 120명에 이른다. 올 2월 말 기준으로 검사 현원은 2004명이고, 평검사는 1251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는 210명이다. 따라서 파견검사 120명은 평검사의 10%에 이르고, 서울중앙지검의 절반을 넘어 수도권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수준이다. 과거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의 파견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댓글 특검’의 파견검사는 13명이었다. 이와 비교할 때 3대 특검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라며 “초대형 사정당국을 예고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내란특검 수사 어디까지…’ “국힘 의원-조희대도 사정권” 관측, 《동아일보》, 2025년 6월 6일.)

반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던 어떤 변호사는 “이 대통령 사건에만 (검찰이) 연간 150여 명이 투입됐다. 그것도 거의 3년 내내 투입된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의 특검은 반년도 안 된다. 이 정도는 검찰에 별 타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도 “원래로 치면 과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윤석열

검찰 정권이 보여주지 않았냐”며 “과거(윤 정권)와 비교하면 전혀 과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특검’ 파견 검사 120명, 과하다? “이재명 수사검사는 150명이었다”, 《오마이뉴스》, 2025년 6월 7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3대 특검법이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래 특검은 야당의 ‘무기’다. 정부가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등 이른바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수단이 특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으로 위치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을 밀어붙였을까. 필자는 《오마이뉴스》에 실린 이재명·이화영 변호인의 인터뷰에 약간의 힌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대규모의 검찰을 동원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민주당은 윤 정부가 검수완박, 즉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방해하고, 검찰을 동원해서 야당을 표적 수사하는 검찰공화국이었다고 연일 비난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는 민주당이 여당이 되어 검찰을 동원해 전 정부 인사들과 야당을 수사하면서도 ‘검찰공화국’이란 비난을 피할 가림막이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다만 검찰 내부인사가 총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미 전 대통령과 관련 군인, 경찰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내란특검의 수사는 주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고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 《동아일보》의 기사제목처럼 “국힘 의원-조희대(대법원장)도 사정권”이 현실이 된다면, 정권 초기부터 격렬한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3) 검찰청 해체

나아가 현재 민주당은 내친김에 검찰청의 ‘해체 수준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즉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새로 신설될 국가수사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장경태·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이 6월 11일 발의한 ‘국가수사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고,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찰, 수사 심의, 수사권 조정 등 막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국수위원 11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판검사와 변호사 외에 대학교수,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비법조인도 위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국수위의 수사통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법안을 두고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통해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현재 검찰청법상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어지는 효과가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³ 요약하면, 민주당 안은 기존 검찰청의 해체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검찰의 권위와 역량을 약화시키는 한편, 핵심적인 수사부문을 정치권력의 직접적인 통제영역에 두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3 △ 수사지휘권의 발동도 다른 내각원이 아니라 오직 법무부장관만이 할 수 있고, △ 법무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더라도 개별 검사를 지휘하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제한은 정치권력의 검찰개입을 최소한으로 막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으로 보라. 임필수,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공수처 야당 배제, 문민독재로 가는 9부 능선을 넘는가?」,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0년, 겨울.

2.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사법부 약화·장악

1)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 공직선거법 위반, △ 위증교사 혐의의 항소심, △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사건, △ 쌍방을 대북송금 의혹, △ 법인카드 유용 등 모두 다섯 가지다. 이 중에서 5월 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은 6월 18일로 잡혀있었다.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의혹·성남FC사건은 6월 24일,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7월 중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기일이 잡혀 있지 않았다.

대선 전, 법원은 각 재판부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대한 질의를 받고 “대법원이 재판부에 재판 중지나 진행 여부를 지시할 수 없다”며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6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헌법 84조를 두고 “우리는 소추에 기소와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재판을 강행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칼럼 「판검사가 나라 전체를 인질로 잡을 순 없다」(2025년

6월 5일)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우리 헌법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법 앞의 평등’을 해치는 양 호들갑을 떠난다. 다시 말하지만,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면제시키지 않는다. 재판은 중지될 뿐 임기 뒤 재개된다.”

그런데 칼럼은 애초 민주당 안에는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 재판을 정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무죄일 때는 재판하고 유죄일 때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법리로 합리화할 수 있나.

또,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본인이나 타인의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주당 개정안은 이 중에서 행위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백현동’ 관련 발언을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야말로 ‘한 사람을 위한 법’,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 칭할 만하지 않은가.

필자는 특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 즉 소추도 되지 않는 마당에 재판도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해석에 동의한다. 사실 이는 중대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국민이 투표과정에서 적절히 걸러내리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에 당선도 되기 전에 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고는 보지 않으며, 더군다나 그 재판을 진행한 사법부를 공격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 대법관 증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허용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파기 환송 후, 민주당은 5월 14일 ‘조희대 특검법’(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법안 소위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후보 상고심 과정에서 대법관 재판연구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12·3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하였다.⁴

또한 민주당 박병게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안을,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렇지만 이 역시 무리수라는 비판이 일자,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5월 26일 ‘대법관 100명’과 ‘비법조인 임용’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을 계기로 민주당의 사법부 특히 대법원에 대한 공세가 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두 축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6월 4일 국회 법사위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개정

4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6월 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검은온 뉴스공장’에 출연해 놀라운 얘기를 했다. “일종의 특종이 될 수도 있는 얘기를 하자면,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있지 않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엔 없을 수가 없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 깔끔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각해주자는 쪽이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라”라며 “그 (분위기가 바뀐) 과정은 제가 말하긴 그렇다. (기각을) 선고한다고 해서 고맙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법쪽 소통 왔을 땐 ‘빨리 기각’…파기환송돼 황당했다”, 《중앙일보》, 2025년 6월 2일.) 이재명 후보의 말은 곧 피고인이 판결을 미리 알았다는 얘기가 된다. 이 사실도 놀랍고, 또 이런 사실을 대선 후보가 경솔하게 유튜브에 나와서 말하는 것도 놀랍고, 또 이런 일이 대선 후에 유야무야 묻히게 될 것도 놀랍다.

안을 단독 의결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이며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늘리는 내용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5월 1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도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점점 더 과증해지는 대법원의 업무를 고려할 때 대법관의 증원이나 사법 체계의 변화는 필요할 수 있지만, 아무런 후속대책도 없이 대법관 증원부터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이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새로 충원될 대법관 16명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명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 축으로 5월 8일 정진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뤄볼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5월 15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사위에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란 문구를 삭제하는 게 민주당 추진 법안의 요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달리 표현하면, 대법원은 현재가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또한 관례를 변경하고 재판 결과를 확정하는 최고 법원의 역할이 현재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현재가 재판 결과를 최종 심사하면 대법원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위를 분할하는 것은 사실 권위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헌

법재판소의 재판소원 도입은 대법원의 권위 약화로 이어질 것임이 분명하다. 검찰을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권한은 집중하면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검찰, 사법부의 권위는 분할하여 약화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노림수라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어질지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지난 5월 22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에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 사노맹 출신의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수사·기소 분리,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도입 문제에서 민주당과 대동소이한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의 사법부 개혁이 사법부 약화·장악을 위한 시도라는 반발이 정권 초기 너무 거셀 것이라고 예상될 경우, 민주당 외부 인사를 내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유지될 경우, 눈치 볼 것 없이 밀어붙이자고 판단할 수도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선투표 출구조사에서 63.9%, 즉 유권자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대선이 끝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 지지자 중에서도 42.0%가 재판을 지속해야 한다고 답해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43.7%에 비해 1.7% 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 조사 결과의 의미, 특히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42%가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재명 후보가 무죄라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10년이 지나기 전에 두 명의 대통령이나 탄핵으로 파면시킨 마당에, 새 대통령도 유죄면 물러나게 하고 두 달 내

로 새로 뽑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일까. 어쨌든 간에 대통령과 정치인의 불소추특권을 보는 시각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상컨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재판을 중단하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은 곧 멈출 것이다.⁵ 그렇다고 대통령 지지도가 당장에 급락하지는 않을 듯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도덕성을 검증하려는 여론을 임기 내내 의식해야 할 것이다.

3. 대통령 직속 예산처와 상법개정

1) 대통령 직속 예산처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 국정과제 정리를 하는 인수위 개념의 조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오랜 기간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방안을 논의했고, 이미 2022년 대선 때도 미국 백악관 직속 관리예산처(OMB)

5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6월 9일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무기한 연기한다는 뜻이다. 또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도 6월 10일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세 재판은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의 사례를 들어 “기획·예산 기능을 청와대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6월 6일 강훈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재정 기획보좌관으로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다. 《한겨레》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 분리를 강조한 만큼, 정부 조직 개편 이후 대통령실 주도의 예산 편성에 재정기획보좌관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 “수석급으로 격상해 경제성장수석과 같은 위상을 갖춘 만큼, 기재부에서 분리된 재정 라인의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아예 보고 라인을 재정기획보좌관 쪽으로 일원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4월 대표 발의안 정부조직 개편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5월 2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의원 안대로 개편이 이뤄질 경우 장·차관, 행정지원조직이 늘어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476여억 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고 추계하기도 했다. 6월 9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 예산기능을 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 명칭을 재무부로 변경해 국내금융정책까지 다루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문제에 이토록 열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강조하고, 나아가 이를 입법화하려는 노력을 이어오기 때문이 아닐까. 그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자.

(1) 기획재정부와 재정준칙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준칙 문제가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부터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을 짤 때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1~2%포인트 낮게 유지한다’는 재정준칙을 세우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4년 3월에는 국회법을 개정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과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페이고’(PAYGO, pay-as-you-go) 원칙, 즉 외상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불한다, 또는 지출을 수입 이내로 억제하라는 원칙이라고 부른다. 재정건전화법이 최초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0월 25일이다. 이 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하도록 재정준칙을 설정했다. (관리재정수지란 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인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것이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2015년 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며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파면된 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당의 법안도 사실상 폐기되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10월 5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5년

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는 당초 8월 중 재정준칙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여당 반대에 직면했다. 예를 들어 박홍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 시점에 재정준칙을 만들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생긴다”, “국가재정 운용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발표 시기 도 계속 뒤로 미뤄졌고, 내용도 초안보다 대폭 후퇴했다.

민주당과 반대의 입장에서, 즉 더 엄격한 재정준칙을 요구하는 관점에서 홍 장관 안에 대해 제기된 비판은 다음과 같았다. △ 통합재정수지 -3% 한도는 관리재정수지로 환산하면 대략 -5%까지 허용한다는 뜻이다, △ ‘경기둔화 판단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판단 기준과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2025년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2022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 국가채무 구체한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정부와 여당이 자의적으로 너무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등등.

그러나 이 개정안조차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가 진정될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지하는 게 좋다”, “지금 시점에서 재정준칙이 강조되는 것은 위험하다”며 계속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 후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에 계류된 채 제대로 심의된 적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로 넘어와서 2022년 7월 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0년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 (복잡한 곱셈식 방식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며 이해하기 쉬운 수치·채무준칙 기준을 설정하며, △ (통합재정수지가 아니라) 재정건전화 관리지표로 일관되게 활용해

	기존 정부안	개정안
❶관리지표	통합수지+국가채무	관리수지(국가채무)
❷한도식	$\left(\frac{\text{국가채무}}{60\%}\right) \times \left(\frac{\text{통합수지}}{\Delta 3\%}\right) \leq 1.0$	관리수지 $\Delta 3\%$ 이하 (채무 60% 초과시 수지한도 축소)
❸법적근거	시행령	법률
❹적용시기	'25년까지 유예	법 개정후 바로 적용

[표] 문재인 정부 재정준칙안(2020년)과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안(2022년) 비교
 윤석열 정부 초기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재정준칙을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것보다 단순하고 엄격하게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보라. (자료출처: 2022년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자료)

은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며, Δ 준칙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이라도 재정준칙을 감안하여 2023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동안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며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국회에서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제 다시 정부의 주인이 민주당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빚었던 술한 갈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⁶ 홍남기 장관의 재정준칙은 구멍투성이라는 비판을 외

6 2020년 11월 홍남기 장관은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을 3억 원으로 내리자는 입장 고수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기재부가 입장을 철회했다. 이에 홍남기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21년 2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보편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으나, 홍남기 장관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강력히 충돌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결국 선별지급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때는 홍 장관의 ‘판정승’이라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부로부터 받았지만, 민주당은 홍남기 장관의 안조차 수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기능을 대통령실 산하로 재편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기획재정부라는 ‘국가의 경제장치’는 경제학의 원리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다는 현대국가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정치의 논리로 제압하려는 것이다.

(2) 대통령과 의회의 예산권한

덧붙여 대통령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관계를 검토해보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미국 백악관 직속 관리예산처의 사례를 들었기에, 실제 미국의 예산편성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 이미 다양한 언론이 팩트체크를 했다. 간단하게만 말하면 미국은 예산에 관한 의회의 권한이 막강하다.

대통령은 매년 2월 첫째 월요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에 행정부가 필요로 하는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의회가 ‘참고’하는 안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의회의 뜻에 따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 짤 수도 있다. 실제로는 대통령실 산하 관리예산처(OMB)와 의회예산국(CBO)이 긴밀한 협업과 조정을 진행한다고 한다.

그 후 상하원 예산위원회가 예산결의안을 짜서 4월 15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면 세출위원회가 상하원 각각 12개씩 존재하는 소위원회에 예산을 분배하고, 각 소위원회는 지출승인법안(세출법안)을 마련하여, 최종적으로 연방의회는 12개의 지출승인법안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날인 9월 20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예산은 법률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예산법률주의’라고 부른다),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법안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수용하지 않는 식으로 취사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안 전체를 거부하면 예산이 없어 행정부가 마비되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 즉 구조적으로 의회가 우세한 입장에 서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했다.⁷ 게다가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헌법 57조는 프랑스 제3공화국에 증액제한 규정이 없어 지역구예산 끼워 넣기로 재정파탄이 초래됐던 전례를 방지하려고, 4공화국이 채택한 헌법 규정을 본받아 제헌헌법에서 도입되었다고 한다) 즉 구조적으로 행정부가 우세한 입장에 서있다.⁸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 수단이 인사권과 예산권인데, 한국의 경우 의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관해 말한 것은 좋게 말해봐야

7 그런데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작년 11월 2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자동부의제도를 믿고 야당과의 예산 협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한했다”며 폐지를 밀어붙였다. 그러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했고, 2022년 1월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즉 자동부의제도는 아직 살아남아 있다.

8 행정부의 구조적 우위에다가 국회에서 야당의 다수당 지위, 행정부와 국회의 극단적 대립이 결합된 결과가 지난해 11월 야당의 감액 예산안 국회 예결위 단독 통과였다. 즉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안의 자동부위는 막아야 하는데, 정부 동의 없이 증액은 할 수 없으므로, 감액만 한 예산안이 탄생하게 되었다.

‘절반의 진실’이다. 미국의 사례를 든다면, ‘예산 법률주의’나 ‘정부의 증액 동의권 폐지’를 함께 말해야 온당하다.⁹ 즉, 대통령의 권한집중을 막을 견제장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3) 의회는 어떤 원리와 규칙으로 재정을 규율할 것인가

그렇지만, 설사 미국식 모델의 궤모습을 그대로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의회는 어떤 원리, 규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여야 정당은 그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이는 왜 중요한가. 의회 역시 재정포퓰리즘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미국의 사례로 돌아가보면, 미 의회는 1980년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라는 ‘쌍둥이 적자’ 문제가 심각해진 1980년대나, 글로벌 금융위기 다시금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진 2010년대에 의회 양당과 행정부가 협력하여 재정준칙을 확립하고자 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첫째는 1985년 예산균형과 긴급적자통제법(그람-루드만-홀링스법)이다. 이는 1986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누진적으로 적자를 축소해 1991년에는 균형예산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각 회계연도에 재정적자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지출의 일률적 강

9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았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10일 “예산안 자동부외제 폐지와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확대해 국민 세금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훌륭한 명분을 내세웠는데, 윤석열 정부 당시 대규모 세수결손이 있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긴 하지만 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분명한 아이디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에서 자동부외제 폐지에 대해 호응할지 여부도 지켜보아야 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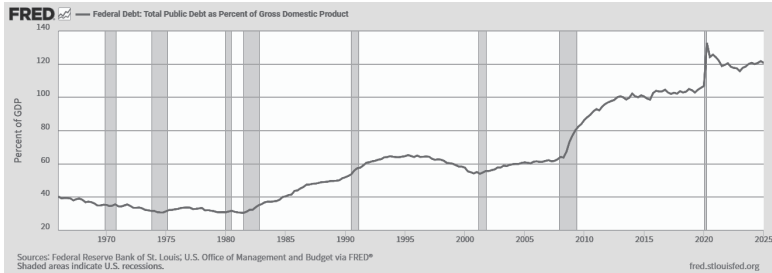
제삭감을 단행하도록 했다.

이 법은 발의자인 공화당 상원의원 필 그램과 워렌 루드만, 민주당 상원의원 프리츠 홀링스이름으로 불리기 한다. 즉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당시 행정부는 공화당(레이건 대통령), 상원 다수당은 공화당, 하원 다수당은 민주당이었다. 하원은 271 대 154로, 상원은 61 대 31로 통과되었는데, 이는 즉 양당으로부터 찬성투표가 나와 ‘초당적’ 지지가 있었다는 뜻이다. (초당적 지지라는 게 만장일치라는 뜻은 아니다. 미국 정치의 맥락에서는 당적을 ‘조월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1990년 예산집행법이다. 이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지출 삭감과 세수증대를 통해 5년간 4960억 달러의 재정적자 축소를 목표로 삼았다. 이 법은 연방정부의 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했다. 의무지출의 경우, 페이그 준칙을 도입하여 신규사업으로 증가분이 발생하면 타 의무지출 축소나 조세수입 증가조치를 의무화했다. 재량지출의 경우 분야별로 향후 5년간 지출상한을 설정하고 위반 시 해당분야 지출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기로 했다. 예산집행법은 두 번 연장되어 2002년까지 실행되었다. (2002년에 이르면 재정적자 문제가 호전되어 법안이 더 연장되지 않았다. [그림을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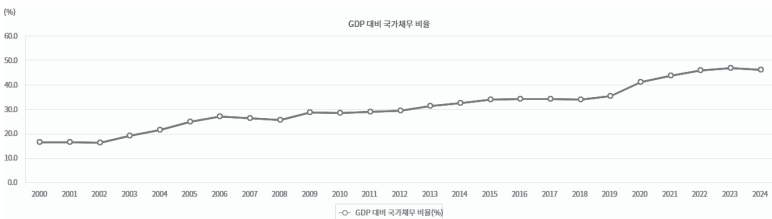
1990년 당시 행정부는 공화당 (아버지) 부시 대통령, 상원 다수당은 민주당, 하원 다수당도 민주당이었다. 하원에서는 228 대 200, 상원에서는 54 대 45로 통과되었고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즉 초당적 합의가 있었다.

셋째는 2010년 페이그법이다. 의역하면 ‘페이그’를 법으로 영구적으로 명시화하는 법이다. 방금 언급한 1985년이나 1990년 법의 경우 기한이 정해진 한시법이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페이그법은 만



[그림] 미국 GDP 대비 총공공부채 비율

그림을 보면 1980년대 초중반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람-루드만-홀링스법이 도입된 1985년 즈음에 그 비율이 대략 40%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 도입 후로도 비율은 계속 상승했고 예산집행법이 도입된 1990년에는 거의 60%에 가까워졌다. 예산집행법이 계속 연장되는 가운데 1990년대 중후반부터 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2002년에 예산집행법이 종료되었다. 예산집행법 종료 후 총공공부채 비율이 다시급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 페이코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급상승을 보여 100%대를 돌파하더니, 가라앉을 틈도 없이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다시급 급상승해 120%를 돌파했다. (자료출처: FRED)



[그림] 한국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미국의 총공공부채가 연방정부의 부채에 한정된다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의 부채도 포함한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4년에 20%를 넘어섰고, 2013년에 30%, 2020년에 40%를 넘어섰다. (자료출처: 지표누리)

료일이 없다. 이제 페이고는 다른 법안(예컨대 예산집행법)에 포함된 준칙이 아니라, 별도 법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당시 행정부는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상원 다수당은 공화당, 하원 다수당은 민주당이었다. 최종적으로 상원에서는 60 대 40, 하원에서는 233 대 187로 통과되었다. 역시 초당적 합의가 있었다.

미국 의회가 최초로 재정준칙을 도입하려 했던 1985년은 미국 연방 정부의 GDP 대비 총공공부채 비율이 40%를 넘어서려 하던 때였다. 한국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서던 때는 2020년이다. 공교롭게도,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막는 진기한 장면이 연출되던 때였다. 그런데 세계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 발권이익을 누리는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국가채무 수준과 한국의 수준을 단순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상식이므로, GDP 대비 40%인 2020년 시점에서야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도 심지어 늦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 그림이 말해주듯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공공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재정준칙을 도입한 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예산통제법에서는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을 그 전보다 1.9조 달러 늘려 14.2조 여 달러로 제한했으나, 그 후 부채상한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준을 상향하거나를 반복해, 2025년 현재에 이르러 부채한도는 36.2억여 달러까지 늘었다.

그렇지만, 달러를 발권할 수 있는 미국과 그렇지 못한 한국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해야 한다. 또 미국 의회나 행정

부는 여전히 재정적자, 공공부채 감축 문제를 빠지지 않고 언급한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의 베센트 재무장관도 바이든 행정부 말기 GDP 대비 6.2%에 이르렀던 재정적자 비율을 매년 1%p 줄여 2028년까지 3%를 달성하겠다고 최소한 ‘말로는’ 약속한다. (주류경제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관세인상과 감세로 이를 달성하겠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는 술한 논란이 있지만 말이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트럼프의 등장은 기존 재정준칙에 관한 초당적 합의의 파괴인 것은 분명하다.)

2) 주식시장 활성화 TF와 상법개정: “개미와 한 배 탔어요”

3대 특검법 외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속도를 낼 법안으로 보는 상법 개정안이 꼽힌다. 특검법이 통과된 6월 5일,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와 관련, 시장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첫발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¹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왜 상법 개정과 주식시장 부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과거 문제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1400만 개미와 한 배 탔어요”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도 상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4월에 폐기되었다. 새로 발의된 법안에는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 룰’이 담겼다. 또 시행 시기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 상법 개정안에는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정했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필요한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5월 24일 “민주당이 이기면 그냥 놔둬도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사는 건 금지돼 있어서 상장지수 펀드를 구매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또 5월 28일에는 K-이니셔티브TV ‘1400만 개미와 한 배 탔어요’ 유튜브 생방송에 나와서 코스피200 상장지수펀드(ETF)에 2000여만 원, 코스피150 ETF에 2000여만 원, 적립식 코스피200 ETF에 100여만 원 등 총 4100여만 원을 투자한 주식 계좌를 공개했다. 또 향후 5년간 적립식에 매월 100만 원씩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3월 17일에 발표한 ‘2024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소유자는 (법인포함) 1423만 명이고, 이 중에서 개인투자자는 1410만 명으로 전체의 99.1%에 달했다. 이로부터 ‘1400만 개미’라는 표현이 도출된다. 소유 주식 수를 보면 개인이 580억 주(49.6%)를 보유하고 국내 법인 443억 주(37.9%), 외국인 139억 주(11.9%) 순이었다. 즉 개인투자자가 소유자 수 중에서는 99.1%, 소유 주식 수 중에서는 49.6%의 비중을 차지한다. 연령별 보유 주식 수를 보면 역시 50대가 201억 주(34.6%)로 ‘최대 큰손’이었다. 2~4위는 60대(25.1%), 40대(20.0%), 70대(8.6%)였다. 그런데 개인투자자를 연령별로 나누면 50대가 316만 명(22.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40대(312만 명)와 30대(265만 명)가 그 뒤를 이었다. 즉 30대가 보유 주식 수는 많지 않지만, 보유자 수로 보면 그에 비해 매우 많다는 뜻이다.¹¹

11 지난해 《한국경제신문》의 기사 「“일찌감치 ‘돈’ 굴려봐라”…자녀들 ‘주식계좌’ 파궂더니, (2024년 7월 21일)를 보자. 국내 증권 3사(미래에셋증권·KB증권·NH투자증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30대가 가장 많이 신규 계좌를 개설했다. 이들의 신규 계좌 개설은 전년 대비 73% 증가해 1위(24만5099개)를 기록했다. 이어 10대 미만이 46% 늘어 2위(5만8543개)에 올랐다. 대체적으로 20~30대의 주식 계좌 수가 많이 늘었다.

정리해보면, 이른바 86세대는 주식시장의 큰손이다. 게다가 20~30세대는 40~50세대나 60~70세대에 비해 투표성향이 시시때때로 변한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더 주식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의 정합성보다는, 바로 이들에게 자신이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정책에 앞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내놓은 정책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앞선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을 평가하며 이러한 경향을 ‘금융 포퓰리즘’이라고 부른 바 있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러한 경향으로 경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¹²

민주당 정책위원회	한국경제인협회
이사 총실 의무 대상에 ‘총주주’ 명시	주주끼리도 이해관계 상충 소송 증가, 장기투자 위축
사외이사(독립이사로 변경) 3분의 1로 확대	기업경영 자율성 훼손 사외이사 인력풀 부족
감사위원 분리 선출 2명 이상으로 확대	투기자본 이사회 장악, 경영권 위협 대주주 의결권 3% 제한해 자본다수결 원칙 위배
대기업 집중투표제 의무화	투기자본 측 이사회 진입 용이

[표] 민주당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재계 반대 입장

1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총선을 앞두고 ‘금융 포퓰리즘’으로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 《사회운동포커스》, 2024년 1월 9일. 「금투세, 결국 폐지 수준으로 가는가: ‘금융 포퓰리즘’을 완성하는 민주당의 부화뇌동」, 《사회운동포커스》, 2024년 10월 15일.

한편 작년 11월 1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지배구조 도입 보고서’를 발표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30대 상장기업 중 8곳의 이사회가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이뤄진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대 기업으로 좁히면 4곳, 100대 기업으로 넓히면 16곳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과장이라는 반박도 있다. “외국계 펀드는 대부분 이사 선임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일부 이사 선임을 시도하는 경우라도 이사회 7~8명 중 감사위원 1명 정도 선출하는 것이 목표고, 설사 감사위원 선출에 성공해도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굉장히 어렵다”, “최대주주 지분에 근접한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가 있는 회사라면 외국계 헤지펀드와 결탁할 수 있겠지만, 그런 회사는 매우 드물다” 등등. (『상법 개정하면 해외 투기자본 기승? “기껏해야 건제 역할”』, 《경향신문》, 2024년 11월 27일.)

어쨌든 상법 개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업자문을 맡는 대형로펌이 분주해졌다는 보도가 있다. 로펌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적용 범위, 형사책임과의 관계 등에 대한 해석상의 불확실성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든가, “구조조정, 합병, 계열사간의 거래, 배당 등 기업 또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익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평가하는 내부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적 분할 후 분할 자회사 상장 사례, 합병비율 불공정 주장 사례,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상법개정안 더 세계 간다”...이재명 당선에 재계 ‘축각’』, 《디지털경제》, 2025년 6월 4일.)

재벌 주장이 과장된 것은 사실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상법 개정이 주가부양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수단이 될 것이냐는 질문이 우선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던진다면, 상법 개정이 재벌체제, 달리 말해 피라미딩 기업집단이 지닌 근본적 모순, 즉 재벌총수 가족집단의 지배, 혁신능력의 감퇴 등등에 근본적 변화를 낳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사실 거대 로펌이 분주해졌다는 사실은 그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마땅할 것이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4. 다루지 못한 문제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1) 남북관계와 외교

첫째, 이재명 정부에서 남북관계, 외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6월 4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와 위성락 안보실장 임명을 직접 발표했다. 또 언론은 통일부 장관으로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 외교부 장관으로는 조현 전 유엔대사가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정동영 의원과 이종석 후보자는 각각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과 사무차장을 맡았다. 《한겨레》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이종석 짝을 선택하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대북 돌파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초기 때와 지금은 정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었다. 또 문재인 정부 초기 때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탓에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한 유엔 제재로 고립되어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와 밀착하며 한국을 ‘적대적 국가’(적대적 불변의 주적)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북한의 관심을 끌려면 아마도 러시아가 줄 수 없는 것을 한국이 줄 수 있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제재 해제를 동반하는 경제지원이나, 특히 최근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별개의 국가 간의’(해상국경선을 포함하는) 국경선 확정 요구 말이다. 이 글에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경제제재나 해상국경선 문제는 엄청난 논란을 몰고 다닐 쟁점이라는 사실은 아주 분명하다.

한편, 위성락 안보실장은 대통령 당선 전인 5월 4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이뤄진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이미 진행된 것을 크게 바꾸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그동안의 틀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때 파기 의사를 보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안보협력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문 정부와는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6월 4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언론의 질문에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국가 간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불과 몇 년 전인 2023년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3자 변제 해법을 두고 ‘반

민족적 반역사적'이라고 연일 비난했던 사실을 떠올려 본다면 180도 입장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국내정치 상황에 따라 외교 외슈를 언제라도 동원할 수 있고, 반일민족주의와 관련된 이슈는 가장 활용하기 손쉬운 이슈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앞으로 계속 주의할 필요가 있다.¹³

2) 개헌

둘째로, 개헌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헌안을 발표한 적이 있고, 5월 27일 정치분야 TV 토론에서도 이를 다시 언급했다. 5.18 정신 전문 수록,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 도입, 계엄요건 엄격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그런데 《사회운동포커스》에서도 언급했듯, 공교롭게도 TV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 전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 '총리 국회추천제'가 빠져 있었다.¹⁴

총리 국회추천은 현행 대통령제를 다른 무엇으로 변경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회의 다수당이 대통령과 다른 당인 경우, 그래서 야당

13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6월 5일 입장문을 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스스로 그 입장을 뒤엎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익이며 실용외교인가, 이럴 거면 정권교체를 왜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던 '3자 변제' 새정부가 왜 이어받나?" 이재명 대통령 '강제동원' 발언에 시민단체 입장문, 《오마이뉴스》, 2025년 6월 5일.) 이를 봤을 때 시민단체 측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4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겠다 말하지 않는 대선: 헌정위기의 원인에 대한 인식 없이 헌정수호를 약속할 수 있나, 《사회운동포커스》, 2025년 5월 29일.

이 총리를 맡게 되는 경우 (우리는 국회 다수당이더라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당을 '야당'이라고 부른다), 또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어떻게 조정되는가에 관해 우리가 확실한 그림을 품고 있는가.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굉장히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우리는 그 다른 무엇을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준대통령제' 등등으로 부른다. 즉 이는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한 핵심방안으로 언급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개헌 방향에 대해 논한다면 이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항이다. (사실 총리 국회추천제가 빠진다면, 그 개헌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이 발표했다가 유아무야된 대통령 개헌 발의안과 대동소이해진 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포함해 진지하게 개헌안을 추진할지, 또 야당이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에 임할지 계속 주목해야 한다.

3) 특별감찰관 임명

셋째, 전 정부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특별감찰관' 임명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 모든 후보가 취임 즉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으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었으나, 1년 6개월 만에 사퇴, 사실상 해임된 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때도 임명되지 않아 9년째 공석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박 대통령 동생 박근령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

발하고, 대통령 측근인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탈세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최순실 게이트 관련 혐의로 당시 안중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내사한 일이 드러난 뒤 사퇴했다.)

《경향신문》의 ‘이대근 칼럼’은 「이재명 앞 경고 신호」(2025년 6월 16일)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견제·균형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 바람직하기로는 민주당이 그런 조직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게 안 된다면 정부 내 중립적 기관들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을 공약대로 임명하고 법무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에 충성과 아닌 중립 정신을 지킬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다.” 과연 새 정부가 전 정부를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에 속도를 냈던 만큼, 특별감찰관 임명에도 속도를 내는지 지켜봐야 한다.

필자가 마지막으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언급한 이유가 있다. 인용한 칼럼에서 지적하듯이 지금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세력은 전무해보인다. 건강한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매우 위태로워 보이며, 시민사회도 당파화되어 있다. 우리는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 자문해야 한다. ●

주류가 된 유럽 포퓰리즘

포퓰리즘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김영진(정책교육국장)

1. 서론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유럽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 각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위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유럽 패싱을 마주하면서 대서양 동맹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느꼈다. 동시에 범유럽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3월 2일 영국에서 열린 유럽 주요국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유럽 정상들은 ‘유럽이 단합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할 긴급행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유럽연합 역시 경쟁력 나침반 계획, 재무장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며 경제적 자립과 외교, 군사적 자강에 나서고 있다.

한편, 2월 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선 위의 흐름과 상충하는 행사가 열렸다. 스페인 정당 복스(Vox) 주최로 열린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MEGA) 집회에선 유럽의 주요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이 모여 유럽연합의 정책과 자국의 정치권을 비판했고,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반다양성 정책에 동조했다. 이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MEGA) 집회 사진

2월 8일 2024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 재편한 유럽 극우 포퓰리즘 정당연합인 '유럽을 위한 애국자들(PfE)' 소속 정당 지도자(스페인 복스, 프랑스 국민연합, 헝가리 피데즈, 이탈리아 동맹, 네덜란드 자유당 등)들이 모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차용한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세를 과시했다. (사진 출처 : 《로이터》)

날 참석한 헝가리 오르반 총리는 “어제의 이단아였던 우리는 이제 주류가 되었다”고 선언하며 유럽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면은 현재 주요 유럽국 정상들을 중심으로 하는 범유럽 차원의 연대 강화 흐름에 내부 저항세력이 도전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실제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포퓰리즘’으로 분류되는 정치세력은 기존 정치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현재 우파 포퓰리즘 교섭단체인 ‘유럽을 위한 애국자들(PfE)’와 ‘유럽보수연합(ECR)’, ‘유럽주권자연합(ESN)’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총 187석(26.5%)으로 2019년 유럽의회 선거 대비 의석이 69석이 늘었으며 현재 유럽의회 2당인 ‘유럽사회민주당

(S&D)'(136석)을 밀어낼 정도다. 유럽의회뿐만이 아니다. 유럽 각 나라 선거에서도 포퓰리즘 정치세력들은 각국의 정당정치 지형을 바꾸거나 집권세력이 되기도 한다. 최근 포퓰리즘 정당들의 부상에, 많은 분석가들이 이들이 각국의 헌정은 물론, 유럽의 해체를 지향한다고 우려한다.

지난호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어떻게 실패하는가」에선 “헌정주의가 결여된 민주정은 권위독재정으로 역행하거나 인민정으로 변질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위 문제의식을 기초로 유럽적 맥락에서 포퓰리즘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포퓰리즘이 헌정 민주주의(헌정주의)를 어떻게 변형, 훼손시키는지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이론적 분석틀을 살펴본 후, 해당 분석틀을 기준으로 최근 유럽 주요 국가(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에서 포퓰리즘 정당들의 행태를 소개할 것이다. 그런 다음 주요 사례의 공통점을 분석하여 포퓰리즘이 각국, 나아가 유럽 차원에서 헌정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위협하며, 이들 세력에 대한 대처가 향후 유럽정치에 핵심 과제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2. 포퓰리즘과 헌정 민주주의와의 관계:

매개조직에 대한 공격과 변형

1) 기존 포퓰리즘 설명의 한계

포퓰리즘은 논쟁적인 단어다. 그 이론적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은 경험적 사례에서 그 특징을 도출하는 최소주의 접근과, 기존 민주주의를 대체할 급진적 민주주의 전략으로 사

고하는 최대주의 접근으로 나뉜다. 전자는 특정한 정책적 입장, 정치스타일, 그리고 정치이념으로 포폴리즘을 설명한다. 정책적 입장에서 포폴리즘의 기준은 주로 무리한 확장재정정책, 인기융합정책으로 해당 정책을 펼치는 정당, 정치인을 포폴리즘으로 간주한다. 정치스타일로 포폴리즘을 설명하는 접근법은, '엘리트'와 '인민'을 대립시키고 자신이 '인민'의 편이라고 호소하는 수사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이념적 접근은 포폴리즘이 극복하고자 하는 현실의 모순과 지향하는 사회의 상이 불분명하여 여러 정치이념을 차용하는 점에 주목한다.

반면 포폴리즘에 대한 최대주의 접근은 포폴리즘을 진정한 민주주의로 사고한다. 라클라우의 포폴리즘 설명이 대표적이다. 라클라우는 포폴리즘을 기존 인민을 고립시키는 대의제에 맞서 집합적인 동일성을 형성하고 참여를 통해 '집단적 주체'로서 민주주의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특정 소수가 통치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약자'들이 스스로 사회 및 정치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주권 추구 행위로 이해한다.

그러나 양자의 설명은 모두 결함이 있다. 최소주의 접근은 포폴리즘과 비(非)포폴리즘과의 경계가 모호한 문제가 있다. 확장재정정책과 인기융합정책은 포폴리즘 정당만 행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주류 정당들도 상황에 따라 특정한 수사로서 '엘리트'와 '인민' 간 적대와 인기융합정책을 펼친다. 또한 새로운 수사와 정책적 공통점이 발견될 때마다 포폴리즘에 해당하는 특성과 범주가 늘어나 포폴리즘의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최대주의 접근은 포폴리즘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여기서 '인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현실에서 어떻게 운동적, 제도적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수 없으며 그렇

게 모인 정치적 행위가 반드시 해방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¹

따라서 포퓰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문제설정이 필요하다. 미국 콜롬비아대학 정치학 교수인 나디아 우르비나티는 『나, 인민 : 포퓰리즘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변형하는가?』에서 유럽적 맥락에서 포퓰리즘과 헌정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포퓰리즘(권력 지향 정치세력으로서 포퓰리즘)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한다.² 사회진보연대는 인민주의가 의회나 사법기관을 불신하면서,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법치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³ 이를 고려할 때, 우르비나티 교수의 설명은 포퓰리즘(인민주의)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우르비나티 교수의 포퓰리즘 설명

우르비나티 교수는 포퓰리즘을 논하기에 앞서 현대 헌정 민주주의를 설명한다. 그녀는 민주정에서 주권자의 권력이 ‘이원 지배’(diarchic) 즉, 의견(opinion)과 의지(will)라는 두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본다. 여기서 의견은 제도 바깥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영역이고 의지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 여론을 조율하는 제도와 절차를 의미한다. 이때 현대 헌정 민주주의는 의견과 의지를 독립된 영역으로 구별한다는 점에서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와 구별된다. 주권자와 통치자가 구별되며 주권자들의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도, 선형적으로 주어져 있지

1 윤종희, 「포퓰리즘, ‘국민주권’을 변형하려는 정치이념」, 《사회와 역사》 134, 2022.

2 Me, The People : How Populism transforms Democrac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3 이유미, 「인민주의와 팽창주의의 세계적 위협」,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2년 가을호를 비롯해 많은 글들이 인민주의의 위협성을 강조했다.

않기 때문이다. 세계대전 이전의 대중독재를 경험한 뒤, 현대 민주정은 다양한 매개조직(intermediation) 즉, 정당, 언론, 중앙은행, 독립된 사법부를 강화하며 의견과 의지 사이에 거리를 두었다.

의견과 의지는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다양한 매개조직을 통해 상호 연결되며 영향을 준다. 다양한 이익집단, 사회운동 단체들을 통해 형성된 여론은 매개(중개)조직, 특히 정당을 통해 보편적인 정치적 판단으로 나타난다. 정치적 판단은 선거를 통해 평가받으며 '다수'의 지지를 받는 '부분의 지배'(merecracy)를 용인한다. 그러나 선출된 '부분'으로서 대표는 고정되거나 영속성을 보장받지 않는다. 대표로서 정부는 다양한 의견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전체를 대표하는 정치적 과정(여론 수렴)의 시간을 확보하고 동시에 여러 매개조직을 거치며 정책을 결정, 집행한다. 이렇듯, 현대 헌정 민주주의는 의견과 의지 사이의 시공간적 거리를 선거와 매개조직을 통해 조절하면서 사회적 힘을 정치적 힘으로 바꾼다.

우르비나티 교수에 따르면, 포폴리즘은 이원지배 사이의 거리감을 참지 못하면서 등장한다. 의견과 의지 사이의 복잡한 시공간적 거리를 좁히고자 하며 이를 막는 다양한 매개조직들을 약화하고 그 작동방식을 변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포폴리즘, 특히 권력을 쥔 포폴리스트들은 선출된 '다수'의 대표를 사전에 정하고 배타적으로 존중한다. 그러나 파시즘과 달리 기존의 대의제와 제도, 기관들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파괴하지 않는다. 그들은 매개조직을 장악하여 권력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변형한다. 이 점에서 포폴리즘은 민주주의 외부의 적이라기 보단 내부에서 민주주의를 착취하는 기생충과 같다.

우르비나티는 포폴리즘은 기존의 민주주의 원칙과 개념을 변형하는 해석으로 민주주의를 내파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반기득권 개념을

변형한다. 현대 헌정 민주주의에서 반기득권은 권력에 대한 제도적 견제와 균형을 전제한다. 권력의 영속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제도적 견제와 여론 경쟁을 통해 독재를 막고자 한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반기득권 개념을 기득권에 대한 반대, 제거로 이해한다. 여기서 기득권은 엘리트 일반이 아닌 정치엘리트(기성 정당, 사법부, 언론, 관료)가 인민과 ‘지도자’ 사이를 막아서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포퓰리스트는 기존 정치엘리트를 비난하며 이들을 정치엘리트 외부의 인물인 자신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변형된 해석의 대상은 ‘인민주권’(people sovereignty)이다. 본래 ‘인민’은 대의제를 통해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이름으로 간접통치를 확립하는 절차적 개념이다. 즉, 주권자로서 추상적 집합체인 ‘인민’(국민)과 현존하는 ‘인민’을 구분하며, 현실의 대의제적 정치과정 곧 ‘다수’와 ‘소수’의 끝없는 경쟁을 추동하는 과정이 인민주권을 이룬다. 반면 포퓰리즘은 간접통치 개념을 전제하면서도, 주권자로서의 인민과 현존하는 인민 사이의 일치를 추구한다. 여기서 주권자로서 인민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일치하는 ‘진정한 인민’(the true people)이라는 인공적 개념이다. 진정한 인민은 언제나 도덕적인데 그들이 정말 도덕적이기보다, 기득권이 아니며 언제나 기득권이라는 ‘부정의’의 피해자이기에 도덕적이다. 그리고 진정한 인민이 아닌 자들은 ‘인민의 적’이다. 그렇기에 포퓰리즘 세력들은 권력을 확보할 시, 자체를 하지 않고 ‘인민의 적’을 향해 맹렬한 비방과 무력화를 시도한다.

‘인민’에 대한 변형된 해석은 ‘다수결’로 이어진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다원주의와 다수의 지배를 결합(의사결정방법, 권력의 결합)한 개념이다. 그러나 포퓰리스트는 다수결을 다수의 지배로만 이해한

다. 양자의 차이는 '소수'를 어떻게 다루냐에 달려있다. 포퓰리스트에게 '진정한 인민'은 언제나 다수다. '소수'는 언제나 기득권 정치엘리트다. 그들은 지도자/정당과 직접 연결된 인민의 의지를 물화(物化)하여, 진정한 인민과 그 지도자에 권력을 집중시켜 '소수'로서 '인민의 적'을 배제한다. 그렇기에 포퓰리즘 정당/정치인은 공적 토론을 억압하고 다원주의를 무시하며 인민을 정당/지도자에 통합해, 선거를 통해 그들이 수적으로도 다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즉, 포퓰리스트에게 선거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의례다.

포퓰리즘은 '대표성'(representative)에 대한 해석도 변형한다. 민주주의에서 대의제의 핵심 특징은 '위임대표'(mandate representation)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이들은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뿐만이 아니라 전체 유권자인 국민을 위해 선출된 대표자로서 국익을 위해서도 활동한다. 반면 포퓰리즘에서 대의제는 '인민 의지를 육신화한 대표'(representation as embodiment)다. 포퓰리즘 정당/지도자는 '진정한 인민'에 의해 선출된, 진정한 인민의의지를 보여주는 정당/지도자이므로 제도나 여론에 의해 견제받지 않으며 타협할 수 없다. 그들은 이미 인민 집합을 자신 안에 흡수한 리바이어던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구원자로 스스로를 내세운다.

포퓰리즘 정치인은 지지자들과 연결되어 있기에 권력을 확보한다고 해서 기득권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대중적 노출,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진정한 인민들에게 자신이 인민의 의지를 육신화한 대표임을 확인시키고 확인받는다. 포퓰리스트들에게 유일한 제약요인이 바로 진정한 인민의 여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퓰리즘 정당/지도자는 전통적인 정당과 전문 저널리즘을 상대화하고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청중을

육성한다. 우르비나티 교수는 버나드 마넉의 ‘청중 민주주의’ 개념에 따라, 청중과 연결된 지도자는 제도적 견제를 거부하며 전통적 정당의 지도자들보다 후견주의나 부패에 더 심하게 노출된다고 지적한다.⁴

결과적으로 포퓰리즘은 지도자와 올바른 인민 사이의 거리를 소멸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직접 대의제’다. 이는 위임 민주주의의 매개 모델이라는 현대 헌정 민주주의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포퓰리즘 대의제 아래에선 지도자와 진정한 인민 간의 신앙적 신뢰에 기초해 양자 사이의 장애물들(매개조직)을 약화하고 수단화하면서 지도자를 책임성으로부터 면제한다. 이를 위해 포퓰리즘 정당/지도자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referendum)와 신임투표(plebiscite)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⁵ 특정한 다수(진정한 인민)의 힘을 보여주어 견제와 비판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퓰리즘은 미디어(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정당정치와 제도적 기관, 절차 등을 무장해제, 수단화한다. 나라마다 맥락과 과정은 상이하지만, 방향은 대체로 매개조직의 쇠퇴로 나타난다. 우르비나티 교수는 포퓰리즘 세력이 매개조직의 쇠퇴를 지향하는 점에서 권위주의적 경향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만일 포퓰리즘 세력이 집권 후에 청중을 향한 직접 소통

4 마넉의 청중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은 고은영, 「불평등하고 평등한, 선거의 두 얼굴」,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4년 가을호를 참고하라.

5 블로나대학 사회학 교수 폴 블로커에 따르면, 포퓰리스트는 헌법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상위 법률이 아닌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며, 일반법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를 포퓰리스트 헌정의 주요 특징으로서 ‘헌정적 도구주의(constitutional instrumentalism)’로 규정한다. Blokker, Paul, “Populist constitutionalism” *Routledge handbook of global populism*, Routledge, 2018. 113-128.

주요 개념	현대 헌정 민주주의	포퓰리즘
반기득권	권력의 영속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견제	기득권 정치 엘리트에 대한 반대
인민과 정당/정치인	'인민(국민)'은 추상적 국민들의 집합체로 절차적 개념 정당/정치인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위임된 대표로서 전체를 대변	'인민'은 기득권의 반대항으로 특정한 정치인/정당과 연결된 '진정한 인민' 정당/정치인은 진정한 인민의 의지를 육신화한 존재
다수결	다원주의를 전제로 한 절차적 개념으로서 다수의 지배	기득권(소수)에 대항한 '다수'로서 진정한 인민의 지배
선거	정치적 판단에 대한 의사결정	진정한 인민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의례
대의제	다양한 매개조직을 통해 사회적 의견을 정치적 힘으로 바꾸는 과정	매개조직을 약화시켜 지도자와 (진정한) 인민간의 일체감 강화

[표] 우르비나티 교수의 포퓰리즘과 헌정 민주주의의 주요 개념 해석 요약

을 중단하고 제도에 대한 물리적 파괴, 폭정으로 나아가면, 포퓰리즘은 파시즘이 된다고 주장한다.

우르비나티 교수는 이러한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누적된 결함과 모순의 결과라고 본다. 20세기 민주주의 특징인 법치와 시민권이 기득권화되었으며, 금융세계화로 인한 민족국가 주권 약화, 중산층 감소, 인터넷 발달을 비롯한 정당 자체의 기반 변화를 배경으로 포퓰리즘이 성

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포퓰리즘의 부상, 정세의 변화 속에서 현재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제도와 기관들이 정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역사적 모순과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르비나티 교수는 포퓰리즘을 파시즘과 동일하게 해석하거나 민주주의 외부의 적으로 보며 악마화할 것이 아니라, 기존 헌정 민주주의의 한계 속에서 포퓰리즘이 성장했음을 인정하며 이를 통해 헌정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제도적, 정당정치의 개혁을 주장한다.

3. 유럽 포퓰리즘 개요

유럽에서 포퓰리즘은 유럽통합이 부딪힌 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유럽통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재건이라는 이해관계에서 출발했으며 냉전 종식 후 유럽연합 출범으로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정치적, 재정 통합과 무관한 독일 중심의 '화폐통합'에 가까웠다.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중심부' 국가와 그리스, 스페인 등 '주변부' 국가간의 경제 불균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의 재정위기를 필두로 유럽의 은행위기와 부채위기로 나타났다. 유럽중앙은행(ECB) 기술관료 중심의 징벌적 구제금융은 금융위기 회복이 아닌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유럽의 장기침체로 이어졌다.⁶

유럽통합에 대한 반감에 더해, '난민위기'는 각국에서 급증하는 이민자와 난민 문제 대처에 실패한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키웠다. 유럽연합은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급증하는 아프리카, 중동의 난민들을 어

6 박상현, 「브렉시트와 유럽통합의 미래」, 《경제와 사회》 115호, 2017.

떻게 수용할지를 두고 국가별로 분열했다. 늘어나는 난민을 각국의 사회정책, 제도가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면서 기성 정치세력을 향한 불만이 커졌다. 그 결과 과거 유로화나 유럽헌법조약을 거부한 세력들을 중심으로 유럽통합에 반대하며 개별국가의 민족주권을 강조하는 포퓰리즘 세력이 급부상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플레이션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각국의 주류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더욱 키웠다. 그 결과 포퓰리즘 세력이 동유럽과 남유럽을 넘어, 서유럽을 비롯한 소위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집권하거나 연정에 참여하는 사례로 이어졌다. 이탈리아의 형제당과 동맹당, 네덜란드 자유당, 핀란드 인민당이 대표적이다. 집권당은 아니라도 오스트리아 자유당, 영국 개혁당, 프랑스 국민연합, 독일을 위한 대안당 등은 기존 주류 정당을 능가하는 지지율을 보인다. 이들의 성장은 각국의 정당정치 지형뿐만이 아니라 사회 분위기를 바꾸며 민주주의를 손상시키고 있다.

실제 2025년 2월 말 발표된 유럽연합 산하 비정부기구 리버티즈(The Liberties)의 연간보고서 ‘법치 2025 보고서’는 유럽에서 민주주의의 침체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한다. 보고서는 6개 부문(사법 시스템, 반부패, 견제와 균형, 언론의 자유, 시민사회, 인권보호)을 기준으로 유럽국들을 분류한다. 그 결과 이탈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의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해체국’(dismantler), 프랑스, 독일, 스웨덴, 벨기에 는 민주주의 ‘추락국’(slider),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는 ‘정체국’(stagnator)으로 분류되었다.

국가	정당명	현 상황 (2025년)
영국	영국 개혁당(Reform UK)	25년 5월 지방선거 승리 5월 정당 지지율 30% (1위)
오스트리아	자유당(FPÖ)	현 의회 1당 4월 정당지지율 33% (1위)
벨기에	플람스의 이익(VB)	현 의회 2당
핀란드	핀란드 인민당(PS)	현 집권 연정 참여
프랑스	국민연합(RN)	현 의회 3당 1월 정당 지지율 34%(1위)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현 의회 다수당 연합 1월 정당 지지율 29%(2위)
독일	독일을 위한 대안(AfD)	현 의회 2당 5월 정당 지지율 25% (2위)
	바겐크레히트동맹(BSW)	5월 정당 지지율 4%
헝가리	피데츠(Fidesz)	현 집권 여당 4월 정당 지지율 43.5%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형제들(Fdi)	현 집권 여당 5월 정당 지지율 30% (1위)
	동맹당(Lega)	현 집권 연정 참여 5월 정당 지지율 9%
	오성운동(M5S)	5월 정당 지지율 12% (3위)
네덜란드	자유당(PVV)	현 집권 연정 참여 5월 정당 지지율 18% (1위)
폴란드	법과 정의당(PiS)	현 의회 다수당 5월 정당 지지율 32% (2위)
포르투갈	체가(Chega)	현 의회 3당 5월 정당 지지율 17%(3위)
스위스	스위스 국민당(SVP)	현 집권 여당 24년 11월 정당 지지율 29.9% (1위)
스웨덴	스웨덴 민주당(SD)	현 의회 2당 4월 정당 지지율 19% (2위)
스페인	복스(VOX)	현 의회 3당 5월 정당 지지율 14% (3위)
	포데모스(Podemos)	5월 정당 지지율 4%

이 글에서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 4개국을 중심으로 최근 주요 포퓰리즘 정당들의 행보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선 보고서에 따르면, 위 4개국은 전년도 대비 2개 부문 이상에서 민주주의가 퇴보한 국가들이며 포퓰리즘 정당의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다. 각 나라에서 포퓰리스트들의 행보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 혹은 변형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다.

4. 포퓰리즘 정당들의 행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사례

1) 개헌을 추구하는 이탈리아형제당과 멜로니 총리

2022년 이탈리아 총선은 많은 이들에 충격을 주었다. 네오파시스트 정당인 이탈리아의 형제들(Fdi, 이하 형제당)이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형제당은 무솔리니 정권 잔존세력들의 정당으로 사회운동당, 민족연합의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해왔다. 형제당은 팬데믹 시기 드라기 거국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내각 밖에서 정부를 비판했다. 드라기 내각이 백신접종,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또다른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M5S)과의 갈등 끝에 붕괴하자, 형제당은 기존 정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대거 흡수했다.⁷ 형제당은 2022년 총선에서 동맹, 전진 이

7 오성운동은 코미디언 베페 그릴로의 블로그 활동을 기반으로 탄생한 인터넷 정당이다. 일반적인 정당조직의 형태를 거부한 오성운동은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당원들의 인터넷 투표로 정한다. 2018년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며 집권당이 되었으나, 혼란을 야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진현, 「창궐하는 인민주의: 지속불가능한 경제정책과 반지식민주의: 마르크스주의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2년 봄호를 참고하라.

탈리아와 연합하여 상하 양원 모두 과반을 차지했다.⁸ 연정파트너인 동맹과 전진 이탈리아의 낮은 지지율에 비해, 형제당은 최근까지도 30%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연정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 총리는 조르자 멜로니로 형제당을 2010년대부터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청년시절부터 형제당에서 활동하며 경력을 쌓았고 2012년 당시 동맹, 전진 이탈리아로 통합하자는 당내 분위기에 반대하며 이후 당을 이끌었다. 2022년 총선 후 이탈리아 최초 여성총리가 된 그녀는 세간의 우려와 달리,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이었고 유럽연합에도 적극 협조했다. 이런 행보는 당시 자유주의 정치인과 학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포퓰리즘 세력을 순치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국내정치에서 형제당과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 헌정을 크게 훼손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멜로니 총리와 형제당이 준비 중인 두 가지 개헌안 때문이다.

(1) 총리 직선제 개헌안

첫 번째 개헌안은 2023년 11월에 발표된 총리 직선제 개헌안이다.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무솔리니의 독재를 막기 위해 1948년 이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대통령이 존재하지만, 상징적인 국가원수에 가깝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단순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채택했는데, 그 결과 여러 정당이 난립하면서 내각이 안정적이지 못했다. 1992년 ‘마니폴리테’ 수사로 주류 정당이던 기민당, 사회당이 몰락하면서 내각의 변

8 김시홍, 「2022 이탈리아 총선과 멜로니 정부의 과제」, 《유럽연구》 41, 2023.

동과 혼란은 가속화되었다.⁹ 1948년 이래 내각이 총 68번 교체되었으며 내각의 평균 존속기간이 18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내각 구성에 실패해, 대통령이 임명한 기술관료 내각의 빈도가 잦아졌다. (이탈리아 대통령은 의회해산권과 내각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행상 의회 자체적으로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는 위기시에는 대통령이 관료 내각을 임명한다. 2021년 마리오 드라기 내각이 대표적이다)

멜로니 정부는 빈번한 내각 교체, 불안정한 정당정치를 이유로 현행 헌법을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당초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던 멜로니 정부는 2023년 10월 29일 연정회의를 통해 개헌안을 마련했고 11월 3일 하원의회에 제출했다. 개헌안 주요 내용은 ▲ 임기 5년 총리 직선제 보장 (최대 2연임 가능) ▲ 상하 양원에 집권당 의석 프리미엄 보장(55%)이다. 동 개헌안은 2024년 6월 하원을 통과했다. 이후 상원에서 현재까지 논의 중이다. 이탈리아 개헌 절차는 상하 양원의 1차 투표(과반 동의)와 2차 투표(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모두 통과하거나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멜로니 총리는 총리 직선제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며 의회에서 개헌안이 좌절될 경우,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실제 멜로니 총리는 자신의 법률고문이자 직선제 개헌안을 작성한 마리니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며 개헌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보

9 ‘마니 폴리테’는 ‘깨끗한 손’이란 뜻으로 이탈리아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사업명이다. 1992년 밀라노 시립요양원 부패 수사 과정에서 사회당의 불법 정치자금에 밝혀졌다. 당시 밀라노 검찰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공공기관 수사를 진행하면서 기민당, 사회당 등 주요 정치인들의 부패가 드러났으며 1400여 명의 정치인, 기업인이 수감되었다. 이 수사로 기존 정치인, 정당의 몰락과 함께 1993년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의 선거제도가 단순비례대표제에서 단순다수제(지역구)로 바뀌었다. 그러나 정치혼란으로 부패 수사 동력이 갈수록 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부패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였다. 제1야당인 민주당(PD)은 개헌안이 무솔리니 정권 시기 1당에게 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내줬던 아체르보 법안(Acerbo Law)을 연상시키며,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 2024년 11월 8차례의 투표 끝에 정부는 마리니 임명에 실패했다. 그러나 정부는 다시금 마리니 임명을 밀어붙였다. 12월 들어 헌법재판관 공석이 4석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정치권에 헌법재판관 임명 공백을 장기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결국 마리니 후보자는 2025년 2월 13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5월 7일 상원 질의에서 멜로니 총리는 '총리 직선제 개헌안' 통과에 의회가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탈리아 여론조사기관 스카이TG24의 설문에 따르면 총리 직선제 개헌 찬성 의견이 54%에 이르므로, 여론이 자신에 유리하다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줄리아노 아마토 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학자들은 이탈리아 내각의 불안정성은 파편화된 정당시스템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 없이 대통령을 능가하는 권위를 총리에 주는 개헌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 이탈리아 사법부 개혁 개헌안

멜로니 정부가 밀어붙이는 두 번째 개헌안은 사법부 개혁 개헌안이다. 멜로니 정부는 사법부와 갈등을 지속했다. 이탈리아는 난민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따라서 멜로니 현 정부는 난민 즉, 불법 이민자를 적발하면, 구금하고 강제이송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유럽연합의 이민·난민 관련 지침과 유럽사법재판소

판시와 충돌한다. 이주민을 출신국가로 이송하는 기준이 되는 ‘안전 국가’ 규정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정부의 법령은 ‘일반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가’로 넓게 해석하지만, 유럽연합 지침과 판시는 나라 전체가 안전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만이 출신 국가로 이송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탈리아 법관들은 유럽법 우선원칙에 따라 개별 난민에 부과된 구금조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 인사들은 구금취소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공격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이집트 난민 12명에게 구금취소를 판결한 알바노 판사의 경우, 수십 건의 살해협박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포스톨리코 판사 역시 4명의 튀니지 난민 구금취소에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멜로니 총리는 페이스북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반하는 행위’라 비판했으며,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동맹)는 X(트위터)에 판사의 과거 집회 참여이력을 공개하며 ‘정치화된 판사의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아포스톨리코 판사는 1년간 계속된 정치권의 사퇴 압박 끝에 2024년 12월 사임했다.

2024년 5월, 이탈리아 정부는 사법부 개혁 개헌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 판사, 검사 경력 분리 ▲ 두 개의 별도의 최고사법위원회(CSM)를 통해 판사, 검사 임용, 승진 업무 체계 분할 ▲ 최고사법위원회 위원 임명 방식 개정(선출에서 추천으로 변경) ▲ 법관의 징계를 담당하는 별도의 고등징계법원 설치다. 동 개헌안에 대해 총리실은 판사, 검사 유착문제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개혁안이라 발표했다. 멜로니 총리는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사법체계를 개혁하고 비선출 엘리트인 사법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헌법(104조)에 따르면 최고사법위원회는 사법행정 최고기

관으로 판사와 검사의 임용, 승진, 징계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탈리아에서 검사와 판사는 '사법관'(magistrate)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업무상으로만 구별된다. 최고사법위원회는 30인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 3인(대통령, 검찰총장,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선출된다. 3분의 2는 사법부에서 선출된 판사들이며, 3분의 1은 의회-사법부 합동회의에서 법학교수와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중 선출한다. 개헌안에 따르면 검사 최고사법위원회는 법무부 산하에 둔다. 그리고 두 최고사법위원회는 국회, 검사, 판사가 작성한 명단 중에 무작위 추첨으로 지명한다. 고등징계법원은 15명의 판사로 구성된 최고사법위원회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둔다. 개헌안은 2025년 1월 16일 하원에서 1차 투표를 통과했다.

이탈리아 법조인들은 해당 개헌안에 반발했다. 로마대학 법학교수 벤베누티는 이탈리아 정치권과 사법부 간에 지속적인 갈등의 역사라는 맥락을 볼 때, 개헌안은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무력화하는 안이라 우려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집권기에 부패 문제로 검찰에 여러 차례 기소되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2003년과 2008년에 고위공직자 형사책임 면제법을 통과시켰고, 2005년엔 공소시효 단축법도 통과시켜 자신을 향한 수사를 막고자 했다. 그리고 검찰을 법무부 산하로 두는 등 현 법안과 유사한 사법개혁 개헌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사법부 훼손 시도는 당시 나폴리타노 대통령의 비협조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저지되었다. 현 정부 역시 산탄케 관공부 장관, 살비니 부총리 등이 검찰에 기소되거나 되었던 상태다.

이탈리아 판사협회(ANM)는 개헌안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안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파로디 판사협회장은 개헌안이 정치권의 부패 혐의를 덮을 수 있고, 사법부의 자치원칙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판사협회는 2월 27일 이탈리아 판사 하루 파업을 결정했다. 이날 이탈리아 전역에서 80%의 판사들이 파업에 동참했다. 전진 이탈리아, 형제당은 해당 파업을 '반란'이라 규정하며 비난했다. 이후 3월부터 진행된 판사협회와 법무부 장관 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상원은 6월 11일 개헌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것을 밝혔다. (18일로 연기되었다) 유럽 판사협회(EAJ)는 계속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진행되는 개헌에 우려를 표하며 개헌 절차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렇듯, 멜로니 총리와 형제당, 동맹, 전진 이탈리아의 연립정부는 개헌안을 통해 이탈리아의 헌정을 바꾸고자 한다. 비록 양원 모두 연정의 의석이 3분의 2를 넘기지는 못하며, 국민투표 요건 역시 유권자 50만 명, 5개 이상 지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있는 만



이탈리아 판사협회(ANM)의 2025년 2월 27일 파업

2월 27일 판사파업 당일 로마 최고법원에서 이탈리아 판사협회 지도부를 포함한 100여명의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이탈리아 헌법전을 흔들며 정부의 사법부 개혁 개헌안에 반대하는 플래시몹을 진행했다. (사진 출처: 《la Repubblica》)

کم 단기에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형제당이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며 내각이 역대 5번째로 장수하고 있고, 오성운동이 민주당과 달리 헌정 문제에 관심이 적은 상황은 개헌을 둘러싼 변수가 될 전망이다.

2) 행정부와 사법부를 위협하는 프랑스의 멜랑송과 르펜

2024년은 프랑스 정치사에 있어 격변의 해였다. 2024년 6월 유럽의 회 선거에서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의 지지율 급상승과 여당인 르네상스당(RE)의 참패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국민의 전환을 위해 의회(하원)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결정했다.

그러나 6월 30일에서 7월 7일까지 치러진 조기 총선 결과는 마크롱 대통령의 기대를 벗어났다. 1차 투표 결과 국민연합은 유럽의회 선거 때보다 더 높은 33%의 지지율을 얻었으며 297개 선거구에서 1위를 기록하며 과반(289석)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어진 2차 투표를 앞두고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당을 포함한 앙상블 중도연합은 국민연합을 제외한 정당들에 단일전선 구축을 호소했다.

그 결과 210여곳의 선거구에서 후보자들의 자진사퇴로 양자구도로 2차 선거가 치러졌다. 2차 투표 결과 국민연합은 3당으로 밀려났으며 1당은 좌파 정당연합인 '신인민전선(NFP)'이 되었다. 그러나 어느 정당(연합)도 과반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 이후 프랑스 정치는 갈등의 연속이다.

	NFP (신인민전선)	Ensemble (양상블)	LR (공화당)	RN (국민연합)
1차 득표율	28%	21%	6%	33%
1차 의석	32석	2석	1석	38석
2차 득표율	26%	24%	5%	37%
2차 의석	148석	157석	38석	104석
최종 의석	180석	159석	39석	142석

[표] 2024 프랑스 총선 득표율과 하원의석수

프랑스 선거제도는 결선투표제를 채택한다. 총선에서 1차 투표를 진행한 후,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즉시 당선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선거구별로 12.5% 득표율을 넘기는 후보들이 결선에 올라 2차 투표를 진행한다. 결선투표제는 군소정당보다 거대정당에 유리한 제도로 실 득표율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행정부를 겁박하는 멜랑송과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1당인 신인민전선을 주도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연합 내 최대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와 그 대표인 장 퓌 멜랑송이다. 사회당 출신인 멜랑송 대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사회당을 탈당하고, 좌파당을 거쳐 2016년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를 창당했다.¹⁰ 그는 신자

10 멜랑송 대표는 트로츠키주의 조직인 국제주의 공산당(PCI)의 후신인 국제주의 공산주의 조직(OCI)에 1972년 가입했다. 그러나 조직내부 갈등 끝에 당시 미테랑 전 대통령이 이끄는 사회당으로 1976년 당적을 변경했다.

유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자로 2016년 올랑드 대통령(사회당)의 노동법 개정에 격렬히 반대하며 기존의 프랑스 양당의 한축인 사회당 지지층을 상당 부분 흡수했으며 걱정적인 연설로 인기를 올렸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선 21.9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2%p 차이로 2위인 르펜에 밀려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그는 사회당, 공산당, 녹색당과 정당연합을 형성, 현재까지 좌파정당 연합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그의 행동에 주목해 국내 사회운동 일각에서는 그를 높게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멜랑송 대표와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문제적인 행동으로 프랑스 내에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표 사례를 들어보겠다. 먼저 멜랑송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는 2025년 5월 기준 가장 많은 팔로워(유튜브 118만, X 280만)를 보유한 정치인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팔로워는 유튜브 38만, X 10만이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언론인들과 정치인을 공격하는 게시물을 빈번히 올린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후 프랑스에서 유대인을 겨냥한 범죄가 급증하자, 이에 반발한 반유대주의 반대 집회를 두고 '이스라엘의 학살을 지지하는 집회'라 비난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는 부정선거론을 제기하고 마크롱을 위시한 기득권이 대선을 앞두고 계획적인 살인사건을 저지를 것이라 주장해 언론과 정치인의 못매를 맞았다.

멜랑송 대표의 공격적 언행은 그의 반체제적 세계관에 기초한다. 그의 세계관은 올해 4월 출간된 『이제는 인민입니다!』(Now, The People!)에서 잘 드러난다. 멜랑송 대표는 책에서 '인민'을 1%의 과두정에 배제된 이들로 정의한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성 조직, 기관은 실패했음이 밝혀졌기에 그들의 권위, 무능에 맞서 '인민'들이 행동에 나서야 하며, 현 5공화국을 넘어 자코뱅적 공화주의에 기초한 6공화국을 건

설하자고 주장한다. 그의 반기독교적 시각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유럽연합과 나토 탈퇴’라는 공약으로 나타났다.

멜랑송 대표는 대중정당 모델도 거부한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당원 투표나 공개적인 지도부 선거를 하지 않으며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중앙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다. 당은 2022년 12월 중앙조정위원회 인사개편을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멜랑송 대표에 비판적인 라켈 가리도와 다니엘 시모네를 축출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은 가정 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멜랑송 충성과 콰테닝을 무리하게 공천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사퇴시켰다. 가리도는 《더 네이션》 지와의 인터뷰에서 당내에 토론 문화와 중재 노력이 없다고 멜랑송을 저격했다.

총선 후 신인민전선이 의회 1당이 되자, 멜랑송 대표는 자신이 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했다. 이원정부제인 프랑스에선 대통령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다수당에 총리직을 주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극단주의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와 국민연합에 총리직을 주지 않겠다고 밝히며, 두 정당 외의 정당들과 연정 혹은 총리직을 협상했다. 신인민전선 내 사회당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신인민전선이 추천한 뤼스 카스테 총리 후보자가 아닌 공화당의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했다.

바르니에 총리 임명 후 신인민전선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프랑스노총(CGT) 및 시민단체와 연계해 마크롱 퇴진 시위를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9월 내각이 구성되자마자 신인민전선은 바르니에 내각을 상대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불안정한 상황은 결국 12월 4일 예산안을 둘러싸고 폭발했다. 신인민전선의 내각불신임 투표에 국민연합이 가세하면서 바르니에 내각은 출범 3개월 만에 붕괴했다.

이는 62년 만에 의회에서 통과된 내각불신임 결의이고 바르니에 내각은 역대 가장 단명한 내각이 되었다. 멜랑송은 직후 스페인 매체 《엘 파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는 합의가 아니며, 자신과 신인민전선은 계속해서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고 결국엔 마크롱 대통령을 퇴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멜랑송 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실천에 옮기고자 했다. 바르니에 내각 붕괴 후 2024년 말 들어선 바이루 내각 역시 2월까지만 6차례의 내각불신임 투표를 받았다. 그러나 국민연합의 비협조와 사회당의 이탈로 내각은 계속해서 생존 중이다. 그 결과 바이루 내각은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사회당이 불신임 투표에 협력하지 않자 ‘배신자’로 규정했으며 지지자들은 소셜미디어에 사회당을 국민연합과 동급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사회당의 제롬 구에지 의원은 5월 노동절 행사에서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지지자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2) 사법부를 위협하는 국민연합(RN)의 르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 역시 프랑스 정치위의 한축이다. 국민연합은 장 마리 르펜의 주도로 1972년 창당한 정당 국민전선(FN)의 후신이다. 나치 옹호 등 극단적 발언으로 악명이 높은 국민전선은 마리 르펜의 딸 마린 르펜이 2011년 당권을 물려받은 후 상승세를 보였다. 마린 르펜은 당 대표 시기(2011~2022년) 당에 대한 낙인을 지우고자 탈악마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쳤다.¹¹

11 조홍식, 「프랑스총선과 유럽포퓰리즘 : 민족동맹(RN)의 성공과 한계」, 《의정연구》 30권 3, 2024.

그녀는 2015년 극단적 발언을 일삼는 아버지 장 마리 르펜을 출당시켰으며 인종주의적 수사보단 공화주의적 수사와 복지정책을 내세우며 기존 프랑스 양당의 한 축이던 공화당의 지지층을 상당부분 흡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녀는 2017년, 2022년 대선 모두 결선에 진출하며 프랑스 내에서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 되었다.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IFPO에 따르면, 그녀는 올 3월까지 차기 대선후보 1위를 유지했다.

르펜은 최근 큰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다. 3월 31일 프랑스 형사법원이, 그녀가 유럽의회 기금 400만 유로를 유럽의회 활동이 아닌 당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르펜은 징역 4년형(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구금, 2년간 집행유예)과 벌금 10만 유로, 공직선거 출마금지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공직선거 출마금지를 1심부터 즉각 적용했다. 판결문은 즉각 집행의 근거로 재범 위험성과 공공질서 혼란을 들었다.¹² 이 판결로 르펜은 2027년 예정된 대통령 선거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프랑스 언론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르펜의 피선거권 박탈과 1심에서의 형 집행 판결은 이례적인 판결이 아니다. 프랑스에서 모든 공직자금유용 유죄판결은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졌다. 특히 프랑스는 이전부터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 엄격한 사법조치를 취해왔다. 2004년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유력 대선주자였던 알

12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과 관련하여 르펜은 자신의 당을 위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공공질서 혼란’과 관련해서 정치적 부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 후보는 민주적 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았다. 3월 28일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마찬가지로 공금유용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지방의원에게 대해 부패와 공직남용에 대해 즉시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랭 쥐페 대중운동연합(UMP) 당(현 공화당) 대표는 재정 비리 건으로 1심에서 10년 간 피선거권 박탈을 처분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뒤집혔으나 당시 그는 당 대표에서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최근엔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도 판사 매수,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2024년 12월 파기원(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 전자발찌 착용, 3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처분받았다.

르펜과 국민연합 지도부는 판결에 강하게 불복했다. 르펜 측은 정치적 판결임을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항소심은 2026년 여름까지로 이어질 예정이다) 에릭 시오티 의원은 근거 법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조르당 바르텔라 국민연합 대표는 《세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의 완전한 부정”이며 판결에 항의하는 집회를 조직할 것을 밝혔다. 실제 보방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르펜은 판결이 ‘마녀사냥’이자 ‘정치적 탄압’이라 주장하며 자신을 흑인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 푸틴에 저항한 활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빗대며 사법부에 계속해서 저항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1만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프랑스 국기를 흔들며 “마린 대통령”, “내가 마린이다” 구호를 외쳤다.

르펜 지지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갔다. 르펜 지지자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판결을 내린 페르튀스 판사의 신상, 집주소를 공유하며 살해협박했다. 극우매체인 《프론티어》는 이민자 문제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 60여 명의 명단을 공개한 후, 이들을 향해 위협과 모욕을 쏟아냈다. 법관에 대한 위협 수준이 도를 넘어서자 프랑스 최고사법위원회(CSM)는 성명을 발표해 “판사를 향한 개인적인 위협은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 다르마넵 법무부 장관 역시 판사에

대한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르텔라 대표는 텔레비전 채널에 출현해 판사에 대한 개인적 위협에 거리를 두면서도 “더 많은 프랑스인들이 분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특이한 점은 르펜에게 내려진 판결에 대한 멜랑송 대표의 반응이다. 그는 X에 “선출된 공직자를 해임하는 선택은 오직 인민만이 할 수 있다”며 판결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멜랑송 대표의 견해는 사법부에 대한 적대감에서 비롯된다. 2018년 멜랑송 대표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멜랑송 대표가 수사과정에 협조하지 않자 검찰과 경찰은 당사와 자택을 압수수색 했는데, 이 과정에서 멜랑송 대표는 검경에 폭력을 행사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가 공화국이다”를 외쳤다. 결국 그는 2019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더해져 징역 3개월과 8천 유로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당시 멜랑송 대표는 판결이 ‘정치판결’이라 반발했다.

이처럼 사법부에 대한 그의 불복종 행보는 신인민전선 내 다른 정당들에서도 반감을 키웠다. 르펜 지지자들의 판결 불복집회에 맞불집회를 연 신인민전선은 2027년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대통령 후보가 멜랑송 대표여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멜랑송 지지자와 비판자 간에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여당을 능가하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멜랑송 대표와 국민연합의 르펜으로 인해 프랑스의 정치 불안정성이 커졌다. 지난해 말 국제신용등급평가사 무디스, S&P는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재정적자가 심해진 상황에서 정치혼란이 가중된 점을 근거로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자신의 조기총선 결정이 실수였음을 인정



2022년 프랑스 대선 주요 후보 공보물: (좌)멜랑송, (중)마크롱, (우)르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멜랑송과 르펜은 정년연장 반대 등의 사회정책과 나토 탈퇴를 비롯한 대외 정책 공약에서 일치했다. 결선투표에서 1차 투표 당시 멜랑송 투표자의 17%가량이 르펜에 투표했다. (사진 출처 : 《로이터》)

하며 현명한 판단과 새로운 결정을 해줄 것을 프랑스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총선 재실시, 조기대선, 두 극단주의 정당을 배제한 정당연합 개편 중 어느 선택지를 택해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방어적 민주주의’를 시험하는 독일 대안당(AfD)

2025년 2월 23일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하원) 선거는 이변으로 불렸다. 극우 정당으로 분류되는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 이하 대안당)이 전통적인 독일 양당의 한 축인 사회민주당(SPD)을 제치고 의회 2당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2024년 하반기 집권 연정(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 내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FDP)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확대

된 재정적자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안을 두고 갈등했다. 갈등의 결과 자유민주당이 연정을 이탈하면서 올라프 숄츠 총리 내각은 내각불신임 투표로 무너졌다. 그 결과 조기총선이 치러졌는데, 대안당은 선거기간 내내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일론 머스크, 도널드 트럼프의 관심과 지지를 받으면서 주목받았다. 대안당은 어떤 정당인가?

(1) 분권적인 운동정당

대안당은 2013년 경제학 교수인 베른트 루케가 창당한 정당이다. 당시 당은 유럽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에 불만이 많은 경제계 인사들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대안당은 반난민 주장을 포함해 인종주의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초기 당내 소수파였던 인종주의자들이 반난민 시위운동단체인 폐기다와 연계하며 당내 목소리를 키웠다. 2015년 당대회를 기점으로 이들은 당 지도부에 대거 유입했다. 이후 베른트 루케를 포함한 창당 초기 지도부들의 상당수가 탈당하면서 인종주의적 색채가 강해졌다.

대안당은 앞선 정당들과 달리 1인의 지도자가 주도하는 정당이 아닌 분권적인 정당이다. 당은 초창기부터 당원들이 당의 주요 정책공약, 후보자 선정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끔 상향식 발의를 광범위하게 허용했다. 여기에 연방제로 인한 잦은 지역선거는 당 지역조직들이 발언권을 키우기 위해 지역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강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한 구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대안당은 지역에 뿌리내리는 데 성공했다. 독일 언론 《프랑크푸르트 알레마이네 자이퉁》에 따르면, 동독지역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많고, 지역 교육

기반이 부실하며, 여성 다수의 서독 이주현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았다. 대안당은 지역 청년 남성층을 중심으로 보호주의적 접근을 취했으며 선거기간이 아닐 때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런 전략이 주효했다고 분석한다.

대안당 지역조직 지도자들은 지역에서의 기반을 바탕으로 공식, 비공식적으로 극단적인 시민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극단주의 단체 활동가들과의 연계는 지역조직 지도자들의 당내 발언권을 높였다. 튀링겐 지역의 대안당 지도자 비요른 호케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당내 극단주의 분파인 ‘플뤼겔(날개)’의 리더로 다양한 극단주의, 민족주의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공격적인 활동, 동원을 시도한다. 그 결과 그의 분파는 상대적 소수임에도 당 지도부를 압도했다.¹³

호케는 1945년 이전의 독일을 지향하며 ‘하이마트’(마음의 고향) 즉, 독일인의 정체성으로서 게르만족이라는 혈통과 독일 영토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대안당은 운동정당(movement party)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역사전쟁을 주도한다. 실제 그와 그 지지자들은 매년 튀링겐 주의 빌헬름 황제 기념비 앞에서 모임을 갖는다. 나치 옹호 등 금기시되던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이던 대안당은 2021년부터 독일 연방헌법수호청(BfV)으로부터 ‘극우 의심단체’로 지정되어 감시를 받았다.¹⁴ 말자크빈케만 전 의원을 비롯한 일부 당원들이 2022년 과거 독일제국 산하 튀링겐

13 Heinze, Anna-Sophie & Manès Weisskircher, ‘No Strong Leaders Needed? AfD Party Organisation Between Collective Leadership, Internal Democracy, and “Movement-Party” Strategy,’ *Politics and Governance*, 9.4, 2021.

14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은 연방내무부에 소속된 국내 정보기관으로 연방헌법보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는 극단주의 세력을 감시하고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왕족인 하인리히 13세를 옹립하려는 쿠데타 계획에 연루되면서 독일 주요 정치인들은 대안당에 위협감을 크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대안당은 승승장구했다. 2017년 첫 하원의회 선거에서 의원을 배출한 뒤, 2023년 튀링겐주에서 처음으로 지자체장을 배출했으며 지지율도 사회민주당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선 막시밀리안 크라 등 호케의 측근들이 대거 입후보했고, 이전보다 의석을 6석 늘리며 일부 동유럽 극단주의 정당과 함께 교섭단체 ‘유럽주권국가연합’을 결성했다.

(2) 대안당의 독일 헌정 위협과 방화벽

대안당의 상승세는 미디어 전략과 관련있다. 대안당은 미디어를 활용하여 기성 언론, 정당/정치인, 제도에 대한 공격을 적극적으로 감행한다. 무해화 전략을 통해 전통 미디어에선 정제된 언어를 쓰되, 소셜미디어에선 극단적인 용어를 쓴다. 가령 대안당은 젊은 여성 인플루언서들을 고용해 당의 요구, 주장이 무해함을 어필한다.

동시에 개념에 대한 재의미화 전략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엘리스 바이텔 대안당 공동대표는 ‘방어적 민주주의’(defensive democracy) 강화를 주장한다. 본래 방어적 민주주의란 극단주의적인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민주정을 수호하려는 정치 질서로, 1930년대 나치 정권에 대한 반성으로 헌법학자 칼 뢰벤슈타인이 주창한 개념이다. 그러나 바이텔 대표는 이 개념을 이주민, 난민에 대한 방어로 변형하여 사용한다.

그 결과 독일 언론에서 매년 선정하는 ‘올해 최악의 단어’는 거의 매

년 대안당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선정된다.¹⁵ 대안당은 소셜미디어를 특히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대안당은 ZDF, ARD 등 전통 미디어들이 자신들을 왜곡한다고 보며, X,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대안 미디어'로 사고한다. 크라 의원은 전통 미디어가 좌파 프로파간다만 알리는 편향된 언론이라 지적하며 유튜브, 틱톡을 볼 것을 권장했다.

이들은 가계정과 AI 계정을 활용하여 대안당의 주장을 홍보하거나 경쟁자, 기관을 모욕하는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2024년 X, 인스타그램에서 만들어진 AI 계정 '라리사 바그너'는 대안당의 메시지를 홍보하며 대안당에 투표할 것을 요구하는 포스트를 자주 올린다. 또한 재미나고 우스꽝스러운 챌린지를 하는 여타 정당, 정치인들과 달리 대안당은 정장을 입고 진지한 연설을 하는 영상을 올리며 차별화를 시도한다. 그 결과, 주요 소셜미디어에서 독일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정치인들은 대부분 대안당 정치인들이다.

최근 총선 과정에서 대안당은 외부의 지원도 상당히 받았다. 총선 전 미국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대안당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렸으며, 1월 8일 엘리스 바이텔 대안당 공동대표와 온라인 회담을 진행했다. 70분간 진행된 회담은 약 460만 명이 시청하며 큰 화제가 되었다. 러시아도 대안당을 지원했다. 독일 언론 《도이체빌레》는 러시아산으로 추정되는 봇, AI 유저들이 선거기간 동안 기민당 당대표인 메르츠 대표와 녹색당 소속의 로버트 하벡 전 부총리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그 외에도 러시아 봇들은 대안당을 홍보하고, 리

15 정윤서, 김면희,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의 성장요인 연구 : 소셜미디어 활용전략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42, 2024.

시아를 옹호하는 게시글과 영상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대안당과 연계된 극단적 대중운동 단체들은 법원에 수차례 소송을 걸거나 온라인발 대중집회를 조직하며 정부와 주류 정치인들에 적극적으로 항의했다. 대안당 의원들은 의회 산하 위원회 위원장 선출 배제 건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에만 수십 차례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22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대안당은 지지자와 극단주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격렬한 시위를 진행한다. 4월 26~27일 독일 주요 대도시에서 열린 ‘독일을 위한 단결’(GfD) 집회가 대표적이다. SNS에서 시작, 조직된 이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대안당을 배제하는 기존 정당들을 비난하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 참가자 일부는 나치 경례를 하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지역에선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온라인/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대안당의 행태는 5월 2일 연방헌법수호청의 ‘극우단체’ 지정으로 이어졌다. 연방헌법수호청은 지난 몇 년 간의 감시 결과 대안당 내에서 극단주의자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져 반헌법적 위협이 크다고 판단해 대안당을 극우단체로 지정했으며, 통화내역 감청 등을 포함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이틀 뒤, 대안당에 당적을 두거나 연관된 공직자들의 조사가 이뤄졌으며 경찰관 최소 193명이 조사-징계절차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안당은 ‘반대세력을 배제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남용’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걸었다. 헌법수호청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극우단체 지정을 보류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산되었다. 대안당 지지 확산을 우려한 기민당/기사당 연합(CDU/CSU), 사민당은 대안당에 겨냥한 각종 방화벽(Firewall)을 강화했다. 의회 의석 3분의 2의 동의를 필요한 헌법재판관 임명이 교착상태가 되지 않게끔, 2024년 12월 헌법재판관 신규임명 전



독일을 위한 단결(GfD) 시위

4월 26일 8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도르트문트에 모여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독일 국기와 러시아제국 깃발을 흔들며 독일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했다. 나치 경례를 하다 경찰에 체포된 참가자들도 있었다. (사진 출처: 《Tagesspiegel》)

까지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임시연장하고 상원으로 판단을 넘기는 내용을 헌법에 넣었다. 또한 새 의회 개회 전에 전 정권 붕괴의 원인이 된 정부부채 한도 브레이크를 개정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신임 메르츠 총리의 기민·기사당/사민당 연립정부는 1야당에 예산위원회 위원장을 주는 관행과 달리, 부처별 위원회 위원장에 대안당 의원을 배치하지 않기로 합의,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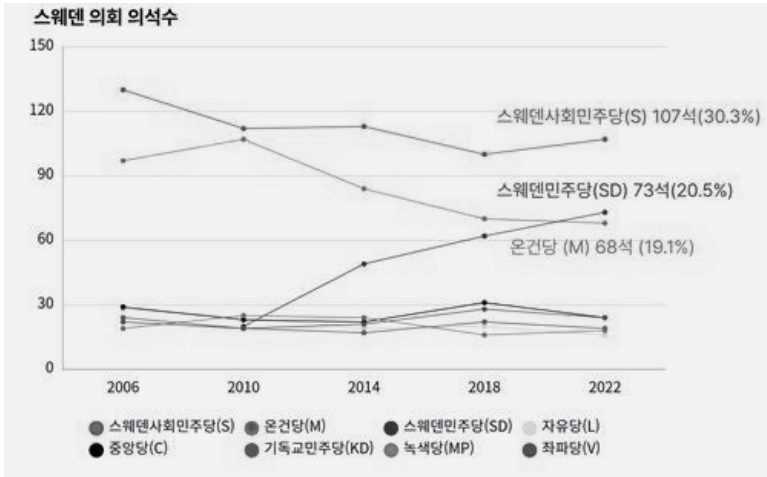
한편, 또다른 포퓰리즘 정당인 바젠크네히트동맹(BSW) 역시 제도를 위협하고 있다. 자라 바젠크네히트는 과거에 좌파당(Die Linke) 당 대표였는데, 대리제해 해제와 난민 반대에 동의하지 않는 좌파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었다. 그녀는 2023년 탈당하고 자신의 정당을 창당했다.

바겐크네히트 대표는 자신의 당을 ‘좌파 보수주의’ 정당이라 주장하며 좌파당의 옛 기반인 동독지역을 공략하여, 대안당이 주도하는 반난민 집회에도 참석했다.

2024년 9월 지방선거에서 당은 작센주, 튀링겐주에서 10% 이상을 득표하며 지역 3당이 되는 성과를 보였으며, 총선 기간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안당과 기반이 겹친 탓에 의회 진입 기준인 정당지지율 5%를 넘기지 못하고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선거 후 자당에 분류되었어야 할 표 최대 3만 2천 표가 누락되거나 잘못 분류되었다면서 선거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개표를 요구하는 등 선거결과에 불복 중이다.

이렇듯, 극단주의 성향을 보이고 기존 제도에 도전하는 포퓰리즘 정당을 두고 독일 정계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독일 기민당/기사당 연합의 옌스 스판 원내대표는 대안당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방화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은 비록 집권연정 내에서 강한 반발을 야기했고 수용되지 않았지만, 어디까지, 어떻게 그들을 배제하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지는 여전히 쟁점이다.

전후 독일이 극단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에 입각하여 도입한 여러 제도적 장치(위헌정당 해산, 헌법수호청)와 정치질서는 시험대에 올랐다. 독일 헌정은 대안당을 비롯한 포퓰리즘 정당의 도전을 방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인가? 이를 둘러싸고 독일정치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스웨덴 총선(2006~2022년) 정당별 의석 현황

스웨덴민주당(SD)은 2010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하여 20석을 획득한 이래로, 뒤이은 총선에서 계속해서 지지율과 의석수 모두를 늘렸다. (자료 출처 : Europeelects)

4) 스웨덴 정치를 교란하는 스웨덴민주당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한 복지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스웨덴은 최근 범죄율이 올라가고, 그에 비례해 정치권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스웨덴민주당(SD)은 혼란의 결과물이자 동력이다. 2022년 총선에서 스웨덴민주당이 스웨덴의 기존 정당정치 지형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2022년 총선 결과는 충격의 연속이었다. 극우 정당으로 분류되던 스웨덴민주당이 21%의 지지율로 사회민주당(S, 이하 사민당)에 이어 의회 2당이 되었다(스웨덴은 단원제 의회의 의원내각제 국가다). 기존 정당연합 중 누구도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스웨덴민주당은 온건당(M) 주도의 우파정당연합(온건당, 자유당, 기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소수정권인 우파정당연합은 스웨덴민주당과 ‘티도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르면 스웨덴민주당은 온건당 주도 연립 내각에 입각하지 않는 대신 정부의 주요 부처 내 요직을 배정받고 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키로 했다.

(1) 스웨덴민주당은 어떻게 스웨덴 2당이 되었는가?

스웨덴민주당이 스웨덴 정치에서 논란인 이유는 정당의 기원과 행보 때문이다. 스웨덴민주당은 1986년 ‘스웨덴을 스웨덴답게’ 운동본부라는 네오나치 운동단체와 진보당이 합친 ‘스웨덴당’을 기원으로 하며, 1988년 당명을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하면서 만들어진 정당이다. 20년 가까이 원외정당이던 스웨덴민주당은 2010년 총선에서 의회에 처음 진입했다. 당시 유튜브를 통해 광고를 내보냈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뉴스채널을 통해 선거운동을 펼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스웨덴민주당은 이후 총선 때마다 지지율과 의석수를 올리면서 2014년 원내 3당으로 올라섰고, 2022년 선거에선 온건당을 제치고 2당으로 올라섰다.

스웨덴민주당의 성장은 2000년대 이후 스웨덴 사회의 혼란 심화와 당을 20년째 이끌고 있는 임미 오케손 대표와 당 지도부의 전략적 행보로 설명할 수 있다. 스웨덴의 사회변화는 스웨덴민주당의 약진을 설명하는 주요 배경이다. 수출주도 경제국가인 스웨덴은 노동인구가 부족했기에 이민자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비유럽계 이민자 비중이 급증했다. 2006년부터 연평균 이민자 수가 5만에서 10만으로 두 배가 됐다. 매년 이민자 수가 인구의 1%(스웨덴 인구는 천만 명 정도다)를 넘겼고 2016년 한 해에만 16만 3천 명을 받아 정점을 찍었다.

난민 역시 2016년에만 전체 이민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유입되었으며 2020년 전까지 매년 2만 명을 넘겼다.

당시 스웨덴 정부는 이들 난민을 수용하는 데 실패했다. 온건당 정부(2006~2014년), 사민당 정부(2014~2022년) 모두 이민자 수용이란 컨센서스 하에 사회문제를 문화적 요인에 주목하며 스웨덴어 학습 지원 등 문화정책 중심의 사회통합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스웨덴은 저숙련 일자리가 5% 미만으로 매우 적어 이민자들의 취업이 매우 어렵다.¹⁶ 따라서 이들의 다수는 실업자로 전락했다.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LO)에 따르면 2015년 이주민, 난민의 실업률은 15%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이주민들의 높은 실업률과 급증한 집값, 물가는 이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이주민, 난민 거주지역은 게토화, 슬럼화되었으며 갱단 범죄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특히 스웨덴에서 가장 큰 갱단이 쿠르드족 갱단(폭스트룻)인 점은 스웨덴 주민의 이민자와 난민에게 느끼는 공포를 키웠다. 그 결과, 스웨덴에서 범죄, 테러가 크게 늘었다.

2017년 이래 스웨덴에서 총격 사건 수는 300건 이내로 떨어진 적이 없다. 올해 1월에만 폭발물 테러가 30건 이상 발생했다. 2024년 스웨덴 경찰은 스웨덴 내 62,000명이 조직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스웨덴의 군인, 경찰을 합친 숫자인 35,000명을 넘어선 수치다. 여기에 교도소 재소자가 27,000명으로 수용인원(11,000명)을 넘어서면서 스웨덴은 노르웨이, 덴마크 등 인접국으로 재소자를 이송하는 실정이다. 기존 주류정당들의 정책 실패와 불안정한 치안 상황은 이주민, 난민을 향한 반감을 키웠으며 난민 반대를 주장하는 스웨덴민

16 하수정, 「스웨덴민주당의 약진배경과 원인」, 《스칸디나비아연구》 24호, 2019.

주당 지지율을 올렸다.

오케손 대표와 스웨덴민주당 지도부는 스웨덴의 사회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며 기존 정치지형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온건당 청년조직 출신인 임미 오케손 대표는 남부지역(스카니아)을 기반으로 2005년 당 대표에 선출되며 당을 장악했다. 그는 자신의 대학교 친구들인 '4인방' 그룹 주도하에 당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당원 제재, 제명 권한과 선거 후보자 공천권을 중앙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로 이관하면서 지도부에 권력을 집중시켰다. 또한 '무관용' 원칙으로 당내 일부 극단주의자들 및 이들과 연계된 인사들을 제명하고 지도부에 친화적인 인물들로 재편했다.¹⁷

오케손 대표는 뛰어난 연설 실력과 적극적인 미디어 소통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상황에 따라 유럽연합 탈퇴였던 당의 입장을 변경하는 등 유연한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를 '대안 우파'로 호명했다. 이런 행보는 극단주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이민자 문제에 대한 컨센서스를 공유하던 다른 정당과의 차별화에 성과를 거두었다. 스웨덴 마르크스주의 사회학 교수 예란 테르보른은 스웨덴민주당을 능수능란한 사업가와 같다고 짚었다.

결국 스웨덴 정부의 사회정책이 경제와 사회문제를 충분히 해소, 완화하지 못하는 상황은 사회혼란으로 이어졌다. 스웨덴민주당은 이 문제점을 파고들면서 차별화를 통해 과거의 색을 지웠다. 그 결과 스웨덴 민주당은 2022년 총선에서 온건당을 제치고 의회 2당이 될 수 있었다.

17 Jungar, A. C, "The Sweden Democrats," In: R. Heinisch and O. Mazzoleni (eds), Understanding Populist Party Organisation: The Radical Right in Western Europe, London: Palgrave, 189-219, 2016.

(2) 스웨덴 공직과 언론을 압박하는 스웨덴민주당

스웨덴민주당은 높아진 영향력을 바탕으로 기성정치, 언론에 대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고 있다. 2024년 5월 제기된 ‘뱃글부대’(Troll factory) 논란이 대표적이다. 스웨덴 국영방송사 TV4의 프로그램 “냉엄한 사실”은 스웨덴민주당이 2018년 총선부터 청년들을 고용해 AI로 조작된 동영상과 이민자들을 폭력적으로 묘사한 게시물을 제작, 유포해 여론을 조작한다고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민주당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에 23개의 익명 계정을 통해 자당의 프로파간다를 확산시켰다. 총 2700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유포된 게시물들엔 스웨덴 민주당을 제외한 기존 정당들에 대한 비방, 허위뉴스도 포함되었다.

오케손 대표는 유튜브에 ‘국민에 드리는 연설’ 영상을 올려 혐의를 부인하며 해당 보도가 ‘좌파-자유주의 엘리트들의 음모’로 6월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스웨덴민주당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스웨덴민주당 소속 시의원 줄리안 크룬이 방송을 통해 10여 명의 뱃글부대를 감독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를 포함한 집권 연정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스웨덴민주당은 관련 인사들을 해고하고 부적절한 계정을 삭제했다.

스웨덴민주당과 관련된 논란은 언론에만 있지 않았다. 올 3월 25일 스웨덴 언론사 《다겐스 ETC》는 스웨덴민주당이 공직사회 내 비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해 인사불이익 등 각종 차별을 준다고 보도했다. 10여 명의 공무원이 관련한 인사불이익을 받았음을 익명으로 고백했으며, 스웨덴민주당의 비온 쇠데르 의원은 비정무직 공무원들이 실제로 편향적이라고 지적하며 261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가지



임미 오케손 대표의 ‘국민에 드리는 연설’

2024년 5월 14일 오케손 대표는 스웨덴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국민에 드리는 연설’ 영상을 올려 몇 글부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사회민주당이 스웨덴민주당을 겨냥해 좌파 자유주의 언론사들과 공모한 음모임을 주장하며 자신과 당은 부끄럽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유튜브)

고 있음을 밝혔다. 2023년도에도 관련해서 친정권 성향 공무원들에게 차별적인 임금인상을 제안했다는 내부 폭로가 있었다. 해당 보도 후 사민당, 녹색당 등 야당은 현 정권의 책임을 추궁하고, 스웨덴민주당의 문제적 행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현 집권연정을 비판하며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를 의회 헌법위원회에 고발했다.

이같은 의혹들에 관해, 스웨덴민주당은 언론과 정부에 더욱 공세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5월 당대표 취임 20주년을 맞이해 진행된 인터뷰에서 오케손 대표는 현 스웨덴 정부에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입법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로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고 불만을 드러내며, 입법과정을 단축하고 미국의 정부효율부(DOGE)를 스웨덴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오케손 대표는 기성 엘리트를 대체하기 위해 시민당을 제치고 집권정당의 총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의 다짐은 내년에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각종 정책공약을 쏟아내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스웨덴민주당은 암호화폐를 외환보유고에 추가해야 한다, 필수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각종 선심성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아울러 스웨덴민주당에 부정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한 비방도 이어갔다. 오케손 대표는 댓글부대 의혹을 보도한 TV4 방송사를 나치 프로파간다에 비유하며 조롱했으며, 요르겐 그룹 의원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이 스웨덴 탐사 저널리즘 ‘황금십’ 상 후보에 오르자, X에 그들은 “투옥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라 비방했다. 튀르키예의 반정부 시위를 취재하다 투옥된 스웨덴 기자 요아킴 메딘도 그가 《다겐스 ETC》 소속이란 이유로 “공산주의자”라 비난했다.

스웨덴민주당의 행보는 스웨덴 여론지형을 변형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LO)이다. 스웨덴노총은 전통적으로 시민당과 밀접한 연계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 사이에서 스웨덴민주당 지지세가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SIFO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시민당 지지 조합원 비중은 41%로 이전까지 50% 이상의 지지율에서 크게 떨어졌으며, 전체 산업노동자 계층으로 보면 26.4%로 스웨덴민주당의 27.5%에 뒤지기 시작했다. 조합원, 기층간부 중심으로, 노총 지도부의 무조건적인 시민당 지지에 반감을 느끼고 스웨덴민주당 당적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동조합 내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스웨덴민주당은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규제법안을 현 정부와 함께 준비하여 사회민주

당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한다. LO 산하의 금속노조인 인더스트리페
킷메탈(IF METALL)과 테슬라 간 분쟁에 대해서도 노조를 두둔하며 노
동조합에서 영향력을 높이려고 한다.¹⁸

스웨덴민주당은 스웨덴을 둘러싼 여러 위기와 위기를 해결하지 못
하는 제도와 정치세력의 한계를 발판으로 성장했다. 정당정치와 언론에
대한 공격은 물론 스웨덴민주당 인사들의 극단적 언행, 갱단 연루 의혹
등 여러 가지 논란에도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스웨덴 정치권은 요동치는 중이다. 지지율이 급락한 자유
당, 중앙당(두 당은 스웨덴민주당에 가장 적대적인 정당이다)은 합당을 모색하
고 있으며, 스트뢰머 법무부 장관(온건당)은 4월 말 사법부 독립성 강화
법안을 제출했다. 2023년 의회 헌법위원회가 최근 일부 동유럽 국가에
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포퓰리즘 정당들의 사례를 참고해 제
안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는 이 법안은 대법원 판사 수를 12~20명으
로 헌법에 명시하며,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석수를 의회의 과반에서 3분
의 2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포퓰리즘 정당으로서 스웨덴민주당의
부상은 스웨덴 정치지형을 교란하고 있으며, 기존 정당, 정치인들은 대
응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8 스웨덴 인더스트리페킷메탈(IF METALL)은 산업노조와 금속노조가 합병한 조직으로 LO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조직이다. 2023년 IF METALL은 테슬라 차량서비스 자회사인 TM이
정비공 조합원 고용을 명시한 단체협약 승인을 거부하자 그해 10월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유관업종 노조들(운수노조, 항만노조 등)의 파업 지지로 확대되었고 현재까지 지
속 중이다.

5. 결론

1) 매개조직을 훼손하는 포퓰리즘 세력

앞서 살펴본 우르비나티 교수의 포퓰리즘 해석을 기준으로 유럽 주요 4개국(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할 때, 포퓰리즘 정당들은 나라별로 구체적인 맥락의 차이가 있지만, 앞선 구조적 특성(매개조직의 약화, 훼손)을 공유하면서 다음의 구체적 양상을 보인다.

첫째, 기존 정당정치와 언론 등 매개조직에 공격적이며, 그들이 유권자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포퓰리스트들은 스스로를 다른 정당 혹은 정치인들과 차별화한다. 주류 정당들의 정책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반대하여 주목을 받는다. 집권 이전에 꾸준히 정치권에 비토를 놓은 이탈리아 형제당이나, 다른 좌파 성향의 정당과 달리 일관되게 비과학적인 자본주의 부정 노선을 취하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특히, 이들 정당들은 난민 문제 또는 유럽연합 거부/비판을 바탕으로, 기존 정치와 제도, 절차에 지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다. 이 과정에서 소셜미디어가 주요 수단으로 부상한다. 소셜미디어는 기존 언론에 대한 ‘대안 미디어’로 간주되기 때문에 포퓰리스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포퓰리즘 정당들은 기존 정당과 언론에 대한 거부와 반대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둘째, 늘어난 인기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정당을 특정 정치인 혹은 분파가 장악하며 정당 내 민주주의를 약화한다. 포퓰리즘 정치인에게 정당은 조직으로서의 정당이라기보다 ‘플랫폼’에 가깝다. 그들은 당의

주요 절차와 조직구성을 단순화한다. 단순화된 조직구조를 바탕으로 권력을 장악한 특정 정치인은 당을 사유화한다.

멜랑송의 당내 반대파 숙청과 오케손의 당 개편작업은 포폴리즘 정치인들이 당 내부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는 대표적 사례다. 대안당의 경우, 튀링겐주의 호케가 주도하는 분파가 당 지도부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당을 특정한 분파의 정당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 것은 해당 정치인/분파가 확고한 인기와 기반이 있기 때문이다. 인기와 지역, 당내 기반은 해당 포폴리즘 정치인/분파를 '인민의 집단의지를 육신화한 대표'로 만든다.

셋째, 포폴리즘 정치인/정당은 수사, 정책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취하며 '다수'로서 '진정한 인민'을 드러내고자 한다. 앞서 살핀 주요 제도, 정책적 입장에 대한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지지세를 바탕으로 집권에 가까워질수록 주요 사안에 대해 전통적인 좌/우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유연한 수사와 실용적인 정책적 입장을 선보인다.

예를 들어, 국민연합, 대안당, 스웨덴민주당은 보수정당에 가까운 '우파 포폴리즘' 정당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복지정책을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지정책을 확대적용을 주장한다. 그들에게 '진정한 인민'은 난민 유입으로 국가가 훼손되기 이전의 시민이다. 이들은 '이민자' 유입 탓에 기존의 시민이 제대로 복지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므로, 이주민, 난민을 몰아내면 '진정한 인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유럽연합 탈퇴 입장을 버리고 유럽의회 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행보도 보인다.

반대로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바겐크네히트 동맹과 같은 '좌파 포폴리즘' 정당은 전통적인 '우파 정당'의 수사와 정책적 입장을 차용한다.

바겐크네히트의 난민 반대 사례를 비롯해, 이들 정당은 전통적으로 우파 정당이 내세우는 ‘민족주권’ 개념을 강조한다. 좌파 포퓰리스트들은 ‘인민(진정한 인민)’을 기존 제도권의 피해자로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그렇기에 기존 제도와 정책이 이들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타협과 존중을 거부한다. 상처받은 ‘민족주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유럽연합에 오히려 더 비판적이다. 그 결과 정책적 입장, 수사에서 좌우 포퓰리즘 정당은 수렴한다.

넷째, 집권 후 포퓰리즘 정치인/정당은 사법부를 포함한 매개조직을 적극적으로 훼손하는 권위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이탈리아 형제당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포퓰리즘 정당은 집권 후 정치 엘리트를 포함한 매개조직들을 적극적으로 변형하고자 한다. 선거를 통해 언제나 ‘다수’인 ‘진정한 인민’이 수적으로도 다수인 것을 확인하였기에 다수의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취한다. 이를 위해 ‘진정한 인민’과 ‘지도자’ 사이의 직접적이고 영속화된 지배를 막는 기관, 엘리트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한다.

이탈리아 사법부 개혁 개헌안이 대표적 사례다. 포퓰리즘 정권은 사법부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에 충성하는 법조인을 사법부에 심고자 한다. 해당 조치를 막고자 세계대전 이후 유럽 주요국들에서 도입한 헌법이나 다양한 견제장치 규정들을 변경하고자 한다. 글에서 직접 다루지 않았지만 2015~2023년까지 집권한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PiS)이 대법관 임명권을 사법부에서 정부로 변경한 사례와, 헝가리 오르반 총리가 법관의 정년을 하향조정해 친정권 법관들로 사법부 인사들을 대거 교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사례들은 집권세력으로서 포퓰리즘 정당이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권위주의적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위 네 가지 특징들을 고려할 때, 우르비나티 교수가 지적한 ‘포폴리즘’은 ‘다수의 지배’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다양한 매개조직들을 공격, 변형하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세력은 모두 기존 주류 정당들의 통치, 지배에 대한 불만을 배경으로, 자신들이 해석한 ‘진정한 인민’의 이름으로 각국의 헌정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집권 후엔 훼손을 넘어 헌정 민주주의를 마비시킨다. 이들은 단순히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만이 문제가 아니다. 포폴리즘은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수많은 제도, 절차, 관행의 손상이라는 점에서, 헌정질서와 민주정을 분명히 위협한다.

2) ‘포폴리즘’이란 혐로를 마주한 유럽정치

유럽통합 실패의 결과로 등장한 포폴리즘은 각국의 헌정만 아니라 유럽통합의 위기를 가속화한다. 세계대전 이후 유럽국가들은 파시즘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1949년 설립된 유럽평의회는 개별국가의 자기통제능력을 불신하여 공통의 법치, 민주주의 감시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유럽연합이 창설되면서 1993년 유럽 이사회는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조건으로 회원국의 의무, 시장경제와 함께 민주주의를 제시했다. 유럽 차원의 정치적 통합 강화는 2004년 유럽헌법조약 채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듬해 유럽헌법조약이 프랑스, 네덜란드를 비롯한 각국에서 거부된 이후 더 진전하지 못했다.

이후 유럽의 경제위기를 둘러싸고 포폴리즘 세력은 각국의 헌정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제도들도 손상시키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폴란드·헝가리와 유럽연합 간의 갈등이 있다. 2017년 폴란드 정부의 사법부 훼손

에 유럽연합은 제재(의결권 박탈)을 시도했다. 유럽연합조약(리스본 조약) 7조에 규정된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회원국의 중대하고 지속적인 침해가 존재한다는 결정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내린 경우, 그 회원국 정부대표의 의결권 정지 등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했다.

그러나 동 조항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요했는데, 헝가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저항했다. 헝가리와 폴란드가 공조하면서 유럽연합조약을 무력화하자, 유럽연합은 2020년 예산지원 제한 규정을 만들어 양국에 예산지원 삭감을 결정했다. 여기에 양국은 2021년 유럽연합 중장기 예산안 승인을 거부하며 맞섰다. 독일이 갈등을 중재하며 지원금 삭감 결정은 2년간 유예됐으며, 그 사이 2024년 폴란드에서 정권이 교체되자 유럽연합은 제재를 해제했다. 반면 여전히 유럽연합에 저항하는 헝가리엔 2024년 지원금을 삭감했다.

이렇듯, 포퓰리즘 세력은 유럽연합의 제도, 가치를 무시하고 유럽연합을 자국의 매개조직에 그랬듯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마음대로 활용한다. 그 결과는 유럽통합이라는 더 큰 매개조직의 무력화로, 즉 유럽통합 위기의 가속화다. 그런데 대안적인 국제질서 없는 유럽통합의 파괴는 현재 진행중인 국제질서의 위기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 초국가적 제도와 질서를 무시하는 유럽 포퓰리즘 세력이, 같은 맥락에서 현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러시아 푸틴 정부에 친화성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포퓰리즘 정치세력의 매개조직 훼손은 국가 내에서, 국가 간에서 극단적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을 보증하는 제도와 질서의 무력화는 다수의 지배 혹은 힘에 의한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견을 용납하지 않기에 지식인 또는 사회운동은 폭력적인 탄압에 쉽게 노

출된다. 나이가 국제질서의 무력화로 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강대국의 영토확장을 위한 침략 내지는 협박이 빈번해질 수 있다. 그 결과는 사회의 붕괴와 문명의 파괴다. 극단적 폭력 속에선 어떤 대안의 가능성도 봉쇄된다.

분명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현재 유럽 각국의 각종 제도적 장치들은 결함과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성찰과 개혁을 통한 헌정 민주주의의 재건이어야 하지, 결코 헌정 민주주의의 부정일 수 없다. 포폴리즘이 권위주의와 친화성이 크고, 나이가 파시즘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폴리즘 세력에 대한 단호한 비판과 거리두기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과연 유럽 정상 외교, 나이가 유럽의 사회운동은 포폴리즘 세력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까? 혹은 그들에 휩쓸려 부화뇌동할 것인가? 유럽정치의 복원 내지는 재건은 유럽인들이 어떻게 포폴리즘에 대응할 것이냐에 달렸다. ●

사회진보연대의 반핵평화운동과 한일연대

: 1998~2025년

김진영(정책교육국장)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로부터 어느덧 80년이 지났다. 원폭 투하 직후 시작된, 핵무기에 맞선 세계 반핵평화운동은 지금까지 핵무기의 실전 사용을 막아 “나가사키를 인류 최후의 피폭지로”(일본 반핵평화운동의 구호) 남기는 데에 성공했고, 미소 간 핵무기 감축 합의를 이끌어 내어 냉전의 종식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냉전의 종식과 함께 끝난 것으로 보였던 핵무기 경쟁이 부활하는 형국이다. 미국 핵과학자회보(BAS)는 올해 초 지구 종말시계를 사상 어느 때보다도 지구 멸망에 가까운 자정 89초 전으로 앞당겼다.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이행을 중단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했으며, 중국은 핵무기를 빠르게 늘리고 있고, 미국도 핵무기를 확대하며 핵무기의 ‘제한적’ 사용이 관리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BAS 기자회견문, 2025년 1월 28일).

사회진보연대는 1998년 12월 창립 당시부터 냉전 종식에 기여한 세계 반핵평화운동과 함께하는 한반도 반핵평화운동을 주창했다. 오늘날 심화한 북한의 핵무장과 러시아의 핵 위협,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직

합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또다시 분열된 한국과 세계의 사회운동을 봤을 때, 모든 핵무기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필요성은 2025년 현재에 더욱 커졌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80년, 한반도 해방 80년을 맞은 올해, 반핵평화운동과 한일연대를 확대할 것을 다짐하며, 이 글은 사회진보연대의 반핵평화운동 역사를 돌아보고, 그 중요한 부분이었던 일본 반핵평화운동과의 연대도 확인한다. 이 글은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 있는 반핵평화활동 중 핵무기 반대 운동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진보연대의 반핵평화 문제의식 개괄

‘모든 핵무기에 대한 반대’를 원칙으로 ‘반핵평화’를 강조하는 기조와 실천은 출범 당시부터 사회진보연대의 활동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사회진보연대의 출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당시 사회진보연대의 정세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① 현실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판단: 소련의 핵무장이 정당했다거나 불가피했다고 볼 수 없다. 미국과 핵경쟁을 벌인 소련은 세계 반핵평화운동을 분열시켰고, 세계를 위협하는 절멸적 핵전쟁 위기의 한 축이 되었다. 현실 사회주의 내부로는 평화주의적 국제주의 대신 국가주의와 군사주의가 강해졌고, 이는 소련과 소련의 핵우산 아래 있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에 대한 억압을 낳았다. 무리한 군비경쟁은 소련의 붕괴를 앞당긴 직접적 원인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실 사회주의 붕괴 후 새로운 사회운동은 반핵평화운동의 가치, 특히 ‘모든 핵무기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소련 핵 양자에 반대

하는 대중적 흐름을 동서유럽의 분할을 넘어 조직한 유럽 반핵평화운동을 전례로 삼을 수 있다.

② 탈냉전 이후 한반도·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판단: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핵 패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의 핵전략은 북한의 핵무장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탈냉전 시대에도 끝나지 않은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중적 반핵평화운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출범 시기의 인식은 2003년 북한의 NPT(핵무기비확산조약) 탈퇴 선언, 2006년 1차 북한 핵실험과 같은 사건을 거치며 북한의 핵무장이 본격화되자 강조점이 달라지게 된다.

③ 한반도 정세·한국 사회운동에 관한 판단의 추가: 북한의 핵무장 또한 다른 모든 핵무장과 마찬가지로 군비경쟁과 전쟁을 촉발하는 요소다. ‘자민통’(자주·민주·통일)이라 자칭하는 주류 통일운동은 사실상 북핵을 옹호하는데, 이는 정세에 적합한 대응이 아니다. ‘모든 핵무기 반대’를 명확히 해야 미국의 핵우산, 남한의 핵무장 시도, 북한의 핵무장 모두에 반대할 수 있다.

2016~2017년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핵무력완성” 선언,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겪으며, 2010년대 후반에 사회진보연대는 북핵을 미국의 핵 패권에 대한 ‘대응’ 또는 ‘협상용 핵’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다시금 평가했다. 북한의 핵무장은 외부의 압력 탓이라기보다, 북한 정권의 필요에 따른 선택이었던 것이다.

④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재판단: 한반도 핵 위기와 북한의 기근은 1990년대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전환 과정에 북한이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핵무장을 택한 탓이다. 단적으로, 훗날의 증언과 정황을

종합하면 북한은 2003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붕괴하기 이전부터 이미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다.¹

더구나 북한은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무기 개발을 결정했다. 전술핵무기란 통상 사정거리 500km 미만의 단거리 핵무기를 뜻하므로, 그 타격 목표는 남한일 수밖에 없다. ‘남한을 겨냥한 핵’이라는 의도는 북한 당국의 발언과 대남군사훈련에서도 직접적으로 드러난다.²

⑤ 2020년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판단: 남한을 목표물로 삼는 전술핵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의 핵전략은 외교용이나 방어용이 아니다. 선제적으로 저장도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개발·배치 단계(비대칭적 확전형)로 보아야 한다.³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사이에 북한이 ‘통일 폐기’를 선언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도 대남핵전쟁을 실제 시나리오로 두고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핵전략을 유지하는 한,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는 성립할 수 없는 환상이라고 본다.

1 임필수, 「1990년대 한반도 정세와 통일운동 개괄: 누가 탈냉전을 거부했는가?」,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0 봄 170호.

2 사회진보연대,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와 핵 위협을 규탄한다: 공격적 핵무기 전략과 전술핵부대 운용을 선언한 북한”, 《사회운동포커스》, 2022년 10월 20일.

3 임필수, 「북한의 전술핵 개발과 통일안 폐기, 어떻게 볼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만이 평화체제로 가는 유일한 길」,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4 여름 187호.

사회진보연대의 정세분석과 반핵평화·한일연대 활동

1. 1998년 12월 출범 전후 시기

사회진보연대의 전신은 '사회인연합'과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이하 '지식인연대')다. 사회인연합과 지식인연대는 냉전의 역사를 평가하며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핵무장을 비판했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의 해답으로 유럽 반핵평화운동과 같이 미소 양자의 핵무기 철폐를 주장했던 대중운동에 주목했다.⁴ 이에 사회진보연대는 출범 직후부터 '한반도위원회'(한반도팀, 2003년부터 반전팀)를 구성하여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한반도·동북아 정세 분석에 역량을 할애했다. 2001년 출범한 상설 공동투쟁체인 전국민중연대에서 『NMD·TMD 교양자료집』 작성을 맡기도 했다.⁵

한편, 저명한 평화운동가 무토 이치요의 「미일 안보관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과거를 반성하라, 현재와 대결하라, 미래를 구상하라」 번역을 한반도위원회 소식지 1호(1999년 1월 28일 발간)에 실고, 국제연대사업을 통해 교류한 일본 활동가 도마쓰 카즈노리의 「일본제국주의의 군사대국화와 신자유주의」(2000년 3월호), 와타나베 켄지 일한민중연대 전국

4 임필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동북아 미사일 경쟁」, 《월간 BUT》(사회인연합 기관지), 1998년 10월호. 통일 분과, 「군사화된 세계와 동북아 미사일 경쟁: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본 동북아에서의 미사일 경쟁」, 《민주와 진보를 위한 연대와 전망》(지식인연대 기관지), 1998년 11월호.

5 NMD는 국가미사일방어망, TMD는 전역미사일방어망을 뜻한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이 '방어 체계' 구축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이로써 미국이 북한의 위협이 제거됐다고 간주해 공격적인 핵무기 정책을 채택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네트워크 공동대표의 「고이즈미 정권의 탄생과 일본의 민중운동」(2001년 5월호)을 번역해 《월간 사회진보연대》에 실는 등 출범 시기부터 일본 평화운동에 관심을 드러냈다.

2. 2003~2008년:

북한의 핵무장 본격화와 한일 반핵평화연대의 시작

2003년부터 북한의 NPT 탈퇴(2003년 1월 10일)와 제네바 합의 파기, ‘6자회담’ 중단 및 핵보유 선언(2005년 2월 10일), 1차 핵실험(2006년 10월 9일), 2차 핵실험(2009년 5월 25일)과 같은 주요 사건을 거치며 북한의 핵무장이 본격화됐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사회운동의 쟁점이 된 가운데, 사회진보연대는 북한의 핵무장을 비판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개시했고, 이를 계기로 한일 반핵평화운동 간 연대를 실천하게 된다.

1) 2003~2004년: 2차 북핵위기와 대안세계화운동

북한의 NPT 탈퇴 선언과 제네바합의 붕괴로 ‘2차 북핵위기’가 불거지자, 사회진보연대는 북핵이라는 대항폭력은 미국 핵 패권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절멸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방안으로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부시 행정부의 핵무기 실전 사용 준비 태세와 맞물려 한반도 핵전쟁 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

려했다.⁶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자, 촛불집회와 '부시-블레어-노무현 민중재판'과 같은 파병 반대·철회 운동을 적극 조직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이라크전쟁 반대 운동이 폭발한 흐름 속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무장한 세계화'라는 정세분석을 심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월간 사회진보연대》는 '무장한 세계화' 기획연재로 이와 관련된 세계 지식인의 글을 여럿 번역하여 실었다.⁷ 이러한 틀에 기초하여 한반도 정세를 분석했고, 2003년 9월 세계무역기구(WTO) 5차 각료회의에 대응하는 멕시코 칸쿤 사회운동총회, 2004년 1월 인도 뭄바이 4차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해 북핵위기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⁸

2) 2005~2008년: 북한의 핵무장 공식화와 한일반핵평화연대

2005년 2월 10일 북한 외무성은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이에 사회진보연대는 사회운동 일각의 북핵 옹호론을 명시적으로

6 박준도, 「평화변영정책과 '부시 독트린'의 수렴」, 2003년 6월 36호, 이소형, 「평화군축투쟁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구축하자: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화를 규탄하며」, 2004년 6월 46호.

7 '무장한 세계화' 기획연재 글 목록은 다음과 같다. 알랭 족스, 「무질서의 제국 : 두 개의 좌담」(번역), 2003년 1-2월 32호/2003년 3월 31호, 끌로드 셰르파티, 「21세기 초 미국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를 위한 군사교리」(번역), 2003년 4월 34호, 메리 켈도어, 「세계화된 전쟁」(번역), 2003년 5월 35호, 마틴 쇼, 「위협전가 군사주의, 소규모 학살과 전쟁의 역사적 합법성」(번역), 2003년 6월 36호, 알렉스 드 와알, 「아프리카의 전쟁들」(번역), 2003년 9월 38호, 에티엔 발리바르, 「잔혹성의 지형학에 관한 개요: 세계적 폭력시대의 시민성과 시빌리티」(번역), 2004년 6월 46호, 기획연재 이전에도 지오반니 아리기의 「아프리카의 위기 : 세계체제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양상들」(번역)이 2002년 11월 30호와 2003년 1-2월 32호에 나눠 실렸다.

8 각각의 발제문은 「무장한 세계화와 한반도 전쟁위기」(2003년 9월 38호), 「한국적 시각에서 본 군사주의, 전쟁, 그리고 평화」(2004년 1-2월 42호)다.

비판하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반전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9월 사회진보연대 반전팀은 한반도 반핵평화운동을 본격화하고자 핵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기획연재를 시작했다.⁹ 기획연재는 한반도에서 핵과 관련된 역사, 냉전 시기 핵 경쟁의 역사, 세계 반핵평화운동의 역사, 미소 핵경쟁에 반대한 유럽 사회주의 운동의 사례 등을 다뤘다.

- 2006년 1차 북한 핵실험 대응

2006년 10월 9일 마침내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진행하자 사회진보연대는 이를 거세게 비판했다.¹⁰ 민중운동 공동토론회 “북 핵실험 국면, 민중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10월 19일)”, 민중연대와 통일연대가 공동주최한 토론회 “북의 핵실험 정국과 진보진영의 대응”(10월 12일), 제2회 한반도 평화주간(12월 4-8일) 조직위원회(7일 “미국, 북핵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토론회 등 활동)에 참가하여 북한 핵실험 분석과 비판을 운동진영 내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2006년 10월 19일 토론회는 노동자의힘, 문화

9 2005년 반핵평화운동 기획연재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정영섭, 「한반도의 핵 현실과 반전반핵운동」, 2005년 9월 57호. 박준도, 「핵경쟁과 핵확산, 비극의 역사」, 2005년 10월 58호. 진재연, 「세계의 반핵평화운동」, 2005년 12월 60호. 에티엔 발리바르, 「평화를 향한 대장정」, 2006년 1-2월 61호.

10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6년 11월 69호 특집 ‘북한 핵실험과 사회운동의 과제’ 중 백승욱의 「무장한 세계화와 북한의 핵실험」과 임필수의 「한반도 핵위기의 성격과 전망: 북한 핵실험과 반핵평화운동의 현재성」을 참고하라. 특집에는 북한 핵실험에 반대하는 일본 사회운동의 입장문으로, 단체 ‘사상운동’의 「제재는 전쟁을 향한 길이다! - 일·미 제국의 북조선압살 책동에 반대한다」도 실렸다. ‘사상운동’은 과거 《월간 사회진보연대》에 실렸던 번역 글의 필자인 도마쓰 씨가 참여하고 있었다.

연대,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운동사랑방, 전진, 평화인권연대 등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광화문 반미반전민중대회(10월 22일)에서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를 배포하며 한반도·동아시아 반핵평화운동을 대중에게 제언하기도 했다.

- 2007년 5월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북한의 핵실험이 촉발한 정세적 필요성으로 한일 사회운동 간 연대가 활발해지면서, 사회진보연대의 한일반핵평화연대 운동도 이 시기 시작됐다. 과거 기관지에 일본 활동가의 글을 여러 차례 실었고 대안세계화운동 행사에서 일본 활동가들과 교류한 경험도 있었지만, ‘핵무기 반대’를 중심으로 연대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2007년 5월 26일 개막한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의 첫 순서 '동아시아 핵위협과 반핵평화운동' 회의에서 임필수 집행위원장(패널 중 왼쪽 다섯 번째)이 발표를 맡았다. [사진출처: 《시민사회신문》]

사회진보연대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사회운동이 모인 2007년 5월 26~27일 서울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했다.¹¹ 이는 국내 20여 개 단체와 일본의 주요 반핵평화운동 단체들이 주최하고, 100명 이상의 일본 참가자를 포함하여 400여 명이 참가한, 그때까지의 한일 반핵평화연대 사업 중 가장 큰 행사였다.¹²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는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잡았다.

반전반핵평화운동 진영은 아래의 과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차원의 실천을 모색한다.

* 한반도의 비핵화·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일

- 11 반전반핵 동아시아 국제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운동》 2007년 7-8월 76호에 실린 「폭력과 절멸의 위협에 맞서 국제적 연대를 확장하자! 반전반핵 동아시아 국제회의를 통해 본 반전평화운동의 과제」와, 사회진보연대 웹사이트 자료실의 『반전반핵 동아시아 국제회의 자료집』을 참고하라.
- 12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 조직위원회: 고려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비폭력평화물결, 사회진보연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에스페란토 평화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학생행진,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평화만들기,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사회당, 핵시대평화재단, 환경운동연합,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AWC) 한국위원회 ② 국제위원회: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원수협: 原水爆禁止日本協議會), 일본평화위원회(日本平和委員會),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원수금: 原水爆禁止日本國民會議), 평화인권환경포럼(フォーラム 平和 人権 環境), 미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일본 연락회의(AWC: 日米のアジア支配に反し、アジア民衆の連を推進する日本連絡會議), 미국친우봉사회(AFSC: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③ 후원: 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맑스 코무날레,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의원실 (단병호, 노회찬, 심상정, 권영길, 최순영, 천영세), 생명평화결사, 전국 금속산업노동조합,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환경재단.

* 주한미군·주일미군의 재편(GPR)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운동
 방향 모색

* 동아시아의 군사주의 확산에 반대하는 실천

* 평화로운 동아시아 건설을 위한 동아시아 연대

5월 26일 프로그램		
오전	사전행사	-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 사진전 - 사진으로 보는 한국의 반전 평화 운동 - 반전 반핵 평화 관련 영상 관람
	개회식	- 민중의례 :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 참가단체 소개 - 환영사 / 해외 메시지 전달 / 연대사
오후	제1회의	- 주제 : “동아시아 핵 위험과 반핵평화 운동” - 사회 : 주종환 (민화련) - 발표 :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히로시 타카쿠사기 (원수협) 안네 밀러 (미국친우봉사회) - 토론 : 이상훈(환경운동연합), 박성용(비폭력평화물결) 이노우에 토시히로(원수금) - 청중 토론
	평화 발언대	- 사회 : 배성인 (집행위원장) - 발언 : 정구도(노근리 희생자 유족회), 김영진(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제2회의	- 주제 : “동아시아 군사주의와 반전평화 운동” - 사회 : 김용한 (민주노동당) - 발표 : 김승국 (평화만들기) 후지모토 야스나리 (원수금) - 토론 : 홍성준(전진), 고상균(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금민(한국사회당), 원수협 관계자 - 청중 토론
저녁	만찬	- 사회 :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 행사 : 살풀이 춤, 노래공연, 환영사 등

5월 27일 프로그램

			국내단체	해외 단체	발표 / 토론자	진행
오전	분과회의	한반도비핵화와 비핵지대화	평화네트워크	원수협 친우 봉사회	원수협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안네 밀러(미국 친우봉사회)	원수협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시설	환경운동연합	원수금	자유토론	이성조 (환경운동연합)
		원폭피해	한국원폭 피해자협회	원수협	원수협 곽귀훈(전 협회장)	원수협
		반기지운동	민주노동당 (경기, 서울)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단간 을	원수협 원수금	원수협, 원수금 박학룡 (민주노동당) 진재연(사회진 보연대) 군산대책위, 평 택법대위	주미본 (원수협)
		NPT	평화통일시민연 대		이장희 (한국의 대)	김낙중
		한반도 평화체제	인권단체연석회 의 반전평화팀 사회진보연대	원수금	원수금 (인권운 동사랑방) 오현지(전쟁없 는세상)	김정아 (인권단체연석 회의 반전평화 팀)
		비핵중립화	민족화합운동 연합 영세중립통일협 의회		강종일 (영세중립통일 협의회) 이재봉(원광대 학교) 주종환(민족화 합운동연합)	노세극 (민족화합 운동연합)
오후	폐막식	- 사회 : 정종권 (민주노동당) - 내용 : 분과회의 정리 국제 공동 선언문 제정 / 낭독				
저녁	평택 집회	- 행진, 범대위 집회 참여, 해외 참가자 연대발언, 항의 서한 전달 등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공동선언문

(전략) 이번 국제회의를 계기로 평화로운 동아시아 건설을 위한 동아시아 차원의 공동 행동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동아시아 평화운동 단체들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2. 세계적 차원의 핵 폐기와 동아시아 비핵화를 위한 공동 실천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3. 동아시아에서의 핵 확산, 군사동맹·군사기지 확대, 군사주의 강화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확장하고 반전반핵평화 운동의 연대를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4.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민중의 염원을 짓밟는 이라크전쟁을 비롯한 모든 전쟁에 대한 반대와 모든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5. 동아시아 평화와 환경을 위협하고 플루토늄 확산을 초래하는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 가동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6. 인류와 핵무기는 공존할 수 없는 바, 피폭자들에 대한 문제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일본 정부에 대한 보상 요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7. 이상과 같은 공동행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 5월 27일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이상의 프로그램과 공동선언문을 살펴보면, 한반도·동아시아 비핵평화를 한일 반핵평화운동의 목표로 확인하고, 이와 연관된 군사동맹·군사기지 확대, 플루토늄 생산, 원폭피해자, NPT,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폭넓게 다뤘다.

제1회의 ‘동아시아 핵위협과 반핵평화 운동’에서 발표를 맡은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의 핵주권’을 내세우며 일본과 유사한 핵 능력 확보를 주장하는 한국 보수세력을 비판

했다. 그리고 미국 부시 행정부가 NPT 체제의 암묵적 합의인, 핵무기 비보유국가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흔들고,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와 2006년 3월 핵 협력협정을 맺는 등, 국제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사회운동 내 북핵 변호론을 비판하며, 미국의 핵 위협을 막는 수단은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대중적 반핵평화운동임을 확인했다.

이어 발표한 다카쿠사기 히로시 원수협 사무국장도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집단적 자위권' 검토를 약속하고 '평화헌법'(일본국 헌법 9조) 개악을 시도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며, 일본에서는 같은 해 4월 시작한 '비핵일본선언' 운동이 정치 성향을 넘어 많은 사람, 특히 자치단체장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핵일본선언' 운동은,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3원칙' 엄수를 담은 '비핵일본선언'을 일본 정부가 UN 가입국들에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이었다. 동시에 "핵보유국의 협박이 아무리 부당하다고 해도, 핵으로 대항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인류의 생존을 인질로 한 핵군비경쟁에 가담하는 것이며,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핵무기 철폐를 요구하는 공동의 운동을 호소했다.

이노우에 토시히로 평화포럼·원수금 사무국차장의 토론문도 원수금은 결성 이래 "모든 나라의 핵실험·핵무기에 반대"해 왔음을 밝혔다.¹³ 한편, 일본 룩카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나가

13 평화포럼은 '포럼 평화·인권·환경'의 줄임말로, 일본의 여러 사회운동단체와 노동조합이 1999년 결성했다. 원수금은 평화포럼 소속 단체다.

사키급 원폭을 1천 기 만들 수 있는 연간 8톤의 플루토늄을 생산하므로, “한일연대 강화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창설하고 재처리공장을 저지”하자고 주장했다. (롯데쇼 재처리공장은 1993년 착공했으나, 시민의 반대와 기술 결함 등으로 완공이 거듭 미뤄져 2025년 현재에도 완공되지 않았다.)

분과회의3 ‘원폭피해’에서는 곽기훈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전 회장이 경험자로서 향후 동아시아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원폭 피해의 실상을 잘 알고, 또 생과 사의 경계선을 넘나든 사람으로서, 나는 절대로 지구상에 핵무기가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의 북한 핵실험 이후 동북아 비핵화의 구상이 깨지는가 하고 암담한 심정이었는데, (중략) 만약 북한에 핵이 있고, 일본이 핵무장을 하다면, 다른 나라들도 좌시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비키니섬에서 실험한 수소탄은 15메가톤급이었고, 소련이 노바야젬라섬에서 실험한 것은 58메가톤짜리 수소폭탄이었습니다. 실로 히로시마 원폭의 100배, 400배가 넘는 것들입니다.”

분과회의6 ‘한반도 평화체제’에서는 수열 사회진보연대 정책부장이 ‘한반도 핵 위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발제한 뒤,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하려면 6자회담 합의 이행을 기다리기만 하는 대신 한국군 군사력 증강 시도와 동북아시아 미군 재배치 문제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수금의 이노우에 사무국차장은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사회운동》에 글을 기고하여, 북한 핵실험에 대한 원수금의 대응과 일본 현지의



2007년 5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의 폐막식. 참가자들은 폐막식 뒤에 용산 미군기지 앞으로 이동하여 '한반도 평화역행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방위비 분담금 불법전용 주한미군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출처: 환경운동연합]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다.¹⁴ 글에 따르면, 원수금은 북한 내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자의 실태 조사와 이후 지원을 위한 교류를 위해 10월 4~7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발 전날인 3일, 북한의 '핵실험 예고'가 보도되면서 이 계획이 무산되었다. 원수금은 이 방문을 통해 이제까지 방치된 조선인 피폭자를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지원하도록 요구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러한 사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수금은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시작으로 일본 전국 각지에서 북한

14 이노우에 토시히로, 「북조선의 핵실험 이후, 일본 반핵운동의 과제」, 2007년 5월 74호.

의 핵실험에 강력한 반대를 표하는 연좌농성, 가두선전 등을 진행하고 북한 정부에 직접 항의문을 보냈다. 이노우에 사무국차장은 “이번 핵실험으로 일본 내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아베 정권의 매 파”라며, 이를 계기로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공공연히 말하거나 일본 자위대 개입의 근거인 주변사태법을 확대해석하려 시도하는 것을 비판했다.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를 계기로, 2007년 일본 원수폭금지세계대회 기간에 원수협, 원수금 대회 양자에 사회진보연대 활동가가 참가했다. 원수협 측 대회에는 임필수 집행위원장이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조직위원회를 대표해서 참가해, 전체회의 1에서 ‘반핵평화운동과 한일연대’를 주제로 발표했다. 원수금 측 대회에는 수열 정책부장이 참가했다.

3. 2009년~2015년:

국내외 사회운동과의 반핵무기·반핵발전 연대

2009년 북한이 6자회담의 북한 비핵화 합의(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를 파기하고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2차 핵실험은 1차 핵실험 때만큼 사회운동 내에서 다양한 대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으나, 사회진보연대는 대중적 반핵평화운동이 중요한 정세임을 강조했다.¹⁵ 이에 2010년 미국 뉴욕 NPT 평가회의 대응과 한일시민사회 반핵포럼에 역량을 투여하는 등 반핵평화의 문제의식을 이어나갔다. 2013

15 이유미,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반전평화운동의 과제」, 《사회운동》 2009년 7-8월 89호.

년 3차 북한 핵실험 대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2011년 3월 12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핵무기와 핵발전 양자에 반대하는 다양한 연대 활동이 조직되자, 사회진보연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결합했다.

- 2010년 4~5월 미국 뉴욕 NPT 평가회의 대응

사회진보연대는 2010년 5월 3~28일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8차 NPT 평가회의에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NPT 평가회의(재검토회의)는 5년마다 NPT의 주요 요소인 핵군축과 비확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상황을 평가하는 조약 당사국 회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뉴욕으로 모인 반핵평화 활동가들의 국제평화회의(4월 30일~5월 1일), 국제공동행동 집회(5월 2일)에 수월 사회진보연대 반전 팀장과 임월산 회원이 참가하여 해외 반핵평화운동 단체들과 교류했다.¹⁶ 5월 3일 개막한 NPT 평가회의의 주요 일정들에도 사회진보연대 참가단이 세계 121개 반핵평화단체의 1천여 명 활동가들과 함께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같은 시기 국내에서도 사회진보연대는 NPT 평가회의에 참가하는 다른 단체들과 집담회, 공동기자회견, 평화행동 등을 조직했다.

16 수월, 「NPT와 핵 없는 세계: 2010년 NPT 평가회의와 향후 과제」, 《사회운동》 2010년 7-8월 95호, 임월산, 「핵 숭배와 핵 폐기 운동: 핵 없는 세계, 평화로운 세계, 정의로운 세계,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국제회의의 보고서」, 《사회운동》 2010년 7-8월 95호, NPT 평가회의의 개요와 역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김진영, 「2020년, NPT를 넘어 핵무기금지조약으로」,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0년 봄호를 참고할 수 있다.



2010년 5월 2일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열린 '핵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공동행동' 집회에서 임월산 회원이 한국 참가단을 대표하여 발언했다. 이 집회에는 약 2,000명이 참가하여 UN본부까지 행진했다. 집회에 앞서 열린 2010년 4월 30일~5월 1일 '핵 없는 세계, 평화롭고 공정한 세계,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국제평화회의'는 일본 원수협, 원수금과 미국친우봉사회(AFSC) 등이 기획했고, 세계 350여 단체에서 1000여 명의 활동가가 참여했다.

- 2010년 11월 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

2010년 11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대응하여, 사회진보연대를 포함한 국내외 사회단체들은 'G20 대응 민중행동'을 결성하고 '서울 국제 민중회의'(11월 8~10일)를 조직했다. 사회진보연대는 G20 민중행동 주간 중 열린 11월 9~10일 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 조직위원회에 참여했다.¹⁷

17 2010 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 조직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 경주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사회진보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울산환경운동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녹색위원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환경운동연합, 조승수 의원실 [일본]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원수금), 원자력자료정보실, 반핵아시아포럼일본사무국.



2010년 11월 9일 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 2세션 '미국의 핵전략, 그리고 한국의 반핵산정책'에서 수열 사회진보연대 반전팀장(왼쪽 세 번째)이 발제를 맡아, 같은 해 NPT 평가회의를 보았을 때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운 '핵 없는 세계'는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감축 노력보다 '확산의 차단'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비판했다.

-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반핵무기·반핵발전 연대

2011년 3월 12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자, 사회진보연대는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한국의 핵 르네상스는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3월 23일)를 열고, 여러 사회운동단체와 “안전한 핵은 어디에도 없다!”(3월 26일) 집회, “핵발전과 핵무기 없는 세상, 어떻게 가능한가?”(4월 26일)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동아시아 국제연대 차원에서 핵발전과 핵무기를 연결 짓는 문제의식을 논의한 행사에도 참여했다. 2011년 7월 30일~8월 6일 도쿄, 후쿠시마, 히로시마 등 일본 각지에서 진행된 ‘2011 반핵아시아포럼’에 수열

사회진보연대 반전팀장이 참가했다.¹⁸ (반핵아시아포럼은 1992년 결성된 아시아 지역 반핵운동 네트워크로, 한국, 일본,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 태국, 호주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핵발전이 결국 핵무기와 연결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핵 테러리즘의 차단, 핵물질의 안전보장 등을 논의하는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같은 8월 원수금 주최 원수폭금지세계대회와, 세계대회의 분과회의 형태로 진행된 2차 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 일정(8월 5일)에도 수열 반전팀장이 참가했다.¹⁹

-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대응

2012년 사회진보연대는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린 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전후 대응에 많은 역량을 쏟았다. 당시 세계 반핵평화운동 진영 내에도 오바마 행정부와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게 존재했지만, 사회진보연대는 명확한 핵 폐권 해체 노력이 없이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핵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이러한 시도는 진정한 ‘핵 없는 세계’에 오히려 역행할 것이라고 보았다.²⁰

사회진보연대는 『핵안보정상회의 10문 10답』 소책자를 발간하고 각

18 수열, 「후쿠시마의 분노, 탈핵의 길을 외치다: 반핵아시아포럼 2011 참가기」, 《사회운동》 2011년 9-10월 102호.

19 수열, 「탈핵 사회를 위한 상상력: 후쿠시마, 핵발전 수출, 에너지 정책 - 피폭 66주년 원수폭 금지대회 국제회의 2차 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 《사회운동》 2011년 9-10월 102호.

20 수열, 「우리는 왜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하는가: 핵안보의 함의, 의도, 쟁점」, 《사회운동》 2012년 3-4월 105호.

지역과 대학에서 강연을 진행하며 대중적 관심을 환기했다.²¹ 연대체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에 참여하여, 3월 19일 핵안보정상회의 대항 주간 선포 및 핵 없는 아시아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3월 25일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집중집회, 강연회(영국 평화활동가 앤지 젤터, 미국 평화활동가 조셉 거슨), 《프레시안》 연속 기고 등 다양한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함께 했다.²²

3월 22일 핵안보정상회의 대응 국제포럼 ‘핵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말하자’와 2012 반핵아시아포럼(국제포럼의 두 번째 세션으로 진행)에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 미국의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전략과 제안’ 세션에서 발표를 맡아, 핵안보정상회의의 위선과 오바마 행정부 핵 정책의 문제를 선전하는 것이 여전히 핵에 무감각한 한국 사회에서 반핵평화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²³

- 2013년 3차 북한 핵실험 대응

2013년 3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사회진보연대 반전팀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한반도 정세’ 교육자료를 발간했다. 4월 19일에는 반전평화연대(준) 차원으로 공동주최한 “고조되는 한반도의 지

21 사회진보연대, 『핵안보정상회의의 10문 10답: 핵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2012년 2월 16일.

22 임월산, “미국 반핵활동가가 본 미국 핵정책과 반핵반전운동: [핵안보정상회의의 이후](4) 조셉 거슨 강연회”, 《참세상》, 2012년 4월 15일. 수열, “‘핵안보’는 과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까?: [핵안보정상회의의 공동기획] 탈핵 흐름 거스르는 정상회의”, 《프레시안》, 2012년 3월 1일.

23 발표문 “한반도 핵위험의 현실상: 한반도는 미래 핵전쟁의 실험장이 될 것인가?”는 사회진보연대 웹사이트 자료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3월 21일 게시)

정학적 긴장,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서 류주형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이 발표를 맡아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방어적·수세적 관점을 전도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핵 위협과 한미동맹 강화,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화 시도를 무력화”할 것을 제안했다.²⁴ 이러한 기조로 4월 30일 소책자 『한반도 전쟁위기와 한미정상회담』을 발간했다.

한일연대도 계속 이어졌다. 2012년 8월 7~9일 원수금 주최 원수폭 금지세계대회 나가사키 대회에 수열 반전팀장이 참가하고, 10월 20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맞아 원수금과 교류회를 진행했다. 2014년에도 임필수 운영위원이 원수금 주최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하여 분과회 ④ ‘평화와 핵군축2 -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와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과 한국 사회운동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2015년 사회진보연대는 8월 12일 후쿠야마 신고 평화포럼 대표의 강연 <아베의 폭주, 일본 민중의 저항: 일본 평화운동으로부터 듣는 평화의 조건>을 공동주최했다.²⁵ 후쿠야마 대표의 요청으로, 8월 30일 도쿄에서 열린 안보법 개정(집단적 자위권 인정) 반대 집회에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2명(이준혁, 표영민)이 참가했다.²⁶

24 발표문 “한반도 비핵화 노선을 견지하며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천하자”는 사회진보연대 웹사이트 자료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4월 22일 게시)

25 정영섭, “동아시아 민중의 연대로 아베의 폭주를 막자!: 일본 평화운동으로부터 듣는 평화의 조건”, 《오늘보다》, 2015년 9월호.

26 이준혁, “기로에 선 일본, 전쟁과 평화의 길 사이”, 《레디앙》, 2015년 9월 11일. 이준혁, “일본 국회 앞에서 분노의 물결을 보다”, 《오늘보다》, 2015년 10월호. “안보법안 저지, 야당보다 시민단체와 손잡아야”(사회진보연대 인터뷰), 《한국일보》, 2015년 9월 30일.

4. 2016~2020년: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금지조약을 중심으로

2016년~2017년에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광명성’ 로켓 발사(2016년 2월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발사(2016년 8월 24일), 5차 핵실험(2016년 9월 9일), 6차 핵실험(2017년 9월 3일), ICBM ‘화성-15호’ 시험발사와 “핵무력 완성” 선언(2017년 11월 29일)이 연이어 벌어졌다. 북한이 6차례나 핵실험을 거치며 핵 능력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투발수단인 ICBM, SLBM 개발을 진전시킨 것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당시 중국과 러시아조차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동의했다.

더구나 2017년 첫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 책상 위에 핵 단추가 있다”, “미 본토 전역이 우리(북한)의 사정권 안에 있다”와 같은 험악한 언사를 주고받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핵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세계적으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운동 내에서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 모색을 꺼리는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오히려 통일운동 일각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공공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진보연대는 새로운 사회운동 영역을 개척하는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다. 특히 2019년 5월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국제포럼’을 계기로 한일반핵평화연대 활동을 더욱 활발히 했다.

1) 2016년~2018년: 트럼프-김정은 핵전쟁 위기에 대한 대응

사회진보연대는 2016년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세계 민중의 염원을 배신하고 심각한 좌절감을 주는 처사”라고 규탄했다.²⁷ 9월 5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핵탄두 소형화를 목표로 실험하는 북한은 정치적 협상이 아니라 핵무기 실전배치를 목표로 한다고 분석했다.²⁸

이러한 문제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사회진보연대는 교육·선전 사업에 역량을 쏟았다. 1월 27일 사회운동학교 특강 “북한 핵실험, 한미일 군사동맹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고, 3월 28일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특강도 북한 핵실험과 평화협정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운동학교 여름강좌로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천사와 한반도 정세”(6월 21일~7월 12일, 총 4강)를 기획했다.²⁹ 11월 6일 2016 노동운동포럼의 첫 순서로 “한반도 정세와 평화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 워크숍을 진행했다. 기관지 《오늘보다》도 한반도 비핵평화와 국제 반핵평화운동을 꾸준히 다루었고, 2016년 11월호 특집을 ‘한반도 핵위기와 평화운동’으로 했다.³⁰

27 사회진보연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 : 핵무기 개발은 전쟁유발요인일 뿐, 모든 핵실험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1월 11일.

28 사회진보연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입장 - 핵무장은 평화를 향한 길이 아니다! 반전 반핵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 2016년 9월 13일.

29 1강 한국전쟁 66주년, 통일은 오고 있는가, 2강 북한 핵무장과 핵실험, 어떻게 볼 것인가, 3강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과 평화협정, 4강 통일운동의 역사와 쟁점.

30 김진영, “남한 핵무장론이 그리는 위험천만한 미래”, 《오늘보다》, 2016년 11월호, 임필수,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화할 것인가?: 고조되는 군사적 충돌의 위험”, 《오늘보다》, 2016년 11월호, 이준혁, “평화운동 방향 바로잡아야 평화를 쟁취할 수 있다: 지금은 흔들림 없이 '반전 반핵' 외쳐야 할 때”, 《오늘보다》, 2016년 11월호.



2016년 8월 14일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진행한 “사드 반대! 한반도 비핵화! 평화행동”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시기 평화연대 활동은 주로 사드 배치 저지 운동에 집중되었는데, 사회진보연대는 8월 15일 주간을 ‘반핵평화’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8월 14일 “사드 반대! 한반도 비핵화! 평화행동”을 기획하여 선전전과 집회 및 행진을 진행했다.

- 2018년 12차 ‘평화촛불’ 집회

2017년 미국에서 트럼프가 집권하고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갈수록 고조되자, 한반도 비핵평화를 촉구하는 대중 집회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소하려면 한반도 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대행위의 중단이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인식한

단체들이 모여 ‘평화촛불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³¹

사회진보연대는 평화촛불 추진위원회 안에서 주요 기획과 실무를 담당한 실행위원회 참가 단체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평화촛불 추진위원회는 남북한과 미국 정부가 한미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양자를 중단하여 군사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³² 또한, 기자회견과 기고, 인증샷 모으기 등을 통해 평화촛불 집회 참가를 호소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평창올림픽 휴전’이 합의되고 3월 6일 대북특사 합의와 이에 따른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됐다. 1차 평화촛불은 올림픽 휴전(2월 2일~3월 25일)이 끝나기 직전인 3월 2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려 12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에 대응하여 시민의 촛불로 진정한 한반도 비핵평화를 요구한다는 뜻으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6월 9일 2차 평화촛불 집회에는 800여 명이 참가하여, 북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합의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이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제공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

31 평화촛불 추진위원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소성리사드철폐성주주민대책위,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85개 단체가 참여했다.

32 “한미훈련·북한 핵실험 동시 중단해야…24일 평화촛불 들자”, 《연합뉴스》, 2018년 3월 12일, “3.24 평화촛불 참가 호소 대표자 기자회견문”(2018년 3월 12일),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평화 촛불의 호소 기자회견문”(2018년 5월 21일)은 사회진보연대 웹사이트 성명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2018년 6월 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차 평화촛불 집회에 참가한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들.

지”를 확인하는 합의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히자 평화촛불 집회는 중단됐다.

평화촛불 외에도, 2018년 사회진보연대는 한반도 정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 부응하여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주최 사회운동학교 정세강좌(5월 17일), 충북모임 주최 특별강좌(7월 3일), 학회학술네트워크 여름학교(8월 3일), 학회학술네트워크 전남대 강연(8월 22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정세교육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평화운동의 과제”(8월 21일 ~9월 13일, 총 5회)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했다.

2) 2019~2020년: 한일반핵평화연대와 핵무기금지조약 운동

그러나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의 비밀 핵시설에 대한 공방 끝에 합의 없이 결렬됐다. 사회진보연대는

북한이 결정적인 비핵화 조치를 결단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비핵평화가 진전될 수 없음이 확인됐다고 논평했다.³³

사회진보연대는 2018년 말에 이미,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6개월 동안 북핵의 신고와 검증 등의 큰 진전이 없었고 비핵화 시간표 합의 조차 없어 보이므로, 북한이 명확한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북미 대화 동력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 바 있었다.³⁴ 남북·북미대화가 교착된 상황에서, 사회진보연대는 2020년대 세계 반핵평화운동의 핵심 캠페인인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운동에 주목하고 이를 한일반핵평화연대의 매개로 삼고자 했다.

- 2019년 5월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아베 정권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 한일연대가 필요하다는 일본 원수협이 제안으로, 2019년 5월 30~31일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와 공동행동: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이 서울에서 열렸다.³⁵ 일본에서 온 70여 명의 활동가들과 미국과 필리핀의 활동가 각 1명에 한국 활동가들을 합쳐 연인원 3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사회진보연대는 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실행위원 단체로서 행사 기

33 사회진보연대, “북미정상회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서는 답을 찾기 어렵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부쳐”, 2019년 3월 5일.

34 김진영, “평화의 새 시대는 북한 핵무장과 공존할 수 없다”, 《오늘보다》, 2018년 12월호.

35 김진영,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와 공동행동: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 보고”, 《사회운동포커스》, 2019년 6월 15일. 포럼 자료집은 사회진보연대 웹사이트 자료실 게시판(2019년 6월 24일 게시)에서 볼 수 있다.

확·진행과 위크숍 발표에 참여했다.³⁶

포럼의 첫 순서인 전체회의에서 이규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과 후지모리 토시키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피단협) 사무차장은 원폭 피해를 증언하면서, 피폭 75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에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되어 전 세계의 핵무기가 철폐되도록 압박하자고 호소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오다가와 요시카즈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장 겸 ‘전쟁하지 않겠다! 9조를 부수지 말라! 총궐기행동실행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해석개헌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오랫동안 분열했던 일본 평화운동 세력이 한데 모여 2014년 ‘총궐기행동실행위원회’를 결성한 것을 강조하며, 6월 7~8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반도와 일본에 비핵·평화의 확립을!’ 집회도 소개했다.³⁷

야스이 마사카즈 원수협 사무국장은 세계 핵무기 철폐를 위해 동북아시아 시민의 압도적인 비핵·평화 요구를 모아 2020년 NPT 평가회의에서 핵무기 보유국들에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요구하자고 호소했다. 핵무기금지조약(TPNW)은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로 나아간다는 목표로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적으로 구속

36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 공동주최 단체는 다음과 같다. [한국] 국회시민정치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반핵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의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여성단체연합 [일본] 신일본부인회,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원수협),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전노련),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 [협력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원불교평화행동, 합천평화의집 /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피단협), 전쟁하지 않겠다! 9조를 부수지 말라! 총궐기행동실행위원회

37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전노련/젠로렌)은 일본 노동조합의 내셔널 센터 중 하나로 조합원은 약 100만 명이다. 공식적으로는 어느 정당에도 가맹하지 않았지만 일본공산당과 관계가 있다.



1박 2일 간의 한일 국제포럼은 5월 31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핵보유국들과 남북한, 일본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의 비준을 촉구하며 마무리되었다. 필자가 기자회견 사회를 보았다. 일본 참가자들이 “비핵평화의 동북아시아 실현을 - 일본원수협”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다.

력이 있는 첫 번째 국제적 합의로, 2017년 7월 7일 UN총회에서 122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원수협, 피단협 등이 2016년 4월 시작한 ‘피폭자 국제 서명’은 모든 나라의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 참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2020년 NPT 평가회의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야스이 사무국장은 세계 각지에서 940만 명 이상이 이에 서명했고 일본 내에서는 전체 지자체 중 70% 이상이 지자체 수장 명의로 참여했으며 일본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 조인 및 비준을 요구하는 지자체 결의도 전체 지자체의 21%가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북미대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하노이 회담 결렬은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일제로 진행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며 원수협의 인식을 밝혔다. 평화는 비핵화의 보상이 아니며, 대북제재를 먼저 완화

하는 것은 북미 싱가포르 선언의 합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날 오후에 4개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필자(김진영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장)는 전노련, 민주노총과 함께 한 ‘격동의 동아시아, 한일 시민사회 연대의 과제’ 워크숍에서 발표를 맡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일 사회운동의 과제로, 한일 사회운동이 한일 양국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과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는 대중적 운동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 2019년 8월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수폭금지세계대회

5월 포럼을 계기로 사회진보연대가 원수협의 초청을 받아, 2019년 8월 3~9일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필자가 대표로 참가했다. 세계대회에는 일본을 제외하고 총 21개국 84명의 해외 활동가가 참가했으며, 히로시마 일정에 일본 시민 1300여 명, 나가사키 일정에 5000여 명이 참가했다. 필자가 쓴 참가기에 2019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의 프로그램과 내용을 자세히 담았고, 인상 깊었던 해외 활동가 발표문들도 번역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³⁸

38 김진영,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공정한 세계로!: 원수폭금지2019년세계대회 참가기①”, 《사회운동포커스》, 2019년 8월 28일. 김진영, “영원히, 나가사키가 인류 최후의 피폭지로 남도록……: 원수폭금지2019년세계대회 참가기 ②”, 《사회운동포커스》, 2019년 9월 30일. 에밀리 루비노, “미국이 만든 전쟁 희생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기: 원수폭금지2019년세계대회 국제회의의 발표문①”(번역), 《사회운동포커스》, 2019년 8월 30일. 한나 켈프-웰치, “핵무기 대신 책을! 일자리를! 공공의료를!: 원수폭금지2019년세계대회 국제회의의 발표문②”(번역), 《사회운동포커스》, 2019년 9월 3일. 올렉 보드로프, “군사용-비군사용 핵 기술이 낳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원수폭금지2019년세계대회 국제회의의 발표문③”(번역), 《사회운동포커스》, 2019년 9월 23일. 사카모토 메구미, “방사능 오염 대책 없이 후쿠시마 귀환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 원수폭금지2019년세계대회 국제회의의 발표문④”(번역), 《사회운동포커스》, 2019년 9월 24일.



[좌상단] 2019년 8월 5일 부대행사 “시민과 해외대표의 교류”에 패널로 참가한 필자(왼쪽 세 번째)와 일본, 영국, 필리핀 청년들.

[우상단] 8월 8일 본대회 2 “비핵·평화 동북아시아와 운동의 역할” 패널들. 왼쪽부터 통역을 맡은 이준규 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필자, 조셉 거슨 미국 평화군축안보캠페인 대표, 카와타 타다아키 일본원수협 전국상임이사.

[좌하단] ‘한일시민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5월 한일 국제포럼을 소개하고, 한일시민연대로 세계 평화운동을 주도하자고 주장한 카와타 이사의 발표.

[우하단] 8월 9일 나가사키시민회관 체육관에서 열린 원수폭금지세계대회 폐막총회에서 “핵무기를 없애자” 피켓을 들어올린 참가자들.

이때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까지,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7월 초부터 ‘2019년 한일갈등’과 ‘노 재팬’(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진행 중인 시점이었다. 따라서 필자가 참가한 행사들에 일본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한반도 정세와 한일관계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필자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가기에 정리했다.

필자는 8월 3일 두 번째 세션 “핵무기 금지와 철폐에 대한 시민과 평화운동의 역할 - 피폭 75주년, 2020년 과제와 전망” 토론회, 8월 5일 저녁 열린 부대행사 “(일본)시민과 해외대표의 교류”, 8월 8일 분과회② “비핵·평화 동북아시아와 운동의 역할”에서 발표를 맡았고, 여성대회와 비공식 교류회 등에서도 발언을 요청받았다. 필자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평화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며, 동아시아의 핵 경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일 평화운동의 협력이 중요함을 밝혔다.

대회 마지막에 낭독된 ‘나가사키 결의’의 요구가 보여주듯, 2019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의 화두는 “2020년 NPT 평가회의에서 각국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요구하자”였다. 사회진보연대도 강대국의 핵독점을 해체하는 것은 약소국의 소위 ‘핵 주권’이 아니라 핵무기금지조약과 같은 국제적 흐름이라고 보고 이에 주목하던 터였다.³⁹ 5월 국제포럼과 8월 세계대회를 거치며, 사회진보연대는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운동이 한반도에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반핵평화운동을 분석과 주장의 차원을 넘어 정책으로 제기하고, 한일연대·국제연대의 매개를 실질화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39 사회진보연대,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인가, 한반도 비핵화인가 - <2차 북미회담 관련 사회진보연대의 입장 비판>에 대한 재반론”, 2019년 3월 15일.

원수폭금지2019년세계대회 - 나가사키 결의
나가사키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 정부에 보내는 편지

(생략)

UN 총회 제1호 결의였던 핵무기 폐기는 전후 국제 정치의 원점입니다. 모든 나라의 정부가 히로시마·나가사키, 그리고 피폭자들의 경고를 상기해, 인류를 핵으로 인한 파국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아래의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 핵전력 증강, 핵무기 사용 준비 등 핵군축에 역행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
 - NPT 제6조의 핵 군축·철폐 협상 의무를 다할 것. 특히 NPT 재검토회의에서 합의된 「핵무기 완전 폐기」의 「명확한 약속」(2000년)과 「이를 위한 틀을 만드는 특별한 노력」(2010년)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것.
 - 핵무기의 비인도성, 반인간성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 이러한 활동을 벌이는 피폭자와 시민사회를 지지·지원할 것. 특히 2020년 NPT 재검토회의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행동을 지지할 것.
 - 핵무기금지조약의 서명과 비준을 신속히 행할 것. 이를 완료한 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의 정신(제12조)에 따라 조약의 발효를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할 것.
- 오늘날, 세계적 차원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불가결합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 2020년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운동 기획

사회진보연대는 2020년 초부터 한국 내에서 남북한과 일본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요구하는 운동을 만들기 위한 여러 시도를 했다. 여전히 NPT 평가회의와 핵무기금지조약의 존재 자체가 한국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관지 《계간 사회진보연대》에 NPT 평가회의와 핵무기금지조약의 역사를 정리했다.⁴⁰

40 김진영, 「2020년, NPT를 넘어 핵무기금지조약으로」,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0년 봄호.

2월 19일 여러 사회운동단체, 노동조합과 2020년 반핵평화운동 계획을 논의하는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열어, 한국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서명운동, 10차 NPT 평가회의(뉴욕, 4월 27일~5월 22일) 한국 참가단 결성, NPT 평가회의 대응 반핵평화행동 주간(기자회견, 반핵평화행진, 선전 전 등) 등의 계획 초안을 논의했다.⁴¹

그러나 핵무기금지조약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보려던 시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오프라인 사업이 불가능해져 어려움에 처했다. 사회운동 안에서도 핵무기금지조약이 잘 알려지지 않은 현실에서, 관심 환기의 계기이자 활동의 1차 수렴점으로 삼으려 한 NPT 평가회의도 계속해서 연기됐다. (10차 NPT 평가회의는 결국 2022년 8월 1일에야 개최됐다.)

그럼에도 사회진보연대는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조직하는 등 가능한 사업을 시도했다.⁴² 2020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중 청년대회 프로그램(8월 2일)에서 한일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통역을 지원했고, 세계대회 특별세션 ‘비핵평화의 동아

41 간담회 참가 단위는 다음과 같다. 경희대학교 페미니즘학회 ‘여행’, 고려대학교 사회과학학회 ‘작은자유’,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노동전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학생행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팍스크리스티 코리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핵폐기네트워크.

42 2020년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국제 서명 참가 단체 목록은 다음과 같다. [한국 발기단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추진단체] 전국교수노동조합, 노동자가여는평등의길, 사회진보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전북노동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드반대김천시민대책위, 한국기독교교장로회 서울제일교회, 평화어머니회, 연회 pro 소용, NCCK 화해 통일위,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빛톡톡, 가톨릭평론 독자모임, 구로노동자조사회, 우리다함께시민연대, 마음벗도림, 한하늘한가족/한(한하늘)주의운동, 정의평화불교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대위, 사)독립유공자유족회, 인천지역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시아와 평화운동의 역할'(8월 4일, 온라인)에서 필자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사회진보연대의 전망을 발표했다.

원수협이 제안한 '평화의 물결'(Peace Wave) 연대활동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초 “핵무기 없는 세계를!” 피켓 인증샷을 모으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 75주년인 8월 6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75주년, 이제는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⁴³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된 2021~2022년에도, 2021년 일본 비키니 데이 대회 본행사(2021년 2월 28일), 아시아유럽민중포럼(AEPF) 웨비나 “핵무기 철폐와 핵무기금지조약”(2021년 4월 16일), 2021 원수폭금지세계 대회 워크숍 “아시아 비핵평화와 운동의 역할”(2021년 8월 7일), AEPF 웨비나 “핵 재앙이나, 핵 철폐냐”(2022년 7월 16일) 등 온라인 행사에 필자가 참가하여 발표와 토론을 하며 일본 및 국제 반핵평화운동과 연대를 이어갔다.⁴⁴

- 43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촉구 퍼포먼스”, 《연합뉴스》, 2020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75주년, 핵무기금지조약 비준해야”, 《레디앙》, 2020년 8월 7일. 기자회견문과 사진은 사회진보연대 웹사이트 공지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2020년 8월 6일 게시) 기자회견 연명 단체는 다음과 같다. 고려대학교 사회과학학회 ‘작은자유’, 구로노동자조사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경희대학교 자치교지 ‘고향’ 편집위원회, 경희대학교 페미니즘학회 ‘여행’,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중앙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학회학술네트워크 프로젝트그룹 ‘alda’,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행동 ‘쿨-PEACE’.
- 44 비키니 데이는 1954년 3월 1일 서태평양 마셜제도 비키니 환초에서 미국이 실시한 실전용 수소폭탄 실험에 피폭된 일본 어선 제5 후쿠류마루 호 선원들을 기리는 날로, 일본 반핵평화운동은 매년 이 시기에 대회를 개최한다. 사회진보연대, “핵무기가 불법화된 세계에서 맞은 첫 번째 비키니 데이: 2021년 일본 3·1 비키니 데이 대회 참가기”, 《사회운동포커스》, 2021년 4월 6일.



‘평화의 물결’(Peace Wave)은 1991년 냉전 종식 때까지 진행되던 국제 공동 풀뿌리 행동으로,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8월 6일을 시작으로,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8월 9일까지 각국의 평화행동으로 서쪽으로 파도를 타듯 물결을 만드는 구상이었다. 원수협은 이를 2020년부터 되살리자고 제안했다. 사회진보연대는 한국 활동가들의 “핵무기 없는 세계를!”,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촉구합니다!” 퍼켓 인증샷을 모아 원수협에 전달했다.

5.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현재:

권위주의·팽창주의의 확대와 핵 위협 강화에 맞선 연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국제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침공 개시 직후부터 러시아는 세계에 꾸준히 핵 사용 위협을 가했고, 2025년 현재 미국과 중국 모두 핵 군비 확대 노선을 걷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호기로 파악한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핵은 우리의 국체”라고 선언하며 선제핵공격을

노선을 법(핵무력법령)으로까지 만들었다.⁴⁵

급기야 2024년에는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하며 직접 참전했고, 이번 6월 6000명 규모의 추가 파병을 발표했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통일 포기”와 남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했고,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정세를 세계에서 권위주의·팽창주의가 확대되는 국면으로 판단하고,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관한 구체적 분석을 기민하게 제공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⁴⁶ 《계간 사회진보연대》와 《사회운동포커스》에 분석과 입장 게재,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를 비롯한 소책자 발간, 사회운동 내 토론 참여, 지역별 강연, 전국노동자대회 《사회운동포커스》 특별호 배포 등의 교육·선전 사업으로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있다.⁴⁷

45 김진영, 「북핵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2년 가을호.

46 김진영, 「권위주의와 팽창주의가 확대되는 세계: 진영논리를 벗어나 세계의 반권위주의 투쟁들과 연대해야 한다」,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2년 겨울호.

47 사회진보연대,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 2023년 10월 31일,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의 엇갈린 시대인식: <산냉전 대결과 다국화로 향하는 세계, 한반도 평화의 과제> 토론회”, 《사회운동포커스》, 2023년 2월 10일, 사회진보연대, “⑥‘전쟁 반대 핵무력 반대’라는 민주노총의 입장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민주노총 선거연합정당 무엇이 문제인가 10문 10답>”, 《사회운동포커스》, 2023년 9월 4일, 김영진,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민주노총이 되길: 정세워크숍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대남전략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지상중계”, 《사회운동포커스》, 2024년 3월 18일, 서세영, “노동운동, 평화를 위해 새로운 질문을 건네자: 사회진보연대 총북모임 2024년 1차 기획강연 <새로운 평화, 노동운동과 함께> 참관기”, 《사회운동포커스》, 2024년 3월 19일, 이혜인, “권위주의와 전쟁으로 분열된 세계를 반전평화운동으로 잇기 위해: <두 개의 전쟁과 트럼프의 귀환?: 평화를 향한 좁은 길을 찾기 위하여> 지상중계”, 《사회운동포커스》, 2024년 5월 14일, 사회진보연대, “[노동자대회특별호] 북한은 침략전쟁 가담하지 말라: 파병과 핵동맹으로 나아가는 북·러 군사협력 규탄한다”, 《사회운동포커스》, 2024년 11월 9일.

그리고 이러한 정세인식을 공유하는 연대세력과 함께 권위주의, 팽창주의, 핵무기에 대한 반대를 엮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2022 노동운동 포럼 중 우크라이나 활동가 화상강연과 <우크라이나 사회운동 연대기금> 모금 활동, 국제연대체 ‘우크라이나 글로벌 연대 네트워크’ 참여, 재한 러시아 평화운동가 지역별 강연, 재한 이란 여성 토크 콘서트, <나발니> 영화 상영회, 일본 ‘우크라이나 연대 네트워크’와의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⁴⁸ 특히 올해에는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80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참가와 후속 활동을 통해 일본 반핵평화운동과 연대를 확장하고자 한다.

평가와 과제

매년 세계의 무력분쟁과 군비지출, 핵 확산 현황을 추적하여 연감을 발간하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6월 16일, 2025년 연감을 발간하며 “냉전 종식 이후 지속된, 세계의 핵무기 수가 줄어들던 시대가 끝나가고, 대신에 우리는 핵무기 증가, 핵에 대한 강경한 수사, 군

48 사회진보연대,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세계의 미래①, ②: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사회운동의 과제> 2022년 노동운동포럼 지상중계, 《사회운동포커스》, 2022년 12월 20일/21일, 사회진보연대, “러시아 시민,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를 말한다: 재한 러시아 평화활동가 초청강연”, 《사회운동포커스》, 2022년 11월 1일, 사회진보연대, “여성, 삶, 자유”를 외치며 투쟁하는 이란 여성들을 만나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재한 이란 여성 토크 콘서트”, 《사회운동포커스》, 2023년 3월 13일, 사회진보연대, “푸틴을 폐배시키는 단 하나의 조건, 침묵하지 않는 러시아 시민을 만나다: <나발니> 영화상영회/재한 러시아 사회운동가 간담회> 지상중계, 《사회운동포커스》, 2024년 3월 20일, 가토 나오키, “좌파적, 진보적 우크라이나 연대 운동의 큰 밑거름이 된 ‘2월 연속 행동’ - 일본 도쿄에서 보내온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운동 참가자의 메시지”, 《사회운동포커스》, 2024년 3월 29일.



2024년 10월 29일, 일본 원수협 활동가들이 사회진보연대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했다. 왼쪽 세 번째부터 통역을 맡은 이준규 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원수협 사무국 국제부의 츠치다 야요이 사무국장장과 시마다 유키 씨다. 원수협과 사회진보연대는 피폭 80주년을 맞는 2025년 핵보유국들에 핵무기 전면 폐기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촉구하는 국제행동을 강화하는 데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원수협(왼쪽)과 원수금(오른쪽)의 2025 원수폭금지세계대회 포스터다. 원폭 투하 80주년을 맞은 올해, 일본 반핵평화운동은 8월 원수폭금지세계대회의 규모를 예년보다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원수협은 “핵무기 없는 평화로 공정한 세계를 - 피폭 80년 핵무기금지조약에 참가하는 일본으로”를 슬로건으로 걸고, 세계에서 피폭국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 일본을 미국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고 핵무기금지조약에 참가하는 나라로 바꿔내자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원수금은 올해 대회의 목표가 ① 피폭의 실상을 원점으로 삼고 피폭자의 원호연대와 핵무기 철폐 운동을 차세대로 계승 ② 핵무기금지조약과 NPT에 따른 국제사회의 핵군축 ③ 동일본 대지진·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교훈을 얻은, 탈원전 사회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비통제 합의 폐기라는 뚜렷한 추세를 묵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돌아온 핵 경쟁의 시대는 어쩌면 냉전 시대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푸틴 1인이 지배하는 러시아와 예측불허의 행보를 보이는 트럼프의 미국이 핵무기 현대화에 매진하고 있고, 중국이 어떤 국가보다도 빠르게 핵 보유량을 급격히 늘리며 다시 미국과 러시아의 핵 확대를 자극하는 새로운 축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약 50기가 우리 곁에 있다.

그럼에도 NPT 체제의 한계를 넘어 모든 핵무기 철폐를 목표로 하며 세계 반핵평화운동이 탄생시킨 핵무기금지조약이 UN총회에서 122개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고, 3년 만에 50개국에서 비준에 성공하여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된 과정을 보면, 세계에는 핵 경쟁의 부활에 맞서 대안을 조직하고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 아직 이러한 흐름을 체감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지만, 앞으로 이곳에서도 그런 운동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독자들에게 제안 드린다.

한일반핵평화연대는 사회진보연대 활동의 중요한 성과이지만, 필자는 이에 참여하며 과제도 분명히 느꼈다. 다른 나라 대중운동과의 교류는 물론 그 자체로도 의미 있지만, 이를 어떻게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구체적인 공동의 실천으로, 담당자 개인의 경험이 아닌 한국 반핵평화 대중운동의 성장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를 더 밝혀야 한다. 독자들도 이 부분을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프롤레타리아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본 10월혁명

베틀렘, 『소련에서의 계급투쟁』①

정성진(정책교육국장)

사회진보연대는 최근 몇 년 각국의 혁명사를 반추하는 가운데 러시아혁명과 소련사를 다각도로 살펴본 바 있다. (2022년 가을호·겨울호, 「스탈린 시대, 속삭이는 사람들의 이야기」, 2023년 봄호, 「『러시아혁명 1917-1938』을 통해 본 러시아혁명사」, 「한 세기가 지난 1917년 10월」, 2024년 가을호·겨울호, 「스탈린 신화를 파헤치다」) 이번 호부터 프랑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샤를 베틀렘(Charles Bettelheim)의 『소련에서의 계급투쟁』(총 3권)을 통해 같은 역사를 다룰 것인데, '소련을 왜 또 보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법하다.

첫 번째 답변은, 이전 글들에서 살펴본 역사를 마르크스주의적 개념으로 분석한 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베틀렘의 『소련에서의 계급투쟁』은 자본주의적 경제관계(생산관계·생산력)와 이에 조응하는 정치·이데올로기관계에서의 계급적 실천, 즉 사회관계와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소련사를 설명한다. 나아가, 소련에서의 계급투쟁이 과연 자본주의적 경제관계를 변혁하는 효과를 낳았는가, 즉 노동자연합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는가를 기준 삼아 각각의 계급적 실천을 평가한다.

베를린은 소련에서 계급투쟁이 사회관계의 변혁에 실패하기에 이른 과정을 상세히 분석했고, 그 주요 원인을 ‘경제주의’로 짚음으로써 동시대의 노동자운동에 교훈을 주려 했다. 이 교훈은 훗날 ‘평의회마르크스주의’와 ‘사회운동노조’의 제기로 계승됐다. 따라서, 소련사를 반성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지향점을 이해하려면 베를린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겠다.

현재 시점에서의 의의도 있을 것이다. 1917년 당시 세계대전이라는 전례 없던 사태와 경제·사회의 붕괴에 대해, 정치혁명을 넘어 사회주의를 건설함으로써 문명을 재건하려 했던 시도, 그리고 그 실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현재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인민주의·권위주의의 발호 속에서 마르크스주의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성찰케 한다. 베를린은 특히 레닌이 ‘경제주의’에 맞서 발전시켰던 ‘문화혁명’의 문제의식을 강조했는데, 이를 계승하여 지금 시점에서 인민주의·권위주의에 맞서는 토양을 조성하는 사회운동이란 무엇일지, 『소련에서의 계급투쟁』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계간 사회진보연대》의 이번 호부터 네 차례에 걸쳐 『소련에서의 계급투쟁』 세 권 중 1-2권을 소개할 것이다.¹ 책 1-2권의 목차와 연재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소련에서의 계급투쟁』 전체 서문은 《사회운동》 2002년 3월호에 실렸다. 1-2권은 필자가 번역했으나, 출판하지 않았다.

1권. 『소련에서의 계급투쟁: 첫 번째 시기, 1917-1923』 (1974)

전체 서문

1권 서론

- 1부. 10월혁명과 소비에트 권력의 수립
- 2부. 소비에트 권력과 1917년부터 1921년 사이의 계급관계 변화
- 3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주요 제도 변화
- 4부. 볼셰비키 당내 이데올로기투쟁과 정치투쟁
- 5부. 혁명 5년의 대차대조표와 레닌 사후의 전망

2권. 『소련에서의 계급투쟁: 두 번째 시기, 1923-1930』 (1977)

2권 서문 및 서론

- 1부. 신경제정책 시기 상품화폐관계와 계획의 발전
- 2부. 신경제정책 시기의 농촌: 계급분화, 계급투쟁, 농업정책 및 농업의 사회관계 변화
- 3부. 산업 및 도시 부문의 모순과 계급투쟁
- 4부. 볼셰비키 당내 이데올로기관계와 정치관계의 변화
- 5부. “대전환”과 새로운 모순의 출현

순서	범위	주제
①	전체 서문 1권 서론-1부	저자의 문제의식과 사관, 마르크스주의적 개념 설명 1917년 10월혁명으로 형성된 경제·정치·이데올로기관계 분석
②	1권 2-4부	1917년 10월혁명 이후 1921년 내전 종결과 1923년 신경제정책의 본격 개 시까지의 경제·정치·이데올로기관계 분석, 계급투쟁에 대한 평가
③	1권 5부 2권 서론-1부	신경제정책의 구상 변화와 문화혁명의 문제의식 설명
④	2권 2-5부	신경제정책 시기(1921년 중순부터 1930년 초까지)의 경제·정치·이데올로 기관계 분석, 계급투쟁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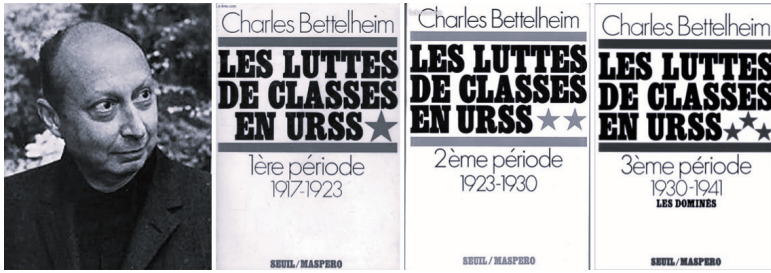
연재의 서론 격인 이번 글은 저자가 소련사를 설명하는 관점과 역
사 서술의 도구가 되는 마르크스주의적 개념을 해설할 것이다. 또한,
1917년 10월혁명에 대한 베틀렘의 설명을 소개할 것이다. 10월혁명은
이후에 전개될 계급투쟁의 조건이 됐던 사회관계를 형성했다.

1. 『소련에서의 계급투쟁』의 사관(史觀)

1) 저자 소개

샤를 베틀렘(1913~2006)은 프랑스 출생으로, 20대였던 1930년대 파시즘이 부상하자 이에 맞서 공산주의를 수용하고 1933년에 프랑스공산당에 가입했다. 1936년에 '사회주의 조국' 소련에 방문했으나 당시 대숙청을 목격했고,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하진 않았으나 소련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경제학, 소련사, 경제계획을 연구했던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정부 노동부 관료로 잠시 일했고, 1948년에 고등연구실습원 사회과학부(이후 고등사회과학학교로 독립)에 들어갔다. 1950년대에 그는 이집트 나세르 정부, 인도 네루 정부, 알제리 벨라 정부에 정책자문으로 참여했고, 1958년 산업화양식연구센터를 창립하며 경제계획의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고, 1963년에 쿠바 정부의 초청을 받아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주의 경제학 논쟁에 참여했다. 한편, 1960년대 중반 중국에 여러 번 방문해 중국공산당의 활동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는데, 이 경험은 그가 기존의 입장을 정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에 베틀렘은 저술에 몰두해, 대표작 『소련에서의 계급투쟁』 1권(1974), 2권(1977), 3권(1982)을 발표했다.

베틀렘은 『소련에서의 계급투쟁』 전체 서문에서 1960년대 초 라틴아메리카 사회주의 경제학 논쟁에 참여했던 때와 『소련에서의 계급투쟁』을 저술할 때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언급한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에서, 경제계획 역시 사회관계에 기초한 계급투쟁의 일종으로 인식하며 중립적이지 않다고 보게 된 것이다. 이런 입장 변화는, 그



[그림 1] 샤를 베틀렘과 그의 대표작 『소련에서의 계급투쟁』 3부작

(출처: 위키미디어, 아마존)

사이 중국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베틀렘이 프랑스 마르크스주의자 알튀세르가 주도하는 세미나에 참여했던 덕이었다.

『소련에서의 계급투쟁』이 소련사를 분석하는 주요 틀, 즉 '사회관계라는 조건 위에서 일어나는 계급적 실천(계급투쟁)'과 '사회관계를 재생산하거나 변혁하는 효과를 가하는 계급적 실천(계급투쟁)'의 연쇄는, 베틀렘이 알튀세르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보여준다. 『소련에서의 계급투쟁』은 알튀세르의 이론적 개념을 실제 역사에 적용했던 시도이며, 역으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소련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알튀세르의 이론적 비판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핵심 개념: 사회관계(계급관계)와 계급투쟁

『소련에서의 계급투쟁』 전체 서문에서 베틀렘은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으로 대표되는 소련의 제국주의적 정책, 폴란드 노동자 투쟁 탄압 등 내부 모순을 지적하며, 진정한 문제는 이런 현실을 만들어 낸 사회관계에 대한 분석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방기한 것이라 비판했다.

소비에트 역사와 소비에트 사회의 모순적인 현실 상황은 최소한의 분석의 대상도 되지 못했다. 단죄되고 전화되어야 할 현실의 측면들은 소련의 내부모순과의 관련 속에서 해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측면들은 특정한 인격(즉 스탈린)의 행동에 의한 ‘일탈’로서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이비 설명이 소련공산당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분석의 도구로서 마르크스주의를 당이 방기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로써 당은, 단죄되어야 할 것으로 표현된 것들을 산출한 사회관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이 나라가 현재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단지 몇 명의 지도자들의 ‘개인적 책임’에 결정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권력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것도, 그들이 지금까지 지적한 정책들을 실행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도, 필연적으로 현재 소련의 지배적인 사회관계의 성격 - 선행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관계 - 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전체 서문)

원인을 정확히 설명해야만 소련이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베틀렘은 소련의 ‘사회관계’ 변화와 그 ‘모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자신의 과제로 삼는다. 이런 베틀렘의 관점은 그 자체로 쟁점적인데, 소련에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나 ‘계급모순’, ‘계급투쟁’이 존재했다고 보는 셈이기 때문이다. (소련마르크스주의자 대다수는 이를 부정한다.)

나의 과제는 이 시기에 계급관계와 경제관계, 정치관계, 이데올로기관계에서 발생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 책의 분석은 소

비에트 혁명사를 볼세비키 당이 내린 결정과 “선택”의 “결과”로 제시하는 특정한 개념을 깨고자 한다. 역사의 실제 운동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이 실제 운동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역사유물론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를 이해하는 그런 방식은 완전히 거짓이다. 이로써 역사의 운동의 진정한 본질, 즉 모순의 (무엇보다도 계급모순의) 발전과 이동이 사라졌다. 이 책은 바로 이 모순의 발전과 이동을 이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1권 서론)

베틀렘이 제시하는 여러 개념을 정리하겠다. 먼저 사회관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베틀렘이 말하는 사회관계는 ‘계급관계’, 정확히는 ‘자본주의적’ 내지는 ‘부르주아적’ 계급관계를 지칭한다. 이 부르주아적 사회관계 내지는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에는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차원이 있는데 이를 베틀렘은 ‘경제관계’, ‘정치관계’, ‘이데올로기관계’로 지칭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 관계가 고정된 게 아니라 ‘변화’한다는 점인데, 관계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모순’ 개념이 중요한 것은, 단지 관계 그 자체의 객관적·논리적 불완전성에 따른 변화의 필연성 차원을 넘어, 관계에 속한 현실 사람들의 ‘실천’에 주목하게 하기 때문이다.² 관계는 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실천

2 예를 들어 ‘친구 관계’는 영원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의 접근은 친구 관계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다. 인간 본성상 그런 관계가 필연적으로 형성되고 지속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도 있다. 이는 객관적 차원의 논쟁이다. 반면, 친구 관계의 지속 여부는 실제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친구 관계에 속한 이들이 관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관계는 더 끈끈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으며, 혹은 다른 관계로 변할 수도 있다. 다만 이것이 사람들이 임의로 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친구 관계’라는 것은 일정한 객관성을 가지며, 사람들의 행동이 그 관계에 부합하는지, 관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을 관계에 부합하도록 ‘제약’하며, 이 실천은 다시 관계에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구성되는데, 이 계급관계의 모순은 ‘부르주아적 실천’과 ‘프롤레타리아적 실천’이라는 두 가지 ‘계급적 실천’을 낳는다. 베를린 앞의 실천은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를 재생산 즉 유지·강화하는 식으로 작용하며, 뒤의 실천은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를 약화·소멸시키는 식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즉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실천이 ‘부르주아적’인가 ‘프롤레타리아적’인가의 성격 판단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 규정에 근거한다.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를 약화·소멸시킨다는 말의 뜻을 간략히 짚겠다.

계급들은 그 구성원이 생산수단과 맺는 관계(따라서 그 구성원이 점유한 위치)와 그들이 “노동의 사회적 조직화”에서 수행하는 “역할” 양자에 의해 구분된다. … 만약 [프롤레타리아적] 계급투쟁이 올바르게 행해진다면, 프롤레타리아는 사회관계를 변혁함으로써 경제 전체와 각 생산단위를 경영하고, 생산력 체계의 변혁을 지도하며, 교육기구의 방향성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점차 [부르주아로부터] 인수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프롤레타리아가 점점 덜 프롤레타리아가 되도록 만드는 혁명적 투쟁, 즉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자신과 분리했던 모든 사회적 힘을 전용(全用)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로서 자기 자신을 폐지하는 혁명적 투쟁의 결과이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의 과정에서 본래 부르주아에 대응했던 모든 “지위”와 역할이 변화하며, 그러한 지위를 점유하고 역할을 행하는 생산 및 재생산의 주체들도 점점 덜 부르주아가 되어간다. (1권 2부 1장 서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의 사회적 조직화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점에서 관계(분업)를 구성한다. 따라서 계급관계의 소멸이란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의 역할을 ‘인수’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로서 자기 자신을 폐지’함으로써 이뤄진다. 역할 구분이 사라지므로 관계가 소멸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를 약화·소멸시키는 ‘프롤레타리아적’ 내지는 ‘변혁적·혁명적’ 계급투쟁이, 그 계급관계를 구성하는 프롤레타리아에 부합하는 실천에 반(反)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변혁적·혁명적’이라 표현하는 이유다.

베를린은 소련에서 계급투쟁을 분석하며, 계급관계에서의 프롤레타리아가 꼭 ‘프롤레타리아적’ 실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다. 즉 베를린이 자주 쓰는 ‘프롤레타리아’라는 단어에 ① 계급관계를 구성하는 프롤레타리아와 ② 실천의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음에 유의하자. 2023년 봄호의 글에서 관련된 발리바르의 문장을 확인할 수 있다.³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프롤레타리아’라는 이름은 ‘노동계급’이나 ‘임금노동자 계급’과 동의어가 아니며, 오히려 프롤레타리아는 그와 다른 역사적 기능을 가진 집단을 형성한다. 이러한 집단에서, ‘프롤레타리아’라는 이름은 대립물들의 통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즉 한편에서, 프롤레타리아는 어떤 ‘본원적 축적’이라는 형태에 의해 ‘소유를 박탈당하고’ 불안정한 삶에 내던져진 궁핍화된 대중

3 에티엔 발리바르, 임지섭 역, 「한 세기가 지난 1917년 10월」,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3년 봄호, 107~108쪽.

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들은 부르주아의 지배(사실은 모든 계급적 지배)에 도전하는 근본적으로 착취 받는 계급이며, 다양한 (넓은 의미의) 정치적 조직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한다.

3) 사회관계·계급투쟁의 첫 번째 차원: 경제

『소련에서의 계급투쟁』의 특징은, 소련의 '계급관계'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모든 논의를 전개하려 하며, 그 세 가지 차원을 경제·정치·이데올로기의 순서로 설명하려 한다는 점이다. 1권의 대상 시기에 대한 설명은, 2부의 경제관계·계급관계 분석, 3부의 정치관계 분석, 4부의 이데올로기관계 분석의 순서로 진행된다. 2권의 신경제정책 시기에 대한 설명 역시, 1-3부의 경제관계·계급관계 분석으로부터 4부의 정치·이데올로기관계 분석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경제관계·계급관계 분석이란, 자본주의적 경제관계 위의 ① 공장 내 관계, ② 농장 내 관계, ③ 공장과 농장 간 관계의 양상과 변화를 설명함을 뜻한다. 베틀렘은 이 세 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소련에서 이들 관계가 자본주의적 경제관계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었다는 점을 끊임없이 지적한다. 여기서 자본주의적 경제관계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즉 '자본주의적 상품·화폐관계'와 '임노동관계'뿐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력'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산력도 관계이며, 따라서 중립적이지 않다는 베틀렘의 тезис는 그의 경제주의 비판에서 중요하다.

이 분석에서 나는 상품·화폐관계, 그리고 임금관계가 사람들의 의지와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따라서 그것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폐절되었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현실적인 사회관계로서 존

재함을 설명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내에서 상품-화폐 관계는 내재적인 사회관계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즉 그것은 사회관계의 효과이며 또한 사회관계를 재생산하기 위한 객관적 필요조건인 것이다.

경제주의는 생산의 물질 수단 자체를 생산력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생산력이 주요하게는 생산자들 자신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게 된다. (전체 서문)

이는 경제관계가 ‘① 현실적인 즉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관계다 ② ‘사회관계를 재생산하는 필요조건’이자 동시에 ‘사회관계의 표현 내지는 효과’다 ③ 생산력이 주요하게는 생산자들 자신으로 구성된다’는 명제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명제는 특히 1917년 10월혁명 이후 ‘노동자 통제’의 시도와 실패, ‘국가자본주의’ 형성, 내전기와 신경제정책 시기 공장 과 농촌의 관계 변화, 경제계획이나 신경제정책의 성격을 논할 때 계속 쓰일 것인데, 다음 글에서부터 다룰 주제다.

4) 사회관계-계급투쟁의 두 번째 차원: 정치

1권 3부와 2권 4부에서 주로 분석되는 정치관계는, 일차적으로는 소련의 정치제도와 정당(주로는 볼셰비키 당)을 대상으로 하나, 베를린은 이러한 현실의 제도와 구분되는 ‘권력’ 자체를 계급관계와 결부시켜 탐구한다. 정치를 권력관계, 더 근본적으로는 계급관계로 파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권력은 계급관계이지 “사물”이 아니므로 “넘겨받을” 수 없다. (1권 1부 2장 3절 서문)

볼셰비키 당이 이끈, 대도시 노동자의 혁명적 투쟁은 (...) 프롤레타리아의 이데올로기적 권력, 이후에는 정치권력을 성립시켰다. 이 권력은 무엇보다도 계급관계였다. 프롤레타리아 권력은 특정한 정치제도와 같지 않다. 동일한 계급권력이 “현실에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정치제도”로 “실현”될 수 있다. (1권 1부 2장 2절 서론)

관련하여, ‘사회세력 간 갈등의 객관적 과정’ 속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대표자’라는 개념과 볼셰비키 당 역시 그런 대표자 중 하나로 인식하는 베틀렘의 시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분석 대상이 볼셰비키 당이나 러시아 프롤레타리아의 의지나 의도가 낳은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는 러시아혁명과 이에 따른 소비에트 사회의 변화가 사회세력 간 갈등의 객관적 과정(사회세력은 이 과정에서 스스로 변화한다), 그리고 이 사회세력들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대표자의 개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이는 당을 “역사의 주체”로 상상할 때와는 다르게, 당의 활동의 지위를 지정해야 함을 뜻한다. 이는 볼셰비키 당이, 대중과 연결된 다른 프롤레타리아적 혁명적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운동에 참여하지만 이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 ... 역사의 운동에 대한 혁명적 당의 참여는, 운동이 잠재적으로 잉태한 변화가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 실제로 일어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 운동의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혁명적 당이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역사적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의 의미다. (1권 서론)

대표자는 갈등하는 사회세력 사이에서 어떤 경향들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역사의 운동을 결정하는 것은 대표자가 아니라 사회세력, 더 정확히는 사회세력이 변화하는 ‘객관적 과정’으로서 ‘사회관계’다. 다만, 베틀렘이 정당과 같은 대표자를 순수하고 기계적인 ‘반영자’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사회세력들이 변화하는 가운데 대표자 역시 변화하며, 그 가운데서 대표자는 상대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 즉 사회세력 간 갈등의 객관적 과정의 변화를 인식함으로써, 역사의 운동을 구성하는 사회세력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베틀렘은 이를 ‘지도적 역할’이라 표현하는데, 사회관계 안에서 이런 역할이 ‘부여’되려면 상당한 조건과 역량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볼셰비키 당의 지도적 역할은 역사의 운동에 당이 삽입된 방식, 당이 사회세력(이들의 행동이 역사의 운동을 결정한다)과 맺었던 관계, 그리고 모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에 기초하여 사회세력을 인도할 수 있는 당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 당이 모순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올바른 노선을 세우지 않았거나, 비권위적 지도방식을 지키지 않아 대중과의 관계가 악화했을 때, 역사의 객관적 과정은 당이 그 진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로 발전했다. 그 결과 당이 내린 결정은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의 분석 대상이 무엇보다 정확히 계급투쟁의 객관적 과정이어야 하는 이유이다. 당의 정치노선, 당이 채택했던 조치, 당내에서 수행된 투쟁에 대한 검토는 이것이 바로 그 객관적 과정의 발전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파악하려는 한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1권 서론)

당 역시 ‘사회세력 간 갈등의 객관적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에서, 베틀렘은 ‘지도적 역할’이 부여되려면 사회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올바른 노선’, 즉 이론·이념과 강령·정책에 의한 지도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사회관계의 변화, 그 가운데서 ‘대표자’의 지위, 지도적 역할과 그 한계라는 문제를, 이번 글에서는 1917년 2월혁명에서 10월혁명까지 시기 볼셰비키 당의 역할에 대한 베틀렘의 분석에서 확인할 것이다.

4) 사회관계·계급투쟁의 세 번째 차원: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관계에 대한 분석은 주로 1권 4부와 2권 4부에서 이루어진다. 정치관계와 마찬가지로, 베틀렘은 이데올로기 역시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에 결부된 하나의 ‘관계’로 파악한다. 앞서 자본주의적 계급관계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실천을 그 자체에 부합하도록 제약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데올로기도 그런 제약의 한 형태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베틀렘은 소련의 특수한 경제관계를 구성하는 공장 내·농장 내·공장과 농장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농민과 노동자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한다. 예를 들어 제국 시절부터 마을공동체 농민에게서 나타난 정치적 무관심과 고립주의 성향,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 노동자들 사이에서 나타난 ‘혁명적 방위론’의 확산과 쇠퇴, 혁명과 내전 시기에 드러난 농민·노동자의 영웅주의와 동시에 만연한 ‘소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는, 사회관계의 변화 속에서 농민과 노동자들이 따랐던 지배적 행동규범을 보여준다.

정치관계와 이데올로기관계의 연결도 중요한데, 앞서 언급한 ‘이데

올로기적·정치적 대표자' 개념을 상기하자. 베틀렘은 농민과 노동자의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정치세력, 즉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의 영향력이 소련에서 이들 정당이 해산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고 본다. 그는 이를 '소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며, 이 이데올로기가 사회관계의 일부인 볼셰비키당 내부에도 영향을 미쳤고, 여러 형태의 '경제주의'로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베틀렘은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1902)를 따라 경제주의를 정의한다. 경제주의란, 자본주의적 경제관계 하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는 실천이 자생적으로 자본주의를 변혁해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혁명적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견해를 말한다. 베틀렘은 경제주의가 19세기 중후반 독일 사회민주당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는데, 독일사민당은 러시아 멘셰비키가 모델로 삼았던 정당이기도 하다.

그 본래적인 형태에서 경제주의는 제2 인터내셔널 시기의 독일 사회민주당에서 발생했다. 그 우익적 변종들은 독일국가기구와 결합된 독일 사민당의 강력한 정치적 기구 및 노동조합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강력한 기구를 갖춘 지도부로서는 그들의 조직적인 활동의 점진적인 전개와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한 압력이 자본주의를 전복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 망상에 빠지는 것이 가능했다. (전체 서문)

베틀렘은 러시아에서 1917년 혁명을 통해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경제주의 이데올로기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며 점차 영향력을 강화했다고 분석한다. 이는 무엇보다 자본주의적 경제관계가 여전히 잔존했기 때문이다. 그 아래에서 농민과 노동자 같은 직접생산자들

은 자본주의적 분업 구조 속에서 경쟁하며 이익을 추구했고, 그 결과 ‘집단적 이해’ 내지는 ‘연합’을 형성하지 못했다.

(과거의) 글에서는 (나는) 사회적으로 통일되어진 정책(계획경제는 그러한 정책의 수단에 불과하다)의 주요한 장애물이 (...) 지배적인 사회관계라는 점을, 즉 그러한 장애물이 자본주의적 분업의 재생산과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제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점을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적 분업의 효과이며 또한 그러한 분업의 재생산의 사회적 조건을 구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없었다.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제관계는 개인과 기업을 집단적 이해보다 그들의 개별적인 이해에 우위성을 부여하는 ‘주체’로서 ‘기능’하게 함으로서 자본주의적 분업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조건이 된다. (전체 서문)

이 서술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아래에서 변혁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 관계 속에서는 부르주아뿐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 역시 그 관계를 재생산하는, 다시 말해 ‘부르주아적’ 성격을 띤 실천에 머무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는 내재적 모순을 지니며, 이를 변혁하는 실천이 발생 가능하고, 이 실천은 이를 위한 이론·이념과 강령·정책을 통해 정치적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는, 노동자와 농민의 즉자적 요구가 자본주의적 경쟁의 표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적’ 계급투쟁에서 중요하다.

경제주의는 사실상 마르크스주의 내에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가 취하는 형태이며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계급들 그 자체가 소멸할 때만이 소멸할 수 있는 부르주아적 사회관계 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

다. ... 경제주의에 대한 투쟁은 따라서 필연적으로 마르크스주의 역사의 일부(...)이다.

사회주의를 위한 이데올로기 투쟁의 핵심적인 측면의 하나는 항상 경제주의(그것의 우익적 형태든 좌익적 형태든)에 대하여 투쟁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왜 소련이 현재의 형태 - 특정한 유형의 자본주의 국가(국가자본주의) - 로 되어왔는가를 분석할 때, 우리는 경제주의가 부르주아적 사회세력으로 하여금 이러한 진화과정을 조장하도록 허용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전체 서문)

베를린은 10월혁명 이후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볼셰비키당이 점차 경제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실하고, 각 계급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향, 구체적으로는 특정 분파(가령 중공업 대공장 노동자)의 요구만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를 경제주의의 '좌익적 형태'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특정 생산자 집단의 자생적 이익 추구를 마치 자본주의적 경쟁을 극복하고 전체 생산자의 단결을 실현하는 실천인 것으로 오인하는 경향이였다.

나아가, 이러한 경향은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나 '사회주의 혁명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그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요구들을 '반노동적·반혁명적'으로 규정하고 억압하는 '우익적 형태'로 반전됐다. 경제주의의 두 형태에 대한 베를린의 설명은 최근 사회진보연대의 정세 분석에서 지적되는 인민주의와 권위주의 경향과도 맞닿는 지점이 있다.

경제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모순적인 형태로조차 나타날 수 있다. 계급투쟁의 국면에 따라 이는 좌익적 혹은 우익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사실 그것은 늘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 ...

이것의 우익적 경향은 노동자들을 억압적 장치에 종속시키려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반대 입장에 선 좌익적 경향은 … 노동자계급의 통일과 다른 억압받는 계급과의 단결이 (경제적 과정 속에서) 모든 노동자의 이해의 집중을 통해 자발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실상 이 두 개념은 모두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계급투쟁의 결정적 역할과 (이러한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올바른 정치노선에 의해 지도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필수불가결함을 거부한다. (전체 서문)

앞서 ‘프롤레타리아적’ 계급투쟁이란 자본주의적 계급관계 속에서 ‘프롤레타리아로서의 자기 자신을 폐지’하는 실천이라고 했듯, 베틀렘은 이런 실천을 지향하는 변혁적 마르크스주의자는 “시류를 거스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1권 4부 4장 3절) 물론 그저 시류에 역행한다고 해서 사회관계와 실천의 거대한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올바른 이론·이념과 강령·정책을 바탕으로 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말이다.

베틀렘은 1917년 2월혁명이 10월혁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볼셰비키 당이 바로 이러한 지도적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하며, 특히 노동조합운동을 대표하던 멘셰비키의 ‘영토와 공장(일자리)을 포기할 수 없다’는 ‘혁명적 방위론’에 맞선 이데올로기 투쟁이 중요했다고 본다. 이는 이번 글에서 다룰 내용이다.

5) 소결: 두 가지 요인에 의한 설명

베틀렘은 소련사를 분석하며 복잡한 개념을 동원하지만, 실제 본

문에서는 크게 두 축으로 설명한다. 하나는 객관적 관계·실천·과정·모순이고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한 대표자, 주로 볼셰비키 당의 대응 방식이다. 서문만 보면 개념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본문에서는 실제 역사와 함께 개념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므로, 앞서 살펴본 사회관계(계급관계), 계급적 실천(계급투쟁), 부르주아적/프롤레타리아적 성격, 경제·정치·이데올로기관계 등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1917년 2월혁명 이전의 사회관계 변화

이번 글의 범위인 『소련에서의 계급투쟁』 1권 1부는 1917년 2월혁명부터 10월혁명까지의 사회관계 변화를 설명한다. 다만 서두에서 베틀렘은 그 배경이 되는 러시아제국의 사회관계를 소략히 언급한다. 이는 1917년 2월에서 10월까지 시기뿐만 아니라, 이후 내전기의 계급투쟁에도 조건이 되기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틀렘은 레닌의 러시아 사회성격 분석인 군사적·봉건적 제국주의론을 요약해 제시하는데, 필자가 영국의 경제사학자 로버트 앨런의 『농장에서 공장으로: 소련 산업혁명의 재해석』을 참고해 좀 더 풀어서 설명하겠다.⁴

1) 1914년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의 사회관계 변화

먼저 경제·계급관계 변화를 살펴보겠다. 19세기 중반 러시아제국은 서구 열강에 맞서 자본주의를 제한적으로 도입했다. 핵심 조치는 1861

4 Robert C. Allen, *Farm to Factory: A Re-interpretation of the Soviet Industrial Revolu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년 농노해방령과 철도 건설이었다. 해방령은 농민을 인신적 구속에서 풀어내 노동시장으로 유도했고, 철도는 농촌을 세계시장과 연결하며 상업적 농업을 촉진했다.

러시아의 봉건제는 개인농 단위가 아닌, 집단적 책임 구조를 가진 마을공동체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후진적이었다. 마을회의는 공동체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이를 위해 토지를 주기적으로 재배분해 경작케 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졌고, 이는 공동체 내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19세기 초중반 러시아 인민주의자들(나로드니키)은 마을공동체를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주의의 원형으로 보며, 이를 통해 전제정 타도를 꾀했으나 농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들이 평등주의의 증거로 여겼던 경작지 재배분은 사실 마을회의가 농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이었다. 마을회의에 맞서는 농민은 안 좋은 토지를 배정받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농노해방령은 지주계급의 이익 보호를 위해 마을공동체의 구조를 지속시켰다. 국가는 봉건지주의 토지를 마을 단위로 구입하게 하고, 대금을 먼저 지불한 뒤 마을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토지상환금을 징수했다. 그러나 이 상환금이 기존 지대보다 더 부담돼, 마을공동체의 경제적 압박은 오히려 커졌다. (가령 임대료를 내던 사람이 집을 강제로 사게 됐다고 생각해 보라.) 마을공동체가 토지상환금을 부담하며 그 권한이 더 세지고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 게다가 소유권은 개인이 아닌 마을로 이전됐다.

이 가운데 세계시장에서의 곡가 상승으로 지가도 오르며 마을회의를 장악한 부농은 수혜를 입었다. 상환금을 토대로 토지를 재구입한 과거 지주계급의 일부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인신적 구속에서 벗어난 빈

농은 상환금을 내고자 도시에서 소득을 벌충하거나,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 노동자로 변모했다. 한편, 젊고 모험적인 농민은 마을이 보장하는 경작권을 포기하고 용자를 통해 자영농으로 변모했다. 농민의 소득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내부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졌고, 특히 토지 소유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했다.

상업적 농업 발전과 도시 산업노동자 증가로 국내 소비시장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경공업도 발전했는데, 자생적인 성장이었지만 제국 정부는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 조치와 중앙아시아 식민화를 통해 그 발전 방향성을 통제했다.⁵ 이는 국내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을 전가했고, 국가 주도의 경제통제가 지속됐다.

1890년대에 제국 정부가 외자와 기술을 도입해 중공업을 성장시켰다. 그러나 이는 시장 수요가 아닌 정부 수요 즉 제국의 군사적 팽창에 의존했고, 자생력이 없었다. 이는 의도된바, 정부는 군수물자·시설을 국내 생산에만 의존하려 했고, 이를 강력히 통제했다. 자체 기반이 없었던 중공업은 외자·기술 수입을 위해 주로는 농업 수출에 의존했고, 한편으로는 국내자본에도 의존했다. 그러나 경공업 발전이 제약된 상황에서 국내자본은 주로 금융가로 변모한 과거 지주계급이 공급했다.

농업 수출에서 시작하여 비효율적인 중공업 투자를 매개로 외자·기술 수입으로 이어지는 경제 흐름 속에서, 외국자본 주로는 동맹국 프

5 엘런은 19세기 후반 일본과 러시아의 산업화 방식이 정반대였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자유 무역을 수용하고 인도산 면화를 수입해 저임금을 바탕으로 값싼 면직물을 생산해 수출하는 수출주도형 전략을 택했다. 반면 러시아는 보호무역을 채택하고 면직물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며, 면화 산지를 식민화해 자체 조달하는 수입대체 산업화를 추진했다. 경공업 자본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만, 산업 전망이 국가 정책과 식민지 확장에 좌우됐기에 제국 정부에 양면적 태도를 보였다.

랑스·영국의 자본과 과거 지주계급에 의존하며 국가가 경제를 강력히 통제해야 하는가, 상업적 자영농과 경공업에 더 자유를 주어야 하는가를 둘러싼 정책적 대립이 있었다. 가장 큰 쟁점은 토지상환금의 장기 분할 징수로 마을공동체가 유지된 것이었다. 1905년 혁명은 도시 노동자의 파업과 마을공동체 빈농의 반란이 주축이었는데, 이를 무력 충돌 없이 진압한 스톨리핀은 1906년 내무장관에 올라 1907년부터 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농업개혁에서 정부가 토지상환금을 면제하자 마을공동체의 구속력이 약해졌고, 부농은 양질의 토지를 사유화해 자영농으로서 성장한 반면, 빈농은 토지에서 밀려나 도시 노동자가 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도시 노동자에 대해서는, 독일의 비스마르크를 따라 복지를 제공하면서도 노동조합은 다시 금지시켰다.

베틀렘은 러시아제국 부르주아의 두 분파를 구분한다.

20세기 초 러시아의 산업 부르주아가 두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다. … 한 분파는 국가에 깊이 종속되어 있었고, 프랑스 및 영국 제국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제국의 팽창을 직접적으로 지원했다. 이 분파의 중심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였다. 다른 분파는 자체적인 금전적 기반이 더 강했기에, 전제정에서 좀 더 자유로웠다. 이 분파의 중심지는 모스크바였다.

부르주아가 전제정에 대해 정치적 주도권을 갖지 못했으며, 전제정이 이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거의 부여하지 않은 데에는, 부르주아가 전제정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는 이유도 있다. 19세기가 끝날 때쯤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단기간에 급속도로 이루어진 러시아제국의 산업화는, 그 일부만 산업이윤의 축적과 내수시장의 확대

에 기초하였고, 대부분은 외국의 투자와 정부의 돈 - 국립은행의 대출, 정부의 발주 등 - 에 기초했다. 러시아 산업의 성장은 많은 부분 여전히 “본원적 축적” 즉 농민에 대한 착취 증가[토지상환금 징수에 기초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수단이 바로 전제정이었다. (1권 1부 1장 서론)

다만, 러시아 농업의 확장과 산업의 비효율성 유지를 위한, 보호무역 및 토지, 공업 원료 산지 확보, 식민지 확대는 일관되게 추구됐다. 양 진영이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제국주의가 영국과 프랑스의 자본에 의존한 것은 약점이기도 했고, 산업자본의 기반이 극히 약했던 러시아 제국주의가 발전하기 위해 선택한 길이기도 했다. 따라서 러시아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적이면서도 전(前)자본주의적이라는 이중성이 있었다. 앞의 성격은 산업의 높은 자본집중도, 산업자본과 긴밀히 연결된 은행자본의 존재, 그리하여 영국-프랑스 제국주의와 연합해 제국주의적 팽창을 추동했던 금융자본의 형성과 상응했다. 뒤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군사적”이었던 러시아제국의 팽창에 상응했다. … 자본주의가 형성되자, 오랜 러시아 [봉건] 사회와 막 태어난 자본주의 사회 간의 모순이 발생했다. 이 모순은 전제정이 군사적 팽창을 가속하며, 러시아의 자본주의적 산업 발전을 지원하도록 만들었다. … 그 팽창과 식민화는 본래는 상업적이고 중상주의적인 성격을 가졌으나, 이후에는 점차 산업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1권 1부 1장 서론)

도시 노동자에 대한 정책에서도 이해가 일치했다. 러시아 전제정과 자본은 공업의 비효율성 탓에 노동자 임금을 낮게 유지하려 했다. 20세

기 초까지 명목임금이 소폭 상승했지만, 보호무역으로 인한 물가 상승 탓에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나아지지 않았다.

러시아 노동자계급은 산업화의 시기별로 두 세대로 나뉜다.⁶ 1861년 농노해방령 이후 형성된 1세대는 노동법이 없던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노동조합운동으로 나아갔고, 1905년 혁명과 노조 합법화를 거치며 그 운동은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1907년 스톨리핀의 개혁으로 노조가 다시 금지됐고, 한편 마을공동체가 약화하고 빈농이 도시로 대규모 이주하며 중공업 중심으로 고용된 2세대가 등장했다. 이들은 몇몇 대공장에 집중되었고, 공장 규율에 익숙하지 않아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선호했다.

이제 20세기 초 러시아제국의 정치·이데올로기관계를 주요 정치세력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부르주아는 상술했듯 두 분파가 있었다. 과거 지주계급과 귀족은 농노해방령 이후 금융가로 변모해 중공업·토지를 소유하고 정부 관료로 활동하며 제국의 군사정책에 관여했다. 한편, 경공업 중심으로 성장한 자생적 민간 자본가와 자유민들은 사법제도 발전을 배경으로 전제정을 비판하며 입헌군주정을 추구하고, 입헌민주당으로 정치세력화했으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입헌민주당은 1917년 2월혁명 이후 임시정부의 주축이 된다.

농촌 기반 정당은 사회혁명당이 있었다. 과거 인민주의자들은 농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테리 노선으로 전환했으나, 황제 암살 이후 탄

6 이 문단의 설명은 다음을 참고했다. S. P. 튜린 저, 강철훈 역, 『러시아노동운동사』(국역: 녹두, 1986); 빅토리아 보넬, 「제정 러시아 시기의 노동조합, 정당 및 국가」 및 레오폴드 헤임슨, 「1905-1907년 러시아 도시 지역의 사회적 안정성 문제」, 이인호 외 역, 『러시아 혁명사론』, 까치, 1992.

압을 받아 세력이 축소됐다. 이후 이들의 일부가 소수에 의한 테러를 비판하고 대중정당 노선을 채택해 사회혁명당을 창당했다. 1905년 혁명에서 마을공동체 빈농의 대규모 반란이 있었으나, 1907년 스톨리핀 개혁으로 마을공동체가 약해지고 상업적 자영농이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사회혁명당은 농촌 지식인과 상층 농민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물론 테러를 추구하는 자들도 소수파로 남았지만 말이다.) 이들의 정치적 지향은 이러했다. “[사회혁명당은] 주로 토지를 두고 지주와의 투쟁, 봉건국가와의 투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집중한다. … 그들의 투쟁은 모든 착취에 맞선 투쟁이 아니라, 사실상 지주와 거대 금융가의 착취에만 저항한다.”(1권 1부 서론) 그러나 이들의 영향력은 지방의 중심지에 한정되었고, 마을공동체는 정치적으로 소외된 상태로 남았다.

노동자계급 기반 정당으로는 1세대 숙련노동자의 노동조합운동에 기반한 멘셰비키가 있었다. 이들은 독일 사민당을 모델로 삼아, 러시아도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노동조합과 이에 기반한 사민당의 성장, 의회 설립과 선거권 확대, 나아가 사회주의로의 점진적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1910년대 들어 멘셰비키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직면했다. 스톨리핀 개혁으로 이주한 빈농들이 미숙련노동자로 도시 노동자 계급에 대거 편입됐으나 이들은 기존 노동조합운동에 관심이 없었다. 1912년 이후 정부와 노동자 간 대규모 충돌이 자주 발생했지만, 노조나 멘셰비키는 개입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1914년 세계대전의 발발은 상황을 급변시켰다.

볼셰비키는 자생적 경제투쟁이나 노동조합운동보다는 전제정을 혁명정부로 대체하는 정치혁명을 중시했다. 1912-14년 노동자 투쟁이 격화되며 2세대 노동자들 사이에서 볼셰비키 지지가 확산됐지만, 볼셰비

키와 이들의 관계에는 긴장이 존재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볼셰비키가 불법화되고 노동자들도 애국적 분위기에 휩싸이며 두 집단의 연결이 약해졌지만, 1917년 2월혁명 이후 다시 부상한다. 특히 공장위원회 운동에 참여한 급진적 노동자들과 볼셰비키의 결합은 2월혁명의 10월 혁명으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 세계대전 발발 이후 사회관계의 급변

제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보스니아계 테러조직에 암살당하며 시작되었고 제국주의 경쟁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나, 그 사이에 있었던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1903년 러시아는 세르비아에서 친오스트리아 왕정을 쿠데타로 전복시키고 친러 왕조를 수립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세르비아는 보스니아의 슬라브인을 해방한다는 명분으로 민족자치운동과 테러조직을 지원했다. (이는 2010년대 러시아 푸틴 정권이 크림반도나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썼던 전략과 유사했다.) 이들이 결국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했고,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하자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에, 독일이 다시 러시아에 선전포고하면서 전쟁이 확산됐다. 즉 러시아제국에 전쟁 발발의 주요 책임이 있었다.

문제는 러시아군이 독일을 침공했으나 섬멸당하고, 역으로 1915년 독일-오스트리아의 공세로 러시아 서부 지역이 독일군에 점령당했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 노동자계급에게 중대한 문제였는데, 중공업의 대규모 공장들이 제국 서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서부가 점령당하며 대량 실업이 발생했고,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이 수도 페트로그라

드로 피난했다.

한편, 제국 정부는 개전 이래 곡물의 자유거래를 금지하고 독점해, 낮은 가격으로 곡물을 수매해 도시와 군대에 공급했다. 곡물 수출 격감과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로 산업설비 수입이 급감하고 외자 도입도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채권과 통화 발행을 통해 군수산업을 유지했다. 이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수반했고, 대중의 실질소득 하락과 내수시장 축소로 소비재 생산이 격감했다. 정부가 산업의 원료 거래를 통제하고 군수산업에 집중시킨 것도 경공업 붕괴에 기여했다. 이 탓에, 제국 중부의 경공업 중심지들(대표적으로 모스크바)에서도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

통화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소비재 부족은 곡물 수매위기로 이어졌다. 농민들이 가치가 나날이 떨어지며 심지어 소비재로 교환조차 불가능한 화폐자산의 소유를 기피하고 농산물을 은닉하며, 농업생산을 감소시키기 시작했다. 이는 군대와 도시의 식량난을 일으켰다. 제국은 이에 강압적으로 대처했으나 반발이 심해졌고, 농촌은 점차 제국 행정에서 독립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정부에 맞서는 데서 마을공동체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했다.

수도 페트로그라드는 서쪽과 동쪽 양쪽에서 피난민과 노동자들이 밀려오면서 식량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 처했다. 당시 경제가 붕괴하는 와중에 유일하게 수도의 군수산업만은 정부의 통화 발행에 근거해 생산을 늘리고 있었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여기에 몰렸다. 연이은 패전, 수도의 인구 폭증,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 격화, 농촌의 독립 심지어는 반란으로 1916년 말 페트로그라드의 식량난이 한계에 도달하고, 시위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은 수도방위대가 총구를 정부로



[그림 2] 제1차 세계대전의 동부전선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러시아제국의 영토는 지금의 폴란드까지 뻗어 있었다. 20세기 초에 러시아제국의 대표적 공업도시는 페트로그라드·모스크바·로스토프나도누(현재 러시아), 키예프(키이우)·하르코프(하르키우)·오데사·돈바스(현재 우크라이나), 바르샤바·우치(현재 폴란드), 리가(현재 라트비아), 바쿠(현재 아제르바이잔)로, 대부분 제국의 서부에 몰려 있었다. 독일군의 침공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출처: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돌리며 결국 전제정이 붕괴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2월혁명이다.

당시 최대의 쟁점은 전쟁으로 인한 초유의 경제난을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였다. 2월혁명 이후, 금지됐었던 정치활동의 자유가 회복된다. 볼셰비키보다 상대적으로 탄압을 덜 받았던 멘셰비키가 먼저 활동을 개시했고, 이어서 볼셰비키도 하나둘씩 수도로 돌아오며 활동을 시작했다. 『소련에서의 계급투쟁』 1권 1부의 서술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3. 1917년 2월혁명에서 10월혁명까지의 사회관계 변화

베틀렘은 1권 1부 ‘10월혁명과 소비에트 권력의 수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괄한다.

나는 1부에서 1916-17년 사이 겨울에서부터 발전하여 1917년 10월에 소비에트 권력의 수립을 낳았던 혁명적 대중운동의 주요 특징을 검토할 것이다. 이 혁명적 대중운동의 이중성, 즉 도시에서는 프롤레타리아적 운동이었으며 농촌에서는 민주주의적 운동이었던 이중성을 분석하며, 이 이중성을 10월 이후 수립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특징과 연결시킬 것이다. 여기서 [10월혁명으로 이어진] 혁명운동과 10월 이후 형성된 정치관계 안에서 볼셰비키당이 수행했던 특수한 역할에 특히 주목할 것이다. (1권 서론)

10월 25일과 26일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당인 볼셰비키의 지도적 역할이, 러시아혁명이 이제 진입하게 된 새로운 단계의 성격, 새로운 통치권력의 계급적 성격을 홀로 결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 성격을 결정한 것은 또한 1917년 2월에서부터 10월까지 일어난 계급투쟁이었다. 이 계급투쟁은 특수한 유형의 것이었고, 민주주의적 과정과 혁명적 과정의 결합과 결부되어 있었다. 이 두 과정의 결합이 러시아혁명의 바탕에 있었다. 양자의 결합은 나아가 소비에트 권력의 정치기구 간의 관계 확립에, 그리고 이후 혁명의 진로에 큰 영향을 주었다. (1권 1부 서론)

베틀렘은 1917년 2월에서 10월 사이 도시와 농촌에서 각각 다른 성격의 대중운동이 전개되었다고 본다. 도시는 ‘혁명적 방위론’이라는 경

제주의 영향 아래 있던 운동이 점차 ‘프롤레타리아적 운동’으로 전환되었고, 농촌에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운동’이 진행되었다. 그는 10월 혁명을 이 두 운동을 결합하려는 시도로 해석하지만, 혁명 시점에서 실제 결합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10월 이후 특히 정치관계 차원에서 계급투쟁의 중대한 과제가 남았다고 분석한다. 도시 운동의 ‘프롤레타리아적’ 성격 형성에는 볼셰비키 당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도시·농촌 운동의 ‘이중성’ 속에서 10월혁명 이후 소비에트 정부와 당의 관계가 결정된다. 1권 1부가 설명하는 1917년 혁명의 이중성과 정치구조는, 이후 내전기의 조건을 형성한다.

본 3장에서는 2월에서 10월혁명 사이 도시의 정치·이데올로기 변화와 농촌의 토지 점유 운동을 중심으로 사회관계의 변화를 다룬다. 10월혁명 이후 정치관계 측면에서의 과제, 그리고 내전기 사회관계 변화와 계급투쟁의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 4장에서 다룰 것이다.

1) 1917년 ‘6월 대공세’까지 도시와 서부전선의 상태와 쟁점

도시 측면을 보자. 여기서 ‘도시’는 주로 독일에 점령되지 않은 대규모 공업도시, 사실상 수도 페트로그라드와 모스크바 일대를 의미한다. 먼저 주목할 것은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와 임시정부의 동시 수립으로 생긴 ‘이중권력’ 문제다.

① 정치: 이중권력

1917년 2월 말 시점에서, 이제 막 일어난 혁명을 대변해 발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페트로그라드시 소비에트뿐이었으며, … 반

란군이 지지하는 소비에트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권력은 없어 보였다. 러시아 제국의회가 구성한 위원회가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유일한 기관이었지만, 이들은 혁명을 일으킨 대중에게 어떤 권위도 얻지 못했다. … 그러나 주로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 소속 대의원들로 구성된 페트로그라드시 소비에트는 3월 1일에 제국의회의 위원회와 협의를 했다. 협의의 결과 부르주아 정치인으로 구성된 임시정부가 형성되었고, 소비에트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한에서 임시정부를 지지했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레닌이 ‘이중권력’이라 묘사했던 상태가 시작된 것이다. (1권 1부 1장 서론)

1917년 4월 시점에서 “이중권력”의 의미는,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의 민주적 독재가 한편으로는 실현(“실제로는” 페트로그라드에서만, 여기서 권력이 노동자와 병사의 수중에 있었다)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사회혁명당의 견해 탓에)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민 대다수는 계급 협조의 노선을 지지했고 그리하여 부르주아가 권력을 얻었다. (1권 1부 1장 3절 서론)

2월혁명 직후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가 주로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는 멘셰비키 활동가들의 명성, 수도에 볼셰비키 지도자가 없었던 점, 농민 출신 병사들이 아는 정당이 사회혁명당 뿐이었던 점 등 여러 이유에서 비롯되었지만, 베를린에 따르면 근본적으로는 수도 대중 다수가 ‘계급 협조 노선을 지지’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멘셰비키는 임시정부를 ‘조건을 만족하는 한에서’ 지지한다는 ‘비판적 지지’ 노선을 취했으며, 사회혁명당도 이를 따랐다. 이들은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는 임시정부이고, 소비에트는 노동자·병사의 요구를 모아

시위를 통해 이를 압박하는 ‘투쟁 지도부’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보았다. 즉 우리는 전쟁과 경제난 문제를 당신들이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당신들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투쟁하겠다는 것이다.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은 소비에트를 권력기구로 보지 않았고, 혁명적 투쟁과 선전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여겼다. (1권 1부 1장 1절 서론)

베를린이 4월을 기점으로 언급한 것은 이때 수도에서 ‘4월 사태’와 레닌의 귀환, 공장위원회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4월 사태란, 임시정부 외무장관 밀류코프(입헌민주당)와 전쟁부 장관 구추코프(과거 지주계급 출신)이 2월혁명에도 러시아는 변함없이 독일-오스트리아에 대한 공세적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전보를 보낸 것이 드러나자, 페트로그라드 인민이 대대적으로 반발하며 일어난 사건이다.

페트로그라드 노동자·병사들은 (‘혁명적 방위론’의 구호였던) ‘합병도 배상도 없는 평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와 임시정부 각료 사퇴를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비관적 지지’만으로는 소비에트가 대중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사태는 실제 권력이 임시정부보다 소비에트에 있음을 각인시켰고, 멘셰비키·사회혁명당 지도부는 이중권력 유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압력과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라 연정을 수용했다. 정부에 입각한 소비에트 지도자들은 장관으로서 책임과 소비에트 지도부의 입장은 구분된다고 선을 그었으나, 조율이 쉽지 않았다. 난국을 타개하고자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는 5월에 임시정부와 독립적으로 각국 사민당 대표단을 초청해 평화협상을 추진했다.

② 전쟁: 이른바 ‘혁명적 방위’

1917년 2월에서 4월까지, 노동자와 병사 대중은 여전히 레닌의 말처럼 “혁명적 방위론의 광기에 굴복한” 상태였다. (1권 1부 1장 2절 (a))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지도부를 구성한 멘셰비키는 세계대전이 각국 노동자정당이 부르주아를 견제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았고, 2월혁명 이후 러시아가 공세를 멈추고 군사 행위를 ‘방어’에만 국한했듯, 다른 나라들도 국제주의 정신에 따라 ‘1914년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평화협상으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혁명적 방위’와 ‘합병도 배상도 없는 평화’ 노선이다.⁷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협상을 해야 하나, 서부 영토는 회복해야 한다는 이 주장은, 개전 이후 독일군의 위협이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노동자들의 여론에 기반했다. 전쟁으로 공장이 점령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자 노동자들은 무능한 제국 정부 대신 영토 회복과 노동자 이익을 대변할 유능한 정부를 원했다.

더 근본적으로, 멘셰비키는 ‘동부로의 퇴각’이 러시아를 농업국가로 되돌릴 것이라 우려했다. 이는 봉건적 전제정을 복권시키고 노동조합 운동을 수십 년 후퇴시킬 것이라 봤다. 사업장 없는 노동조합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며 자연스럽게 산업노동자가 인구의 다수가 되고, 노동조합운동과 사민당이 성장해 정권을 잡는다는 구상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7 베틀렘이 ‘혁명적 방위론’에 대해 소략히 언급하기에, 다음을 참고해 보충했다. John D. Basil, *The Mensheviks In The Revolution of 1917*, Slavica Publishers, 1984.

이런 배경에서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는 5월, 각국 사민당 대표가 모여 종전을 협상하는 '스톡홀름 강화회의'를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사전 협상에서, 프랑스와 벨기에 사민당 대표는 독일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고, 독일 사민당 대표는 자국 노동자의 여론 상 1914년 이전 상태로의 '무조건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독일-오스트리아를 향한 '공세'가 아니라 '국제주의 정신에 입각한 평화협상'으로써 서부 영토를 탈환하려 했던 소비에트의 시도는 실패했다.

이후 임시정부 외무장관 밀류코프는 독일의 승리가 혁명과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며 '적극적 방어'를 소비에트 지도부에 요구했고, 멘셰비키 당대회는 독일의 침략에 대한 방어를 결의했다.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도 이에 따라 '6월 대공세'를 승인했다. 이 무렵 소비에트 조직이 각지로 확대되며 제1차 전러시아 노동자·병사 소비에트 총회가 열렸는데, 총회에서는 볼셰비키 안건이 대부분 부결되었고, 임시정부 지지와 '혁명적 전쟁' 지속이 결의되었다.

소비에트 ... 대의원은 노동자, 농민, 병사 사이에서 선출되었다. 이러한 선거방식이 선출된 대의원 중 일부가 부르주아, 특히 소부르주아를 대변하는 것을 당연히 막을 수는 없었다. 이 소부르주아적인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경향은 대중의 일부에 영향력이 있었다. 이는 특히 2월혁명 이후에 그랬는데, 그래서 소비에트 대의원 다수가 사회혁명당원이었고, 이후 6월에 선출된 [전러시아 소비에트의 지도부인]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사회혁명당이 다수를 점하게 된 것이다. (권 1 부 1장 1절 서론)

③ 공장: 임금 인상 요구와 '사보타주' 대응을 둘러싼

노조와 공장위원회의 갈등

도시의 경제난에 대해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지도부는 임시정부에 책임을 돌렸고, 멘셰비키는 주로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 복원과 임금 인상 요구에 집중했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과 임금 투쟁이 겹치면서 자본가·기술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레닌의 표현으로 '사보타주'가 발생했다. 이에 대응해 4월부터 공장위원회 운동이 등장했는데, 이는 개별 임금 인상 요구의 한계를 넘어서 보다 정치적 차원의 근본적 대응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공장위원회는 경영자·기술자에 대한 '노동자 통제'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통제'란 경영이 아닌 감시를 뜻했다. 노동자들은 기술과 경영 능력이 없었기에, 사보타주로 도피한 이들을 붙잡고 출근시켜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공장을 유지하려 했다. 사보타주가 만연한 현실은, 노동자들 사이에 노동조합을 통한 임금 협상이 아닌 경영진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낳았다. 이에 기초한 공장위원회 운동은 점차 정치권력과 전쟁 문제로까지 시야를 넓혀갔다.

1917년 2월혁명 이후 노동자운동에서 특기할 점은 공장위원회 조직과 노동조합의 분열이었다. … 1917년 2월혁명 이후 노조는 부활하였으나 과거와 달리 노동자들로부터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 노동조합은 단체협상의 방법만을 고수하려 하였다. 또 노조 내에서는 멘셰비키나 온건 사회주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1917년에 사회적 분열이 심화하거나 노동자들의 행동이 급진적으로 변할 때마다 영향력이 약해져 갔다. … 그 이유는 공장노동자들

이 1917년의 경제 파국이 심화하자 ‘빵과 버터’를 위한 노조의 경제투쟁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겼고, 파업에 가담했을 경우 징집으로 위협받았기 때문에, 점차 지엽적인 문제에 골몰하기보다는 러시아 전체 사회질서와 권력구조의 재편성에 더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공장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노동조합을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 이정희, 『러시아 혁명과 노동자』, 느티나무, 2003, 53-54쪽.

베를렘은 멘세비키가 “공장위원회에 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부여하려 했다”(1권 1부 1장 1절 서론)고 짧게만 언급하는데, 이정희의 책에서 공장위원회 운동을 노동조합으로 포섭하려 했던 멘세비키의 시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나 이 시도는 실패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페트로그라드 노동자들 사이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가 약해지고 공장위원회 운동이 강력해졌다. 이는 2월에서 10월 사이 사회관계 변화의 한 축을 이룬다.

④ 도농 관계: 식량난과 농민 소비에트 문제

2월혁명의 도화선이었던 식량난, 곡물 수급 문제에 대해 소비에트 지도부의 한 축인 멘세비키는 임시정부가 책임지라는 입장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사회혁명당은 농민들의 토지 점유 운동이 벌어지면서 내부 갈등을 겪게 된다.

임시정부는 기존 제국 정부의 곡물 수매 정책, 즉 사실상 강제 구매를 지속했으나, 행정력과 군사력 부족으로 시행할 수 없었고 도시의 식량난은 계속되었다. 이에 4월 말 토지위원회를 설립해 농촌 행정을

복원하려 했으며, 사회혁명당 소속 전문가들도 이 조직에 참여했다.

농촌에서도 도시의 '이중권력'에 대응하듯, 1917년 중반부터 사회혁명당 주도로 농민 소비에트가 형성됐다. 하지만 이는 마을의 농민이 선출한 대표자 조직이 아니라, 주·군과 같은 상위 행정단위에서 사회혁명당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농민과의 연결이나 식량난 해결에 기여하는 것보다 정치적 목적이 컸다.

농민 소비에트가 점차 조직되어 토지위원회에 맞섰다. 소비에트를 형성한 주도자들은 농촌 내의 인물보다는, 주로 군복을 입은 농민이나 병사였다. 사실상, 농민 소비에트를 조직하는 운동은 근본적으로는 위로부터의 운동이었다. 이를 추동한 것은 사회혁명당, 그리고 사회혁명당의 영향력 아래 있는 중상층 농민을 규합한 조직인 협동조합연맹(Cooperative Union, 농협)이었다. 이들이 농민 소비에트 조직에 흥미가 있었던 이유는 도시 소비에트들의 급진화를 상쇄하려는 목적이었다.

1917년 2월에서 10월 사이에, 농촌에서 '민주공화국' 수립, 보통선거, 제헌의회 수립 등의 '급진적' 정치요구를 내건 많은 운동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농촌의 지식인들이 구성한 것이었고, ... 공동체 소유에 깊이 결부된 농민 대중의 열망보다는, 마을공동체를 떠난 중상농, 부농, 토지소유자의 생각을 더 반영했다. (1권 1부 1장 1절 (b))

실제로 마을의 농민 수준에서는 농민 소비에트와 무관한, 전혀 다른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곡물 수출이 중단된 후 제국 정부의 징발에 맞서며 마을공동체가 복권되고 있었는데, 2월혁명 이후 도시와 군대의 '이중권력'으로 인한 행정력·군사력 공백을 틈타 중농·빈농이 지주

의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했다. 이는 도시의 식량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 농민운동도 2월에서 10월 사이 사회관계 변화의 한 축이므로 뒤에서 다시 다루겠다.

당시 사회혁명당과 농민 소비에트는 전제정 반대와 임시정부 ‘비관적 지지’라는 넓은 입장을 유지했지만, 점차 농민 토지 점유 운동을 둘러싼 갈등이 분출되며 이를 지지한 좌파 사회혁명당이 분열하게 된다.

2) 도시의 정치·이데올로기관계 변화와 볼셰비키의 이데올로기 투쟁

베를린은 1917년 2월에서 10월 사이 도시의 사회관계, 주로는 정치·이데올로기관계 변화의 핵심으로 공장위원회 운동 확산, 6월 대공세 실패 이후 페트로그라드 인민이 볼셰비키의 ‘패전’과 ‘소비에트 권력’ 구호를 수용한 것을 꼽는다.

시간이 지나며 노동자 소비에트들이 점차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부르주아와의 연정과 제국주의 전쟁의 지속을 지지했던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이 점차 신뢰를 잃었고, 노동자 소비에트 내에서 볼셰비키의 영향력이 상승했다. 노동자 소비에트의 급진화는 처음에는 더뎠으나, 나중에는 놀랄 정도로 급속히 진행됐다. ... 도시 소비에트들의 “볼셰비키화”를 일으킨 주요한 사회적, 조직적 기반은 2월혁명 이후 급격히 증가한 공장위원회였다.

8월과 10월 사이에 볼셰비키 당의 구호가 노동자계급 대중 사이에 급격히 확산한 것이 주요한 계기였다. ... 4월에 프롤레타리아는 “미치광이 레닌”에 대해 수군했으나, 이들은 점차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의 눈먼 정책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깨닫게 되었다. (1권 1부 1장 1절 (a))

당시 레닌은 1914년 이전으로 복귀하자는 ‘합병도 배상도 없는 평화’가 아니라, 독일에 서부 영토를 내주는 조건으로 전쟁에서 즉시 이탈할 것을 주장하며 ‘미치광이’로 불렸다. 게다가 그는 이를 실현하려면 소비에트가 거리투쟁의 지도부가 아니라 스스로를 ‘정부’로 선포해 국정을 직접 책임져야 하며, 전쟁을 종식한 후 경제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도시 노동자와 병사들은 임시정부에 ‘빵과 평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선출한 소비에트 ‘정부’의 정책으로 이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레닌은 자본가의 사보타주가 만연한 상황과 세계대전 이탈로 인한 국제금융과의 단절을 전제로, ‘노동자와 농민의 정부’인 소비에트가 국가 경제를 정치적으로 강력히 통제해야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⁸ 그는 공장위원회 운동이 제기한 경영진에 대한 ‘정치적’ 통제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공장위원회가 아닌 소비에트에 의한 ‘전국적 회계와 통제’의 확립을 강조했다. 또한, 소비에트가 토지를 국유화하고(즉 마을공동체의 점유를 부정하고) 경작권을 농민에게 배분함으로써, 농민을 국민경제와 다시 연결하고 도시 식량난을 해결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다만 제국의 군사적 확장과 관련된 군수산업 중심의 중공업의 비효율성 문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고, 이는 후일 신경제정책 시기의 논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레닌의 주장은 공장위원회 운동 속에서 점차 받아들여졌지만, 대중과 심지어 당내에서도 저항이 컸다. 베를렘은 당시 그런 ‘시류에

8 구체적 내용은 다음 책에 제시된 1917년 시기 레닌의 글들을 참고하라. V. I. 레닌 저, 백승욱 편, 『민중민주주의 경제론: 레닌의 노동자통제 및 국유화론 1』, 새길, 1990.

거스른' 레닌의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레닌은 이 [혁명적 방위론의] “광기”와 싸우며, 소수파인 당이 “대중과 함께해야” 한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다수의 전염병에 굴복”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1권 1부 1장 2절 (a))

조금 뒤의 일이지만, 소비에트 정부 수립 이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조약 체결에 반대한 볼셰비키 내 경향을, 베틀렘은 ‘좌익공산주의’(경제주의의 좌익적 형태)라고 평가한다. 이들은 조약이 제국주의 세력과의 타협이라며, 노동자 일각의 이익과 요구를 무시하고 부르주아에 양보했다고 비판했다.

1918년 3월 3일에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이 공식적으로 조인되었다. 하지만 협상이 시작된 이후의 몇 주는 당이 얼마나 깊이 분열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줬다. 이 분열은 기본적으로는, 세계혁명운동의 미래를 위해서는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유지가 사활적이라는 레닌의 입장에 동의한 이들과, 받아들일 수 없는 양보를 하고 생존하느니 프롤레타리아 권력이 사라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이들 간의 대립이었다. … 이 경향은 무엇보다도 “좌익공산주의자”들의 경향이었다. (1권 4부 2장 3절, 4절)

1917년으로 돌아오면, 레닌은 ‘혁명적 방위’를 주장하며 임시정부를 ‘비판적으로 지지’한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와 전러시아 소비에트를 계속 비판했고, 특히 ‘6월 대공세’를 제국주의 전쟁에 병사를 희생시키는 행위이자 군부의 부활 계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런데, 대공세 실패 이후 수도 대중의 여론은 급속히 바뀌었다.

6월과 7월 이후에 상황이 급변했다. 경험이 대중에게 새로운 교훈을 알려주었다. 노동자와 병사의 눈에, 전쟁 지속은 인민의 이익이 아니라 러시아 부르주아와 영국-프랑스 제국주의의 이익에 상응한다는 점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이들은 임시정부, 멘셰비키, 사회혁명당이 부르주아의 이익을 지탱하며 오직 볼셰비키만이 이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임시정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소비에트로 이전하며, 볼셰비키가 소비에트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대중에게 긴요해졌다. (1권 1부 1장 2절 (a))

여론의 급반전은 ‘7월 사태’로 드러났다. 페트로그라드 노동자·병사들이 봉기해 소비에트 지도부를 공격하고 볼셰비키에게 소비에트 장악을 요구했지만, 레닌은 이를 거부했다. 이는 ‘소비에트 권력’ 구호에 맞지 않고, 도시 인민의 미성숙한 봉기가 전체 혁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후 소비에트 지도부는 위기를 느껴 볼셰비키 체포를 명령하고, 임시정부에 군사력 복원을 요청한다. 임시정부는 군 재조직을 지시하며 코르닐로프 장군에게 페트로그라드 진압을 명령한다. 이에 레닌은 일시적으로 ‘소비에트 권력’ 구호를 철회하기에 이른다.

소부르주아적 국수주의 정당들의 소비에트 지배가 강화될 위험이 짙어지자, 레닌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를 철회하며, 소비에트가 “반혁명의 무화과 나뭇잎[조각·회화에서 치부를 가리는 데 쓰임]”으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는 4월부터 7월 초까지 가능했던, 소비에트의 평화로운 발전을 바라는 구호였다. … 이 구호는 더 이상 옳지 않다. 소비에트 권력의 주인이 [사회혁명당·멘셰비키를 통해 부르주아로] 바뀌고,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가 혁명을 완전히 배반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9월에 코르닐로프의 쿠데타가 패배하고 소비에트 내에 볼셰비키 대의원이 많아지면서, 레닌은 다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를 지지했다. (1권 1부 2장 3절 서론)

9월부터 페트로그라드, 모스크바, 서부전선 등 소비에트 선거에서 볼셰비키가 압승을 거두며 정치 지형이 재편됐다. 하지만 동부와 남부의 농촌에서는 장군들이 군대를 재편해 농민운동을 탄압할 위험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베를린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 도시와 농촌의 결합을 위해 임시정부를 타도하는 10월혁명이 필요했다고 본다.

3)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새로운 단계’로서 농민운동

베를린은 1917년 여름 시작된 농민의 토지 점유 운동을, 레닌을 따라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새로운 단계’로 규정한다. 이전 단계는 사회혁명당 다수파나 농민 소비에트처럼 전제정 타도와 임시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에 머물렀다. 그러나 마을 수준의 농민운동은 이와 다르게 전개됐다. 도심과 전선의 혼란으로 생긴 권력 공백 속에서 빈농들이 지주의 토지를 점유했고, 이어서 부농도 이에 가담하며 토지를 늘렸다.

이 운동을 ‘새로운 단계’라 규정한 이유는 과거 지주계급의 토지를 몰수했고, 임시정부의 전쟁 수행 능력을 타격했으며, 사회혁명당의 자체 요청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몰수한 토지를 사유화하고, 이를 방어하고자 마을공동체를 재건했다는 점에서 이는 ‘부르주아적’인 실천이었다. 또한, 이 운동은 마을 내에 고립되어 전쟁, 정치권력, 도시 식량난 같은 국가적 문제에는 무관심했다는 점에

서 '소부르주아적' 실천이기도 했다.

1917년 2월에서 10월 사이 ... 농민의 활동은 근본적으로 토지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지주, 국가, 성직자의 토지를 몰수하여 분배하는 것으로, 과거의 농민 투쟁들 - 국지적 봉기와 토지 점유 - 과 동일한 성격의 운동이었다. 하지만 5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와 같은 농민 대중의 혁명적 활동의 규모가 거대해졌다. 이는 사회혁명당의 통제를 벗어났고, 10월혁명으로 향하는 길을 닦았다.

1917년 2월에서 10월 사이 농민운동의 특징 중 하나는 권력 문제에 대한 무관심, 지역의 권력기구 수립에 대한 무관심이었다. 도시 프롤레타리아의 지원이나 지도가 없는, 이런 고립된 운동은 과거의 농민반란과 똑같이 패배할 운명이었다. ... 농민 대중의 행동이 왜 토지와 관련된 직접 행동에만 국한되었으며, 도시 프롤레타리아와 조직적인 연대를 지향하지 않았는가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 농촌의 오래된 구조, 전통적인 마을공동체 회의(일반적으로 중상층 농민이 이를 지배했다)의 존재는 마을 수준에서 소비에트 형성과 농민운동의 완전한 급진화를 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본주의의 발전이 (토지의 "공유"와 개별경작을 결합한) 농촌의 오랜 구조를 침식했음에도, 이 구조는 여전히 마을을 하나의 자족적이며 완결된 소세계로 만들었다.

(1권 1부 1장 1절 (b))

문제는 8월을 거치며 농촌에서 반혁명 군대가 조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치의식이 높아진 페트로그라드 인민은 코르닐로프의 진격을 저지했지만, 마을 단위로 고립된 농촌은 취약했다. 레닌은 경제난을 해결하려면 소비에트 정부 수립을 통한 도농 간 재연결이 필요하고,

농민운동이 공격당하면 도시 혁명도 위협받는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도시에서의 ‘소비에트 권력’ 지지 여론과 볼셰비키의 선거 승리, 그리고 반혁명 위협과 도농 연대 문제는 레닌과 볼셰비키가 10월혁명을 결심하게 한 배경이 된다. 레닌은 혁명 직전, 기존의 토지 국유화 정책을 철회하고, 농민의 토지 점유를 법적으로 인정하겠다고 약속하며 농민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

농민이 토지를 위한 투쟁에 뛰어든 것은 러시아혁명을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했다. 이는 농민과 부르주아 간의 연대가 사실상 무너졌음을 의미했다. 양자의 연대는 임시정부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고 부르주아에게 권력을 주었다. 이 연대가 무너지면서 부르주아와 혁명적 대중 간의 충돌이 불가피해졌고, 프롤레타리아와 볼셰비키가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긴요해졌다. 다가올 [제2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총회가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거나, 도시에서 대중운동이 더 발전하길 기다릴 여지는 없었다. 기다리는 것은 … 임시정부가 농민을 탄압하는 것을 허용하고, 나아가 여전히 임시정부에 충성하는 군인들이 페트로그라드에 집결해 공격을 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였다. … 볼셰비키는 망설여서는 안 되었다. (1권 1부 1장 2절 (b))

10월 25일 직전에 페트로그라드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에서 레닌이 했던 연설[에서] … 그는 농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토지소유 관계를 끝내는 법령으로 농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며, 농민은 자신을 구하는 방법이 노동자와의 연대에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1권 1부 1장 3절 (a))

도시의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농촌의 민주주의적 혁명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는 10월혁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고, 제헌의회 해산과 이후 내전, 신경제정책까지 이어지는 핵심 쟁점이었다. 베를린은 이 두 흐름의 결합을 위해 10월혁명이 필요했다고 보며, 이러한 평가는 곧 전에 정치적 대의가 있었다는 그의 해석으로 이어진다. 이는 다음 글에서 확인할 것이다.

4) 소결: 10월혁명의 성격 평가

베를린은 2월혁명과 10월혁명은 성격이 달랐다고 평가한다.

모든 혁명은 대중의 결의 있는 행동과 영웅주의(heroism)에 기인한다. 1917년 2월혁명도 그런 사례였다. 페트로그라드, 모스크바 및 다른 도시들의 노동자계급은 결정적인 역할을 행하였다. 하지만 이 혁명은 프롤레타리아의 통치를 수립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10월혁명은 이전의 모든 혁명과 달랐다. 10월혁명은 프롤레타리아적 이념의 인도에 따라서 수행되었다. (1권 1부 2장 서론)

도시와 군대의 여론이 변화하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볼셰비키 노선을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핵심이었다. 이로써 페트로그라드에서의 10월혁명은 무혈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2월부터 10월 사이, 레닌의 주장대로 소비에트를 단순한 투쟁 지도부가 아닌 ‘정부’로 세우고, 패전을 통해 전쟁을 즉각 끝내는 데 동의하는 ‘프롤레타리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10월에 정치적 전환으로 이어진 것이다.

10월 25일의 일은 [이후의 내전과 같은] 인민전쟁(people's war)의 정점도, [이전의 2월혁명과 같은] 반역(rebellion)도 아니었다. 이는 대중이 지지하는 봉기였으며, 사전에 구상된 계획에 따라 무장한 군대가 이를 수행했다. 이 무장한 군대는 노동자계급과 병단에서 차출되었으며, 볼셰비키 당이 지시한 특정 목표만을 정확하게 달성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1권 1부 1장 2절 (b))

당연히도, 관공서의 점령이나 장관의 체포로 부르주아의 통치를 프롤레타리아의 통치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사적 변화인 그런 대체를 가능하게 한 것은, 10월혁명이 드러내어 보여준, 새로운 계급 간 세력관계였다. 또한, 이로써 10월혁명은 그러한 세력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1권 1부 2장 서론)

베를린은 이런 이데올로기·정치관계의 변화에서 레닌과 볼셰비키 당의 이데올로기 투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짚는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볼셰비키 당이 행했던 지도적 역할이 단지 ‘역사의 운’의 [세계대전]이 유발한 극단적 상황의] 결과였던 것은 아니었다. ... 볼셰비키 당의 강제와 제도적 역할은 세력의 사용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이론적 분석을 수행하고, 이 분석을 정치노선, 조치, 구호로 옮겨, 대중의 가장 전투적인 부분과 밀접한 관계를 확립했던 능력에서 비롯했다. (1권 1부 2장 4절 서론)

앞서 살펴본 1917년 2월에서 10월 사이 볼셰비키의 정책은, 러시아 제국의 경제구조와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레닌의 이론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었다. 레닌은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러시아 자본

주의의 특수한 결합인 군사적·봉건적 제국주의 탓에 러시아제국이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는 평화협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자본주의적 경제관계 자체의 변혁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당장은 상술한 우선 과제가 제시된 것이다.



[그림 3] 1917년 2월 혁명(위)과 10월 혁명(아래)

2월 혁명이 '열정적' 대중봉기였던 반면, 10월 혁명은 볼셰비키가 조직한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적 위대가 밤중에 겨울궁전을 점령하고 임시정부를 폐쇄한 '조용한' 사건이었다. 아래 사진은 1920년에 혁명 3주년을 기념하여 10월 혁명을 재현한 선전극 '겨울궁전 습격'(The Storming of the Winter Palace)을 찍은 것이다. (출처: 위키피디아)

정치혁명으로서 10월혁명의 즉각적 의의는, 도시에서 군사력이 이미 소비에트로 넘어간 상황에서 임시정부가 농촌의 반혁명 군대와 연계하려는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이중혁명을 방어한 데 있었다. 나아가 세계대전에서 이탈함으로써 경제난 수습과 이후 경제관계의 근본적 변혁 가능성도 열었다. 베를린은 이러한 점에서 10월혁명의 의의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지속하고,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를 수행하며,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떼기 위해, 스스로를 지배계급으로 형성할 가능성을 열었다. (1권 1부 2장 서론)

4. 10월혁명으로 만들어진 사회관계, 특히 정치관계의 특징

베를린은 10월혁명을 통해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고 전쟁에서도 이탈했음에도, 프롤레타리아는 혁명을 지속하며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결합이 10월 이후 '새로운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썼다.

러시아혁명의 특수성은 두 가지 혁명 과정 즉 프롤레타리아적 혁명과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혁명의 '결합'에서 기인했다. 10월 이후에도 이 '결합'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대신 전혀 새로운 성격을 갖게 되었다. (1권 1부 1장 3절 서론)

[10월혁명으로] 혁명이 새로운 단계 즉 프롤레타리아적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이 혁명의 민주주의적 과제들이 모두 달성되었다는 뜻

은 아니다. 반대로, 당시의 계급관계에서는 민주주의적 과제는 오직 프롤레타리아적 혁명의 고조와 승리로 연결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었다. (1권 1부 1장 3절 (a))

1권 1부에 제시된 이 문장은 상당한 의미를 함축하며, 앞으로 연재에서 계속 그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10월혁명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로 베를린의 쾰른을 살펴볼 것이다. 이 문제들은 10월 이후 사회관계 변화와 계급투쟁의 조건을 이룬다.

1) 정치관계: '소비에트 기구의 불안정한 작동' 문제

베를린은 10월혁명 이후 핵심 문제가 "소비에트 기구의 생명력", "소비에트의 불충분한 작동"이었다고 지적한다(1권 1부 2장 2절 (b)). 10월혁명을 가능케 한 이중적 운동 속에서, 농민 소비에트와 도시 노동자 소비에트는 각각 한계를 안고 있었다. 농민 소비에트는 실제 농민과 유리된 사회혁명당 중심의 조직으로, 전러시아 소비에트 총회에서 볼셰비키가 다수인 도시 소비에트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혁명 이후 볼셰비키와 소비에트 정부는 농민을 선거나 행정에 참여시키려 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마을, 읍, 군 등의) 소비에트 기구(...)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의 필수 부분이지만,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독립적인 정치활동을 발전시키기 쉬운 수많은 농민이 이를 만들 수도 있었다. 그리하여 그 소비에트 기구들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약화하는 행동 노선을 취할 위험성이 존재했다. (1권 1부 2장 2절 (b))

10월혁명으로 농민이 점유한 토지가 법적으로 인정되며 마을공동체의 권력이 강화됐지만, 이는 여전히 고립되었고, 소비에트 정부의 통제력은 대도시·서부·지방 중심지에 제한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농촌과의 연결에서 임시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이런 도시와 농촌의 이중성은 의회 격인 전러시아 소비에트 총회와 그 상설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의 정당성과 권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규정지었다.

10월 직후에 [전러시아 소비에트에 속한] 소비에트 기구, 우선은 [10월혁명 직후의] 제2차 소비에트 총회가 선출한 중앙기구들이 점하게 된 지위는, 혁명운동과 봉기에서 볼셰비키 당이 수행했던 지도적 역할의 결과였다. ... [그러나] 많은 소비에트 기구를 여전히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가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 기구들은 볼셰비키 당이 이끈 노동자 대중이 임시정부를 전복한 사실을 승인했던 제2차 총회에 참석하길 거부했다. 10월혁명의 몇 년 뒤 스탈린이 말했던 것처럼, “소비에트 총회는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로부터 권력을 그저 넘겨받았다.” 즉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의 결정을 주도했던 볼셰비키 당으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았다.

혁명의 동학, 그리고 노동자계급 대중을 이끌었던 혁명적 진취성은, 소비에트가 아니라 볼셰비키 당에 유효한 권력을 부여했다. 만약 제2차 총회를 비롯한 소비에트 총회들로부터 나온 기구들이 실제로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이는 볼셰비키 당의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1권 1부 2장 3절 서론)

1917년 10월혁명 당시, 페트로그라드를 중심으로 한 도시 소비에트는 가장 활발한 정치 주체였다. 급진화된 도시와 전선의 노동자·병사들

은 소비에트 선거에 적극 참여했고, 소비에트 권력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며 볼셰비키를 지지했으며, 많은 이들이 볼셰비키에 입당했다. 1917년 9월 이래 볼셰비키가 다수인 도시 소비에트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베를린은 이들이 사회혁명당 중심의 다른 소비에트 기구들과 타협함으로써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다고 본다. 즉 전러시아 소비에트 총회와 이로부터 나온 소비에트 기구들의 권위는 도시 소비에트와 볼셰비키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쟁점은 제헌의회 해산이었다. 제헌의회 선거는 본래 임시정부가 계획했으나, 10월혁명 이후 소비에트의 승인 아래 진행됐다. 이는 과거 제국의회 선거와 달리, 급진적으로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를 채택했다. 도시와 서부에서는 볼셰비키가 우세했지만, 인구가 많은 농촌에서 사회혁명당이 승리하며 다수당이 됐다. 그러나 제헌의회가 소비에트 정부를 부정하고 전쟁 지속을 선언하자, 페트로그라드 대중의 반발로 해산됐다. 연구자들은 농민의 사회혁명당 지지가 적극적이었다기보다 '인지도'에 따른 것이었고, 소비에트 정부가 토지 점유를 법적으로 승인한 탓에 제헌의회 해산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⁹ 하지만 농촌의 정치적 무관심과 고립은 소비에트 정부에게도 장애물로 작동했다.

프롤레타리아적 정치권력과 이것의 지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농민 인구의 우세 사이의 모순이 낳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효과는, 선거 결과가 아니라 바로 소비에트의 불충분한 작동이었다. (1권 1부 2장 2절 (b))

9 가령 다음을 보라. 쉘라 피츠패트릭, 『러시아 혁명 1917-1938』(국역: 사계절, 2017), 128쪽.



[그림 4] 10월 혁명부터 1918년 여름 내전 발발까지 소비에트 정부가 통치한 영역
 제국 서부의 주요 도시들에서 일어난 혁명을 토대로 세워진 소비에트 정부의 통치 영역은 제국 영토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10월 혁명 직후 통치 영역을 기준으로, (현재 우크라이나에 속하는) 남쪽의 농촌 지역과 동쪽 볼가강 유역의 농촌 지역에서 반혁명군(백군)이 형성되어, 1918년 여름 소비에트 정부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며 내전이 시작된다. 한편, 우랄산맥 너머의 동쪽 지역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혁명, 내전 발발까지의 정치적 혼란과 다소 무관하게 있었는데, 내전에서 백군이 점점 동쪽으로 밀려나며 점차 전란의 화마와 정치적 격변을 겪게 된다.(출처: 위키피디아)

두 번째 쟁점은 소비에트의 선거제도였다. 소비에트는 ‘노동자와 농민의 정부’를 표방하며 지주와 부르주아를 배제했지만, 고대 그리스의 추천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대의제를 채택했으며, 심지어 평등선거가 아닌 차등선거를 채택했다.

권력기구의 작동 수준에서 살펴보면, (프롤레타리아의 지도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수많은 농민의 존재로 인해 10월혁명 직후 특정한 조치와 결의들이 나왔다. 이 중 형식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에트의] 농민 대의원 비율을 125,000명의 주민당 1명, 도시민(townsfolk) 대의원 비율을 25,000명의 유권자당 1명으로 정한 것이었다. 레닌의 인식처럼, 프롤레타리아의 조직이 농민의 조직보다 더 빠르게 진보하였다는 사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이점(advantage)을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두 비율의 차이를 정당화했다. (1권 1부 2장 2절 (b))

세 번째 쟁점은 ‘전러시아 소비에트 총회’에서 파생된 기구 간의 권력분립 문제였다. 의회 격인 총회는 상설기구인 ‘전러시아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를 선출했고, 그 산하에 행정부 역할을 하는 ‘인민위원회’가 설치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위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보다, 대다수 볼셰비키로 구성된 인민위원회가 더 강한 실질적 권력을 행사했다.

정부권력은 인민위원회에 집중되었다. 인민위원회에서 좌파 사회혁명당이 없어진 뒤로, 이는 곧 정부권력이 볼셰비키 당에 (나아가 당 중앙위원회, 궁극적으로는 당 정치국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했다. 당은 인민위원회와 비슷하게, 혹은 더 자주, 중요한 결정들을 구상했다. 인민위원회보다 앞서서 말이다.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의 유효한 통치력이 박탈당하고 인민위원회와 볼셰비키 당 중앙위원회가 우위에 서게 된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과정은 최고 정치권력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것이 소비에트 기구들에서 나온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가 아니라, 당의 편에 있게 하였다. (1권 1부 2장 3절 (c))

한편, 베를린은 소비에트 기구의 '관료제적 왜곡'에 대해서도 1권 1부에서 간략히 언급한다. 이는 10월혁명 이후 특히 내전기를 거치며 본격화되는 문제로, 다음 글에서 다루겠다.

2) 사회관계: 광범위한 '비프롤레타리아적 인민세력'의 존재

소비에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치적 문제는 사회관계로부터 설명된다. 베를린은 10월혁명 이후 계급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광범위한 '비프롤레타리아적 인민세력'의 존재를 지목한다.

소비에트 국가의 구체적 실재는 필연적으로, 농민 인구나 프롤레타리아 사이 관계의 성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자는 농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결정적 사회세력(determining social force)이었으며, 후자는 당을 통해 작동하는, 지도적 사회세력(leading social force)이었다. 이 문제는 이중적이었다. 하나는 (주로 농민인) 비프롤레타리아적 인민세력(non-proletarian popular force)의 광범위한 존재와 프롤레타리아적 세력 사이의 모순이며, 다른 하나는 통치권력의 민주주의적 성격 즉 그 [첫 번째] 모순을 올바르게 다루는 문제이다.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는 다음이 필요조건이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는 프롤레타리아와 이들의 당이 이끌

어야 했지만, 광범위한 인민대중에 기초해야 했다. 이들은 프롤레타리아가 아니었지만,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기구 - 무엇보다 우선,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자치기구인 소비에트 -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그것도 중요한 위치를 점해야 했다. (1권 1부 2장 2절 (b))

베를린은 1917년 도시와 전선에서처럼, 이론과 정책으로 농민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해법이라 봤다.

농민과의 관계에서 당의 지도활동이 취약했던 것은 농민의 혁명적 활동[토지점유 운동]이 취했던 독립적 형태와 이 활동이 이론 성공과 결부되어 있었다. 실제로는, 그 활동이 성공하고 강화된 것은 노동자계급과 볼셰비키 당이 도시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여 농민의 혁명적 운동을 보호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농민의 눈에는 도시의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농촌의 민주주의 혁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았다. ... 그렇기에,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농민 대중에게 자신들의 근본 이익이 프롤레타리아의 이익과 일치한다는 점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었다. (1권 1부 2장 2절 (b))

다만 ‘비프롤레타리아적 인민세력’ 문제는 농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도시 노동자 나아가 2월에서 10월 사이 형성된 프롤레타리아조차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볼셰비키의 지도적 역할이 가졌던 두 번째 한계는, 심지어 노동자들 사이에서조차 당의 이데올로기적 지도 역할이 주로는 정치적 측면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노동자계급 대중의 핵심 부분에 널리 수

용되었던 것은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근본 이데올로기 - 이는 사회주의로의 길을 밝히고,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준다 - 이 아니라, 레닌의 표현에 따르면, “당면 과제”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한계와 당면한 혁명의 과제들 탓에, 볼셰비키 당은 소비에트 권력이 확립되었음에도 곧바로 사회주의적 변혁을 시도할 수 없었다. 1917년과 1918년 초까지, 당은 (몇 가지를 제외하면) 사회주의적 목표들을 급격히 달성하려 하는 것은 유토피아적이며 극히 위험하다고, 올바르게 생각하였다. (1권 1부 2장 1절)

3) 소결: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결합’의 ‘새로운 성격’

베를린은 10월혁명을 도시와 농촌의 두 혁명을 결합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그 결합이 이후 ‘새로운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본다. 그는 1권 1부에서 10월 이후 혁명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추상적으로 제시하는데, 이 글의 4장 서두에서 인용된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 글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질 핵심 주제다.

1권 1부에서는 특히 10월혁명 직후, ‘비프롤레타리아적 인민세력’의 광범위한 존재와 연관된 ‘소비에트의 불완전한 작동’ 문제를 지적한 점이 중요하다. 이 문제는 이후 사회관계 변화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했고, 레닌은 이를 고찰하며 신경제정책과 문화혁명의 노선을 발전시키게 된다.

5. 결론

지금까지 『소련에서의 계급투쟁』 1권 1부를 따라 1917년 10월혁명까지의 사회관계 변화를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살펴봤다. 제국 시절의 경제구조는 여전히 잔존했으며, 농촌에서는 마을공동체 내 불평등과 토지 갈등이 격화되다 세계대전 이후 빈농 중심의 토지 점유와 공동체 부활로 이어졌고, 이는 도시-농촌 간 단절과 식량난을 초래했다. 경공업은 통화가치 하락으로, 중공업은 독일군 점령으로 위기에 처했다. 전시에 정부가 국채와 화폐발행으로 군수부문은 유지했지만, 2월혁명과 6월 대공세 실패 이후 산업 전반이 침체됐다.

2월혁명 이후 최대의 문제는 어떻게 경제난과 전쟁을 풀 것인가였다. 소비에트 지도부를 구성했던 멘셰비키는 노동운동의 기반 유지를 위해 ‘혁명적 방위론’을 내세워 사실상 전쟁을 지지했고, 소비에트를 투쟁 지도부로 제한했다. 반면 볼셰비키는 즉각적 전쟁 이탈과 소비에트 ‘정부’ 수립을 통해 경제난을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제금융과의 단절을 감수하고 소비에트 정부가 노동자·농민과 연결되며 산업에서의 ‘노동자 통제’ 및 도농 관계 복원을 이루자고 했다.

이러한 볼셰비키 노선은 도시의 공장위원회 운동에서 점차 수용되었고, 6월 대공세 실패 이후 여론이 급속히 전환되며 9월부터 대도시 소비에트 선거에서 볼셰비키가 승리했다. 반면 농촌에서는 반혁명 군대가 조직됐다. 볼셰비키는 이를 차단하고 농민의 토지 점유를 인정하기 위해 10월혁명을 감행했다.

베를린은 2월혁명은 자생적이었지만, 10월혁명은 프롤레타리아적 이념에 기반한 정치혁명이었다고 평가했다. 볼셰비키 정책을 받아들인

도시 노동자들 가운데 (혁명적 실천을 수행한다는 의미의) ‘프롤레타리아’가 형성되어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되었으나, 여전히 러시아 전역에서는 비프롤레타리아 인민세력이 다수를 이뤘다. 물론 도시 프롤레타리아에 계도 한계가 있었다. 이런 사회관계 상의 특징은 정치관계에서 신생 소비에트 권력의 특징을 규정했다.

10월혁명은 시작일 뿐이었다. 베틀렘은 이를 프롤레타리아가 지배 계급으로 형성되는 ‘가능성’을 얻은 사건으로 보며, 이 가능성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기존 자본주의적 경제관계에 의해 소비에트 권력이 무력화되거나 혹은 부르주아적 성격의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볼셰비키는 10월혁명의 지도를 넘어, 프롤레타리아적 계급투쟁의 전진을 위해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과제를 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상을 제시해야 했다.

다음 글부터 이 주제를 다룰 것이다. 다음 글의 대상 시기는 1917년 10월부터 1923년 신경제정책의 본격 개시까지다. 이때 소련은 세계 대전에서 이탈해 경제를 재건하려는 도중에 농촌의 반혁명 위협이 실체화되며 내전이 벌어진다. 이에 극히 복잡한 사회관계 변화가 일어나며, 그 결과는 1917년 혁명 때의 그것과 사뭇 달랐다.

이 시기 계급관계에서는 공장 내부, 농촌 내부, 그리고 공장과 농촌 간의 관계 모두에서 ‘비프롤레타리아적 사회세력’ 문제가 드러나는 동시에, 1917년에 형성된 프롤레타리아의 ‘부르주아화’ 문제도 함께 나타난다. 베틀렘은 이를 자본주의적 경제관계와 밀접히 연관지어 분석한다. 이러한 경제·계급관계의 문제는 정치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앞서 언급한 ‘소비에트의 불완전한 작동’ 위에 ‘관료제적 왜곡’이 더해진다. 그러나 베틀렘은 당시 ‘관료제’라 지칭된 현상이 사실상 자본주의적 경제구

조와 계급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런 변화 속에서 이데올로기 관계에서도, 볼셰비키 당이 '부르주아적 노동당'으로 전략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볼셰비키 당은 프롤레타리아적 이념을 조직적으로 전파한 집단이었으며, 따라서 러시아 프롤레타리아가 스스로를 지배계급으로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볼셰비키 당과 프롤레타리아 중 가장 전투적인 인자들 사이에 확립된 연결로 인해, 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제도로서 봉사할 수 있었다. 이 역할은 당이 프롤레타리아와의 연결을 지속하며, 프롤레타리아적 이념과 실천의 전달자이길 계속하는 한 유지될 것이다. 둘 중 후자의 조건이 항상 더 중요하다. 당이 노동자계급 내에서 외연을 더 넓히더라도, 프롤레타리아적 이념과 실천의 고수를 포기하고 “부르주아적 노동당”으로 전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1권 1부 2장 서론)

이런 사회관계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했는가에 천착하며, 베틀렘이 제기한 것이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결합’이 ‘새로운 성격’을 띠게 됐다는 주장이다. 베틀렘은 특히 레닌이 말년에 발전시킨 신경제정책과 문화혁명의 노선을 정리했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의 결합이 지닌 새로운 성격이 무엇인지 밝힌다.

그전까지 레닌과 볼셰비키는 두 혁명의 결합을, 주로는 10월혁명의 연장선에서 내전 수행을 통해 ‘비프롤레타리아적 인민세력’을 보호하고 소비에트를 전국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소비에트 주도의 경제통제를 발전시키고 이에 ‘비프롤레타리아적 인민세력’을 끌어들이는 구상 속에서 이해했다. 베틀렘은 이것이 신경제정책을 주로는 ‘경제적’ 필요에서

제기한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내전기의 복잡한 사회관계 변화와 상술한 문제들, 경제주의의 ‘좌익적’ 경향에 이어 ‘우익적’ 경향과 논쟁을 거치며, 레닌은 1922~23년에 신경제정책의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는 구상을 제기한다. 즉 국가주도의 계획경제가 아닌 민간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경로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다음 글에서 다룰 1권 2~4부의 내전기 사회관계 분석을 거쳐야 한다. ●